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165-0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Rural Proofing on 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등 업무위탁용역: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마 상 진 연구 위원
공동연구원: 김 정 섭 부 연구 위원
권 인 혜 연구 원

요 약

-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방과후학교, 여성 경제활동 확대)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방과후학교 정책]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보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학업성취도는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낮았다. 학력격차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심화되었다.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감소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있고,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목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 사교육비 절감, 학업성취도 향상 등이었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학교급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았고, 지역요인 이외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결정하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학생의 과반 수준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와의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는 농어촌 학생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 학생보다 낮았는데, 방과후학교의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농어촌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 제약, ② 부족한 민간부문의 인적 자원과 교사들의 업무 가중, ③ 소규모 서비스 수혜자로 인한 우수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①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통한 농어촌 학생 통학수단 지원, ②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요원의 확보, ③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④ 농어촌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결과: 도시 여성이나 같은 농어촌의 남성들에 비해 농어촌 여성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력도 낮은 상황이었다. 주된 경제활동분야는 농림어업으로, 무급가족노동의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참여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였다.
- 정책내용 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여성 일반을 대상 정책(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그리고 농어촌 여성에 특화된 정책(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 농촌여성일자리사업)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 기관(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여성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과 각종 고용정보 전산망 등을 검토하고, 이들 정책의 구체적 성과목표가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 등임을 확인하였다.
- 정책의 도농 간 성과차이 분석: 경제활동참여와 고용률 분석 결과,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비율과 고용률이 도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요인에 따른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의 도농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관련 정책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금수준 분석 결과,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았는데, 지역요인 외에 임금수준과 관련된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지역요인(도시, 농어촌)이 여성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역요인으로 인해 임금수준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 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동일 조건으로 추진 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주요 특성이 무엇인지 농어촌 인 지적

- 관점에서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①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②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현행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과제로 ①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제공, ② 새일센터 미지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③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주체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ural Proofing on 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criminative effec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of major central government policies(After School Policy and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

For the purpose, this study employed following 5 phases: related statistics and research reviewing; policy analysis and performance target identifying; performance gap analyzing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problem finding in terms of rural perspective(low accessibility, low population density, small and isolated businesses, agriculture-based economic activity, lack of public resource, human and social capital shortage); and improvement measures developing.

This study suggested three measures for the after school policy of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 bus integration by education district; best private instructors supporting system; and rural after school intermediary organization reinforcement.

Also, following three measures for the women economic activity policy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of Family were put forward: rural economy specific employment opportunities identifying and related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women reemployment support center undesignated rural area complementary support; and stable intermediary organization system for rural women job creation project.

Researchers: Ma Sang-Jin; Kim Jeong-Seop, Kwon In-Hye

E-mail address: msj@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4
제1부 방과후학교 정책	
제2장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11
1. 농어촌 학교·학생 현황	11
2. 농어촌의 교육환경	13
3. 도농 간 교육성과 격차	17
4. 방과후학교와 교육격차 해소	24
5.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26
제3장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27
1. 추진배경	27
2. 비전 및 목표	30
3. 추진주체와 체제	31
4. 투입예산	32
5. 주요 사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34

제4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43
1. 분석개요	43
2.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실적	45
3.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48
4. 분석 요약	61
제5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63
1.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63
2. 정책 개선 과제	71

제2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6장 농어촌 여성의 특성과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87
1. 농어촌 여성의 일반 특성	87
2.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90
3.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93
4. 농어촌 여성의 특성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96
제7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99
1. 여성일반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99
2. 여성일반을 위한 세부사업: 새로일하기센터사업	106
3.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113
4. 농어촌여성을 위한 세부사업: 농촌여성일자리사업	118
5.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기관과 서비스	122

제8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139
1. 분석개요	139
2.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주요 정책의 운영 실적	140
3.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146
4. 분석 요약	158
제9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61
1. 농어촌 인지기적 관점의 문제점	161
2. 정책 개선과제	166
제10장 결론: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75
부록 1.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개요	179
부록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현황	183
부록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184
부록 4. 새일센터별 취업 현황	187
참고 문헌	189

표 차 례

제2장

표 2-1. 지역규모별 학교수 변화	12
표 2-2. 지역규모별 학생수 감소	13
표 2-3.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소규모학교 및 과소·복식 학급수 ..	14
표 2-4.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학급당 학생수(2010년)	14
표 2-5. 농어촌 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15
표 2-6. 농어촌 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타 지역 거주 비율	16
표 2-7. 농어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17
표 2-8.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 및 비율	18
표 2-9. 도농 간 학업성취도 차이	19
표 2-10. 농어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23

제3장

표 3-1.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추진과정	29
표 3-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32
표 3-3. 방과후학교 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33
표 3-4. 대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 및 멘티 현황	38

제4장

표 4-1.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 및 학생	45
표 4-2. 방과후학교 1인당 수강 강좌수 및 수강료	46
표 4-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류	46
표 4-4. 방과후학교 토요일업일 운영, 방학기간 운영 비율	47
표 4-5.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	47

표 4-6. 학교급·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49
표 4-7. 주요 부모 특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50
표 4-8. 가구소득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50
표 4-9.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로짓분석 결과	52
표 4-10. 학교급·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53
표 4-11. 학부모특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54
표 4-12.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른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55
표 4-13. 가구소득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56
표 4-14. 사교육비(자연로그)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57
표 4-15. 주요 관련변인별 학업성취점수(Tscore)	59
표 4-16.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결과	60

제5장

표 5-1. 지역유형별 학생(12세 이상)들의 통학수단 현황	65
표 5-2.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시간당 강사료	69
표 5-3. 공주시의 방과후학교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79

제6장

표 6-1. 지역유형별 여성 인구 변화	88
표 6-2. 지역유형별 성별 학력 현황	90
표 6-3.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분야	91
표 6-4.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	92

제7장

표 7-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전략별 추진 과제	102
표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105
표 7-3. 새일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	110
표 7-4.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111
표 7-5.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11-'15)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	114

표 7-6. 여성농어업인 경제활동 관련 과제의 담당 주체	116
표 7-7.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시범사업 선정현황	119
표 7-8. 농촌여성일자리 시범사업별 지원금액	120
표 7-9. 고용지원센터 주요 업무	125
표 7-10. 행정구역 내 센터 소재 여부에 따른 지자체별 고용지원센터 현황 ...	127
표 7-11. 지역유형별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	128
표 7-12.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128
표 7-13. 여성고용지원센터 현황	130
표 7-14.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131
표 7-15.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133
표 7-16. 여성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134
표 7-17. 위민넷의 주요 서비스	135
표 7-18. 일모아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136
표 7-19. 기타 고용 관련 전산망 현황	137

제8장

표 8-1. 지역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인구 평균	141
표 8-2. 새일센터 취업자의 학력·고용상태·직종 현황	144
표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현황	145
표 8-4.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차이	147
표 8-5.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비교(2006년, 2010년) ...	148
표 8-6.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150
표 8-7. 성별·지역별 고용률 변화 차이	151
표 8-8.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고용률 비교(2006년, 2010년) ...	152
표 8-9. 고용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154
표 8-10. 성별·지역별 월평균 임금수준 차이	155
표 8-11.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2006년, 2009년) ...	156
표 8-12. 임금수준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158

제9장

표 9-1. 지역유형별 일자리 관련 기관 수 162
표 9-2.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 164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절차 4
 그림 1-2.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 6

제2장

- 그림 2-1. 도농 간 교육격차 평균 효과 크기 20
 그림 2-2.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의 개념 모형 22

제3장

- 그림 3-1.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 30
 그림 3-2. 방과후학교의 주체와 운영방식 31
 그림 3-3.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학급 수 변화('07-'10) 36

제5장

- 그림 5-1. 초·중학교 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부문 64
 그림 5-2. 방과후학교 운영 민간위탁 비율 66
 그림 5-3. 대학생 멘토 확보 학교 현황 67
 그림 5-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비중 68
 그림 5-5.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 81
 그림 5-6. 교사들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5점 만점) 82

제6장

- 그림 6-1. 여성 성인인구(15세 이상)의 도농 간 비중 88
 그림 6-2. 전체인구·여성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화 89

그림 6-3. 여성의 연중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92

제7장

그림 7-1.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체계 100
 그림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5대 핵심전략 102
 그림 7-3. 새일센터 사업 추진체계 109
 그림 7-4. 새일센터 주요 프로그램 111
 그림 7-5.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추진체계 121
 그림 7-6. 민·관 일자리 중개기관 현황 123
 그림 7-7.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124

제8장

그림 8-1.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 분석지표 140
 그림 8-2. 새일센터 이용자 연령 분포 143
 그림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참여자 학력별 임금수준 146

제9장

그림 9-1. 30·40·5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163
 그림 9-2. 농가의 고용 노동력 필요 정도 166
 그림 9-3.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 .. 167
 그림 9-4. 경상북도 농산어촌 인력제공시스템 일손 168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문제에 특별히 주목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 조정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94년 ‘농어촌발전위원회’의 출범이라 할 수 있다.
 -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과정에서 표출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여, 농정 담당 정부 부처의 수준을 넘어 조직된 최초의 정부 논의기구이다.
 - ‘농어촌구조개선자금(42조 원)’과 ‘농어촌특별세(15조 원)’의 재원을 토대로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외에도 농어민 복지, 농어촌의 교육·의료, 농어촌 생활여건 등을 주제로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하였다.
- 농어촌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으로 약칭)”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2004년 3월 공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으로 약

- 칭)”을 수립하였다. 제1차 ‘삶의 질 계획’은 농어촌 문제에 대응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관하에 농어촌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조율하여 추진하는 정부 부처 협의체 제도가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1차 ‘삶의 질 계획’을 시행한 후, 그 평가의 결과로 ‘농어촌 영향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실무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중앙정부 부처들의 정책 사업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박대식·최경환·박주영, 2009).
 - 여러 정부 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관점도 중복 사업 제거, 신규 사업 발굴 등 종래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수준이었지, ‘정책 사업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김정섭·이규천·박대식, 2010).
 -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제2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천명하였다(기획재정부 등, 2009).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는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하게 하는 일련의 절차이다(기획재정부 등, 2009).
- 농어촌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이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의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가 전제하는 것은 ‘농어촌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농어촌 주민에게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관점은 영국의 ‘Rural Proofing’ 제도로부터 얻은 것이다. Rural Proofing 제도는 영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실행할 때, 다음과 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농어촌 지역이 처한 특별한 여건이나 요구(needs) 때문에 정책이 농어촌 지역에 유의미한 수준의 차별적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 차별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평가한다.
 - 농어촌의 여건에 맞도록 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삶의 질 계획’에 의거하여 마련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방안(평가 지침, 전문평가 대상 과제 등)을 2011년 6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였고(’11.6.2.), 지난 6월 29일에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시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어촌 영향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된다.
 - ① 자체 평가: 정부 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여 지침에 따라 직접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② 전문 평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2011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운영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새로일하기센터사업 및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대상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 계획’에서는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지역의 사회자본 등 6가지 항목으로 밝히고 있다.¹

1 농어촌 영향평가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근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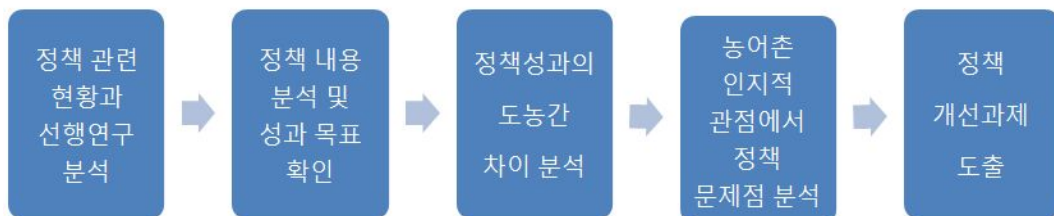
2.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평가 대상 정책1: 방과후학교 정책(교육과학기술부)
 - 평가 대상 정책2: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여성가족부)

3. 연구 방법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2개 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절차



3.1.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는 먼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 출발하였다.
- 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현실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후 정책 분석을 위한 기본 틀과 문제 개선 방안 도출의 출발점을 점검하였다.

3.2. 정책의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문헌 조사 및 정책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형성의 배경과 과정, 정책의 비전과 목적, 정책 투입요소나 세부 사업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과 이들 종합계획 하에 추진되는 구체적 사업인 ‘새로일하기센터사업’,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 도농 간 성과의 비교 지표로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 등이 도출되었다.

그림 1-2.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

평가대상 정책	방과후학교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해당 사업	· 방과후학교 사업(교과부)	· 새로일하기센터사업(여가부)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여가부)
도농 간 성과비교 지표	· 방과후학교 참여율 · 사교육비 · 학업성취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 여성 고용률 · 임금수준

3.3.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해당 정책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지표와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자료를 획득하여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한다.
-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방과후 온라인조사 시스템에 의한 실태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10), 한국교육중단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5, 2006, 2007, 2008), 사교육비 실태조사(통계청, 2007, 2010) 등이 사용되었다.
-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0),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 등을 활용하였다.

3.4.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해당 정책이 도농 간 균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에 좀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면담과 협의회를 통해 도출하였다.

-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경제활동인력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고려하여 도농 간 정책 성과 차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5. 정책 개선과제 도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마지막 과정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더불어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 지역 사례 분석: 경상북도 영양·칠곡·봉화 지역, 충청남도 공주·청원 지역
 -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12회 실시
- ※ 구성: 정책담당자(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관련 연구자(민간 연구소, 대학 교수), 현장실무자
- 4월 15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 5월 6일(여성경제활동확대)
 - 5월 18일(여성경제활동확대)
 - 7월 20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 10월 11일(방과후학교)
 - 11월 1일(방과후학교)
 - 11월 8일(여성경제활동확대)
 - 11월 11일(방과후학교)
 - 11월 17일(여성경제활동확대)
 - 11월 22일(방과후학교)
 - 12월 6일(방과후학교, 여성경제활동확대)
 - 12월 16일(방과후학교)

제1부

방과후학교 정책

제 2 장

농어촌 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1. 농어촌 학교·학생 현황

1.1. 학교수 감소

- 2000년 이후 전체 학교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농어촌 학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전체 학교수가 2000년에 10,105개였는데, 2010년에는 11,237개로 늘어났지만 농어촌 학교수는 동일기간 4,589개에서 4,489개로 줄었다<표 2-1>.
 - 이에 따라 2000년에 농어촌 학교(읍·면지역, 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의 45.4%였는데,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2010년에는 39.9%로 줄어들었다.
 - 농어촌 지역을 좀 더 구분하여 보면, 농어촌 학교 중에서도 주로 읍지역보다는 면지역, 도서벽지 지역 중심으로 학교가 줄어들었고, 학교급별로는 농어촌의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수가 줄어 들었다(마상진, 2010).

표 2-1. 지역규모별 학교수 변화

단위: 개교

구분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0	대도시	1,363(8)	852	673	2,888 (28.6%)
	중소도시	1,213(12)	641	624	2,628 (26.0%)
	읍면지역	2,215(197)	1,060(32)	590	3,865 (38.2%)
	도서벽지	476(447)	178(32)	70	724 (7.2%)
2005	대도시	1,508(5)	919	735	3,162 (29.6%)
	중소도시	1,451(9)	769	686	2,906 (27.2%)
	읍면지역	2,294(185)	1,091(24)	597	3,982 (37.3%)
	도서벽지	393(334)	156(26)	77	626 (5.9%)
2010	대도시	1,622(6)	983	799	3,404 (30.3%)
	중소도시	1,666(7)	908	770	3,344 (29.8%)
	읍면지역	2,198(100)	1,087(17)	607	3,892 (34.6%)
	도서벽지	368(242)	152(18)	77	597 (5.3%)

주1: 대도시: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행정구역

중소도시: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시·군)

읍·면지역: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

도서벽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산간지역, 낙도, 수복지구, 집적지구, 광산지구 등

주2: ()는 분교수이며, 전체에 미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연도. 교육통계DB(<http://cesi.kedi.re.kr>).

1.2. 학생수 감소

○ 학교수와 달리 학생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 농어촌 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도시 학교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 2000년 7,931,382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 속에 2010년 7,236,248명으로 약 2.1% 감소하였다. 농어촌(읍·면, 도서벽지) 학생은 동일 기간 1,317,246명에서 1,088,874명으로 17.4% 급감하였다.
- 농어촌 중에서도 면지역이나 도서벽지에서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경향이 두드러졌다(마상진, 2010).

표 2-2. 지역규모별 학생수 감소

단위: 명

구분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2000	대도시	1,820,319	889,123	1,021,767	3,731,209 (47.0%)
	중소도시	1,478,846	669,830	734,251	2,882,927 (36.3%)
	읍면지역	639,410	276,581	298,401	1,214,392 (15.3%)
	도서벽지	60,800	25,005	17,049	102,854 (1.3%)
2005	대도시	1,746,277	928,410	837,359	3,512,046 (45.0%)
	중소도시	1,580,168	798,829	684,082	3,063,079 (39.3%)
	읍면지역	644,963	260,952	223,962	1,129,877 (14.5%)
	도서벽지	51,393	22,513	17,493	91,399 (1.2%)
2010	대도시	1,382,238	864,335	888,831	3,135,404 (43.3%)
	중소도시	1,371,015	831,265	809,690	3,011,970 (41.6%)
	읍면지역	501,699	256,308	243,817	1,001,824 (13.8%)
	도서벽지	44,142	22,890	20,018	87,050 (1.2%)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연도. 교육통계DB(<http://cesi.kedi.re.kr>).

2. 농어촌의 교육환경²

2.1. 복식학급 운영

- 농어촌 학교가 도시 학교에 비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것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도시보다 적어 이상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과하여 과소학급(10명 이하 학급), 나아가 복식학급(복수 학년이 한 학급을 구성)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표 2-3, 2-4>.

-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30명이 넘는 도시 학교에 비해 농어촌 학교는 20

² 이 절의 내용은 마상진(2010)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명 이하이다. 다만 읍지역은 도시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면지역은 전체 학교의 36.8%, 도서벽지는 56.7%였다. 이에 따라 면지역은 과소학급이 전체 학급의 42.7%, 도서지역은 75.9%를 차지하였다.
-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여 2010년 농어촌 학교(초·중·고)의 43%, 2015년에는 50%, 2020년에는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표 2-3.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소규모학교 및 과소·복식 학급수

단위: 교, 개 (%)

지역 구분		소규모 학교 ^a	과소 학급수 ^b	복식 학급수
도시	대도시	59 (5.4%)	17 (1.2%)	17 (1.0%)
	중소도시	145 (13.2%)	50 (3.5%)	52 (3.2%)
농어촌	읍	89 (8.1%)	115 (7.9%)	132 (8.1%)
	면	590 (53.6%)	743 (51.3%)	569 (34.8%)
	도서벽지	217 (19.7%)	523 (36.1%)	866 (52.9%)
전체		1,100 (100%)	1,448 (100%)	1,636 (100%)

주a: 분교 413개(도시 12개, 농촌지역 401개)는 포함되지 않음.

주b: 학급당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학급.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연보.

표 2-4.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규모 지표: 학급당 학생수(2010년)

단위: 교, 명, %

지역 구분		학교수			학급당 학생수	
		2005년	2010년	분교	2005년	2010년
도시	대도시	1,508 (26.7%)	1,622 (27.7%)	6	33.0	27.5
	중소도시	1,451 (25.7%)	1,666 (28.5%)	7	36.3	29.9
농촌	읍	636 (11.3%)	635 (10.8%)	100	24.5	20.6 (읍25.9/면15.8)
	면	1,658 (29.4%)	1,563 (26.7%)			
	도서벽지	393 (7.0%)	368 (6.3%)			
전체		5,646 (100%)	5,854 (100%)	355	31.8	26.6

주1: 학교수 뒤의 ()는 분교장으로 전체 수에 불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연도. 교육통계DB(<http://cesi.kedi.re.kr>).

2.2. 교사의 업무 가중

- 소규모 학교에서의 과소학급, 복식학급은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무엇보다 학급편제, 교직원 인사·배치, 업무분장 등 학교경영상 애로와 더불어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농어촌 학교 근무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표 2-5>.

- 농어촌 학교 교사들에 대한 한만길 등(2008)의 조사에 의하면, 일부는 자신이 원해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농어촌 학교 교사는 행정상의 배치(신규배치나 순환근무)에 의해 (55.4%), 또는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 승진상의 가산점 때문에 (14.6%)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일이 너무 많아요³

시내에 비하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업무가 5배 정도 많은 거 같아요. 거기선 한 가지만 맡았지만, 여기는 인원수가 적으니까(D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사무가 좀 많지요, 업무가. 공문이 와도, 아침 10시쯤 와도 12시까지 보내라, 뭐 이런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가 한 주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방과후학교만 하지만, 먼저 6학급 학교에서는 윤리업무 다하고 또 보건업무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공문 쓰다가 볼 일 못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시간을 많이 빼먹지요. 특히 공문이 그래요, 급하게 갑자기 오는 게 많으니까(K초등학교 교사).

표 2-5. 농어촌 학교 교사의 현재 학교 근무 이유

지역 구분	신규배치에 의한 배정	순환근무제에 의한 배치	승진 가산점	본인이 원해서 (생활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기타
읍	32.8%	24.5%	11.2%	20.7%	10.8%
면	37.6%	18.9%	12.0%	18.2%	13.4%
도서벽지	26.2%	7.7%	56.9%	4.6%	4.6%
전체	34.5%	20.9%	14.6%	18.5%	11.5%

자료: 한만길 등(2008).

3 한만길 등(2008)의 교사 인터뷰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 또한 농어촌 학교에 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의 비율은 40% 정도였고, 도서벽지로 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44%의 교사가 타 지역에 거주하며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자녀교육(37%)이나 문화생활(22.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농어촌 학교 교사들은 농어촌 학교의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공문 처리가 많다’,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었다(한만길 2008)<표 2-6>.

표 2-6. 농어촌 학교 교사의 장기근무 의사, 타 지역 거주 비율

지역 구분	장기근무 의사	타지역 거주
읍	44.3%	41.6%
면	37.4%	47.5%
도서벽지	31.3%	41.5%
전 체	40.4%	44.2%

자료: 한만길 등(2008).

2.3. 열악한 사교육 여건

-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보습학원이나 예체능학원 등 사교육 시설이 부족하여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이는 도농 간 학력차이를 심화시키고 도시지역으로의 유학을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박대식 등, 2009).
 - 기초생활권⁴ 3개 유형 간 사교육 여건(컴퓨터학원, 보습학원, 예능학원)을 비교한 결과 농산어촌형이 도농연계형이나 도시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표 2-7>.

4 MB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는 전국을 광역시 이외 지역을 기초생활권이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권 내에서도 시·군 단위별로 인구규모와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기준에 의해 도시형 기초생활권, 도농연계형 기초생활권, 농산어촌형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7. 농어촌과 도시의 사교육 여건 비교

사교육 지표	기초생활권			평균
	농산어촌형 ^a	도농연계형 ^b	도시형 ^c	
컴퓨터학원 분포(개소/km ²)	0.0	0.0	0.1	0.0
보습학원 분포(개소/km ²)	0.0	0.3	2.3	0.7
예능학원 분포(개소/km ²)	0.1	0.3	2.5	0.8

주a: 인구 10만 명 미만 군 지역으로 농산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

주b: 행정구역상 동으로만 구성된 일반시나 농어촌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20만 명 미만의 일반시, 인구 20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 중소도시와 연계가 많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군 지역

주c: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며 대도시 통근·통학권역에 포함되는 시 지역과 인구 20만 명 이상의 거점도시 지역

- 이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 기회에 대한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만족도도 도시 지역 학부모에 비해 낮았다(박대식, 2009). 사교육 기회에 대하여 도시지역 학부모의 불만족 비율이 29.7%(만족 13.5%)인데 반해, 농어촌은 46.7%(만족 7.0%)였다.

3. 도농 간 교육성과 격차

- 소규모 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그리고 학교 외 사교육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도농 간 학력격차가 발생하였다.
 - '02년~'07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면 도시와 농어촌 학생들 간의 기초학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농어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도시 학생에 비해 낮았다. '07년 조사 결과를 보면 읽기 및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읍·면지역이 중소도시의 2배 이상이었다<표 2-8>.

표 2-8. 지역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수 및 비율

단위: 명, %

영역	지역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미도달 학생수	미도달 비율
읽기	대도시	1,079	3.3	309	3.1	288	2.7	262	2.9	214	2.4	213	2.4
	중·소도시	726	2.7	141	2.2	276	2.8	114	2.0	123	2.2	145	1.6
	읍·면지역	681	5.5	216	5.2	109	3.9	196	4.2	124	2.8	102	3.6
쓰기	대도시	914	2.8	338	3.4	275	2.6	228	2.5	161	1.8	130	1.5
	중·소도시	630	2.3	173	2.7	248	2.5	109	2.0	113	2.0	87	1.0
	읍·면지역	615	4.9	264	6.3	118	4.2	176	3.8	113	2.5	56	2.0
기초 수학	대도시	2,066	6.3	454	4.5	452	4.2	414	4.6	332	3.7	214	2.4
	중·소도시	1,599	6.0	271	4.3	413	4.2	208	3.7	222	4.0	208	2.4
	읍·면지역	1,266	10.2	339	8.1	214	7.6	348	7.5	288	6.4	102	3.6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8).

○ 강태중(2007)은 학업성취도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면서 과거 50년 동안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 그는 시대별 국가 수준의 교육 연구를 주도했던 연구기관(1962년도 연구는 중앙교육연구소, 1973년과 1980년 연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1년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1993년에서 1995년까지의 연구는 국립교육평가원, 그리고 그 이후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각각 수행)의 자료를 지역별, 학교급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간의 우열이 가끔 뒤바뀌긴 했지만, 시기를 막론하고 읍·면지역에 대한 도시의 우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업성취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2-9. 도농 간 학업성취도 차이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1962	-	-	-	-	-	-	-	-	163.11	-	141.59	127.96
1973	54.25	49.15	53.04	38.22읍	-	-	-	-	-	-	-	-
				31.62면								
1980	52.38	48.89	51.72	44.14읍	-	-	-	-	-	-	-	-
				41.34면								
1981	-	-	-	-	24.0	26.21	25.11	19.22	28.36	31.67	29.79	20.30
1993	71.07		68.91	63.25	60.20		57.45	50.63	51.24		45.91	29.68
1994	45.83		47.27	45.40	50.15		49.58	42.40	40.24		44.58	24.55
1995	69.32		68.16	65.17	51.25		52.91	44.46	-	-	-	-
2000	69.80	68.00	65.90	61.30	48.83	49.09	47.85	44.99	52.09	48.74	57.89	38.21
2001	64.86	67.07	66.29	62.92	48.70	49.90	49.22	42.86	55.10	52.86	52.32	41.12
2005	162.51		161.56	160.32	262.99		262.61	260.60	361.43		360.79	358.11

자료: 강태중(2007)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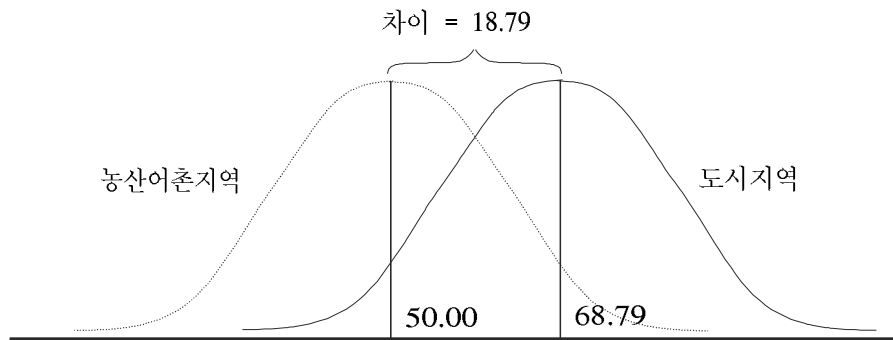
○ 임연기 등(2007)은 216개의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메타분석 연구를 시도하였다.

- 분석 결과 도농 간 교육격차 평균 효과 크기는 .487 로 나타났다. 농산어촌지역의 평균점수를 50퍼센타일로 설정할 경우, 도시지역의 평균점수는 68.79로 18.79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그림 2-1>.

5 연도별로 점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산출(채점)된 것이다.

- 1962년: 국어, 영어, 수학 시험 결과로 얻은 세 개 표준(T)점수의 합계
- 1973년, 1980년: 산수과 시험의 문항별 정답률이 지역별로 보고된 자료에 근거하여 전체 문항에 대한 지역별 평균 정답률 계산
- 1981년: 50점 만점으로 채점된 수학교과고사 점수
- 1993~2001년: 100점 만점의 수학과 성취도 평가 점수
- 2005년: 평균 160(초등), 260(중), 360(고)이고 표준편차 8.5인 척도점수(2003년의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동등화됨)로 나타낸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

그림 2-1. 도농 간 교육격차 평균 효과 크기



자료: 임연기 등(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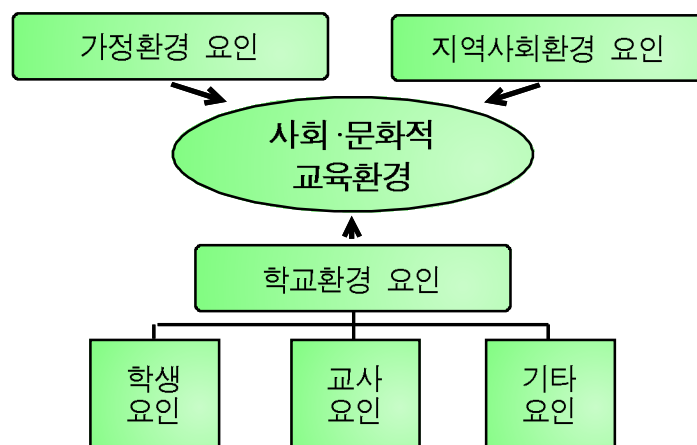
-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습자의 교육격차의 원인은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정, 그리고 그 개인이 학습을 하는 학교 등으로 나뉜다.
 - 김병성(1996)은 학력격차의 결정요인을 학습자 요인, 가정 요인, 학교사회의 체제적 요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요인, 학급 내 대인지각적 요인, 사회문화적 풍토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 김신일(2003)은 학업성취도 격차의 결정요인을 학교 내 요인, 학교 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내 요인은 학급 규모와 학교 규모, 학급 편성과 계열 편성, 학교의 교육환경, 교사의 기대효과, 학생문화와 학교풍토로 분류하였다.
 - 이종각(2002)은 학업성취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을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의 상호작용과 교사의 역할, 학교풍토와 문화로 구분하였다.
- 하지만 지역 간 격차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 가정, 학교와 관련한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관련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 이를 황선경(2009)은 지역 간 교육 격차의 발생 원인의 관점에서 개인 요인, 환경 요인, 이동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개인 요인은 지능지수, 이전의 학업성취도, 집중력의 정도, 노력의 정도,

유전적 인자 등과 같이 학업성취도 획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요인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서 편포되어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시킨다.

- 환경 요인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획득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요인을 의미한다. 이 요인은 다시 가정 요인, 지역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배경이나 지역 환경 모두 지역별로 어느 한 쪽이 월등하게 우월하거나 열악하다면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가 유발된다. 가정 요인은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세분할 수 있다. 지역 요인은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세분할 수 있고, 인적 환경과 물적 환경은 다시 학교 내·외의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다시 사회심리적 환경, 경제적 환경, 제도적 환경, 정치적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동 요인은 학생이 혼자 또는 가정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전입한 지역이나 전출한 지역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요인이다. 이동의 현상이 집단적으로 또는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동의 유형은 이동 시기, 이동 규모, 이동 범위, 행정적 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도농 간 학교교육 격차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주로 농어촌 학교 실태를 언급하기 위한 한 항목으로서 학교교육 격차를 언급하는 정도이다.
- 이정선(2004)은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대하여 첫째, 투입 요인으로서 학교의 인적 구성, 교육환경의 열악성, 공·사교육비 투자가 적은 점 등의 불리함, 둘째, 과정 요인으로서 학교 학습환경, 교육과정 구성 운영, 학생지도 투입 시간, 교사 풍토 등에 있어서의 불리함,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 요인인 인지적 영역의 학력과 정의적 영역의 자아개념 및 가치관에 있어서의 상대적 낮음 등을 들어 교육격차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 임연기 외(2005)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상 분석에서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생수 감소와 이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증가, 특히 학업우수 인력의 조기 이농으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점을 들었다. 둘째로는 학생들의 의욕은 좋은 편이나 전반적으로 이해력은 낮은 현실로 인한 의욕 저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기회 등이 부족하고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주거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요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로는 학교 등 공교육기관 이외의 문화시설 부족과 프로그램 부재로 인해 방과 후 활동 참여가 원천적으로 어렵고 통학 여건이나 생활환경 등이 불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넷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등 자아존중감, 지역사회에 대한 전망 부재, 그리고 사회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여건이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 강만철 등(2002)은 농어촌 교육 진흥방안 연구에서 도농 간 학교교육 격차 요인을 학생의 개인적 측면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조 및 시설, 각종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사·행정가의 특성,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깊이 연관시켜 각 요인을 상호 관련지어 교육격차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려 하였다<그림 2-2>.

그림 2-2. 사회·문화적인 교육환경의 개념 모형



자료: 강만철 등(2002).

○ 농어촌지역 주민의 자녀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낮았고, 이는 이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어촌지역 주민이 자녀교육 여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13.9%(불만족 36.0%)로 도시(만족 20.5%, 불만족 24.3%)보다 낮았다.
-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유로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 전체에서는 '03년과 '05년에 '소득이 낮다'는 이유와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보이다가 '07년에는 상당한 폭으로 응답률이 높아졌다(39.5%). '09년에는 '07년도에 비해서는 비중이 감소했지만, 29.1%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특히 40대 응답만 대상으로 할 경우,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응답은 '06년 45.1%, '07년 55%로 압도적으로 높다<표 2-10>. '09년에는 소득 문제로 인한 이촌 비중이 늘어나고 자녀교육 문제는 낮아지기는 했지만, 32.5%로 여전히 농어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표 2-10. 농어촌 주민들의 주요 이촌 이유

단위: %

구 분	이촌 이유	2003 (n=318)	2005 (n=142)	2007 (n=133)	2009 (n=117)
전체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3.5	3.2	11.9	9.4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29.9	30.5	39.5	29.1
	소득이 적어서	30.2	31.1	13.8	25.8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25.2	19.2	9.4	15.3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1.9	7.4	8.6	11.7
	자녀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5.7	7.1	6.5	3.5
40대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2.2	2.2	1.7	2.5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37.8	45.1	55.1	32.5
	소득이 적어서	26.7	22.5	13.1	30.7
	농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25.6	13.8	3.6	21.9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4.4	9.3	11	12.4
	자녀들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	4.7	2.8	0

자료: 농촌진흥청. 각년도. 농촌생활지표조사.

4. 방과후학교와 교육격차 해소

-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 실태와 효과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와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 김현철 외(2007)는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와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변화 간의 관계를 거주 지역 및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급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집단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모두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수준별 보충학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거주 지역별 방과후학교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전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및 읍·면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계층별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저소득 계층에서, 중학교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방과후학교 참여 이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 김석우·한홍련(2008)은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한 학생의 성취도 인식과 사교육비 경감, 특기·적성·인성개발 여부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인식 조사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 김경근(2008)은 「방과 후 참여 결정 요인」 연구에서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현재 방과후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부모 학력이나 가계소득이 낮은 계층 출신이고, 지역적으로 읍·면지역에서 방과후학교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방과후학교

는 가정배경이 좋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수장 억제 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홍원 외(2007, 2008)는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과 세부사업별 지원 사업(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 초등보육 등)으로 나누어 운영실태, 만족도,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중심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 김기홍 외(2006)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체제 구축, 네트워크 매뉴얼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정지원을 제안하였고, 지자체 및 지역의 비영리단체 차원에서는 인프라 구축, 인력풀 구축, 재정지원, 광역 단위의 협의체 결성을 제시하였으며, 학교차원에서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 특성화 및 전문화, 교원의 인식 제고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조덕주(2008)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학교현장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법제화, 방과후학교 홍보 강화,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지원센터 간의 협약 체결, 지원센터의 명료한 업무조직 및 역할 분담, 지원센터의 학교 대상 지원 업무의 강화, 지원센터 담당자를 위한 연수 강화,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연수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5.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 1960년대 이후 국가적으로 도시 중심, 상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지속적으로 농어촌 인구의 도시이동이 있어 왔고, 이는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농어촌 학교에는 10명 미만의 과소학급 운영, 복식수업 운영과 더불어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근무 기피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도농 간의 교육격차를 보면, 지난 50여 년간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학업성취도는 지속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학력격차는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차 심화되었다.
- 도농 간 학력격차의 원인으로서는 학생 개인의 요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 학교의 구조와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사·행정가의 특성 등의 학교 요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방과후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다양한 학습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사교육비 감소와 더불어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다.

제 3 장

방과후학교 정책 현황

1. 추진배경

- ‘방과후학교’는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 중 하나인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생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차원에서 도입되었던 ‘방과후 교육활동’이 변형된 것이다.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에 학생의 흥미, 취미 및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피아노, 컴퓨터, 예절교실, 외국어 등).
 - 방과후 교육활동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각급 학교를 통해 실시되었으나, 도입 취지인 학생의 소질과 특기·적성 계발보다는 학교 밖 교과과의 활동을 학교 내로 흡수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의 목적이 더 강화된 성격을 띠었다(김홍원 등, 2010).
- 방과후학교 활동은 다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연차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세웠다.

-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배경에는 본래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시작한 특기·적성교육의 취지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 퇴색되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 그러나 사교육비 증가가 국가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고, 여기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는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위해 폐지하였던 중·고교의 교과 보충학습이 다시 도입되었고, 나아가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도입이 제안되어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당초 목적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사교육비 경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 방과후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가 도입·적용되었다.⁶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에 교육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대응, 사교육비 경감에 초점을 둔 새로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방과후학교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 계층 간·지역 간에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필요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증대

6 ‘방과후학교’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로, 당시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칭하던 ‘보충자율학습’이라는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바꾸게 되었다.

표 3-1. 방과후학교 주요 정책 추진과정

연도	주요 정책사항
2005	· 48개 교육인적자원부 연구학교 운영
2006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전담팀 조직·운영 · 280개 시범학교 운영(교육부 48개, 교사대 및 교육청 시범학교 238개) · 중학교 교과프로그램 지도 허용 및 초등학교 교과관련 프로그램 지도 허용 ·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적 실시(실시 학교 98.7%, 참여 학생 41.9%) ·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실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사업,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사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과/특기적성/초등보육/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
2007	·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정책과 설치·운영 · 96개 교육인적자원부 시범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도입 운영(시·도교육청 7개, 지역교육청 10개) ·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개최 · 방과후학교 온라인행정시스템 개발 · 방과후학교 영어원어민 강사 제도 도입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정책연구센터 설치(연구 및 사업 수행)
2008	· 30개 교육과학기술부 시범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 도입 · 방과후학교 관리자(교장 등)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도입 ·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사업 지방이양(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 초등보육 교실 운영 지원 재원 마련) · 방과후학교 사업의 자율화(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 지도 허용, 방과후학교 영리업체 위탁 허용) · 방과후학교 지원 사회복지요원 제도 도입 ·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및 학생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2009	·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설치·운영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채용 · 10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운영 · 방과후학교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반영 · 밤 9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중일돌봄교실(346개교) 시행 ·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
2010	· 방과후학교 온라인 현황조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16개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담당장학관(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0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시범운영 · 온종일 엄마표 멘토링 사업 시범학교 1차 공모 · 제2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

자료: 김홍원 등(2010).

2. 비전 및 목표

- 방과후학교는 수요자(학생,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기존에 방과후교실(초등),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고교)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06년부터 방과후학교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이라는 비전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정책목표를 지니고 있다.
 - ① 학교 교육기능 보완: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②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 ③ 교육복지 실현: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④ 학교의 지역사회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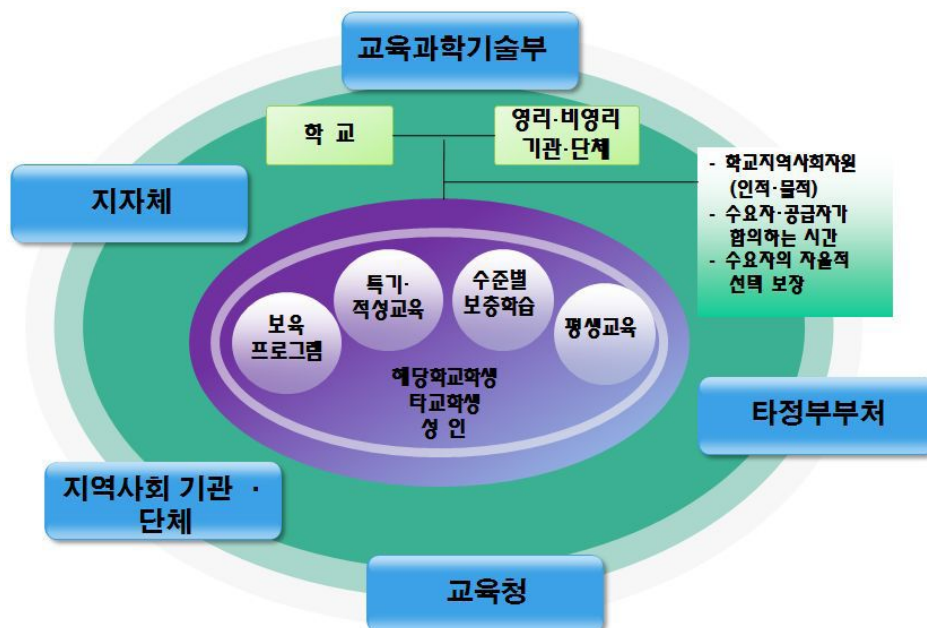
그림 3-1. 방과후학교의 비전과 목표



3. 추진주체와 체제

- 방과후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평생교육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사회의 비영리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
 - 지역사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학생 지도 및 운영
 - 성인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능
 - 수요자 요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결정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료와 시설 이용(지역사회 내 단체와 협력)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어촌 지역이나 저소득 계층에게 재정 지원

그림 3-2. 방과후학교의 주체와 운영방식



-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대상, 종류, 운영시간 등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며,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 교육활동을 보다 자율화, 개방화, 다양
화하여 수요자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체제이다.
 - 기존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을 비교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방과후 교육활동과 방과후학교의 운영방식 비교

구 분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학교	추진방향
운영주체	학교장 중심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 주체의 개방성 확대	운영주체의 개방화
지도강사	현직교원 중심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 사 등으로 다양화	지도강사의 다양화
교육대상	본교 재학생 위주	타교 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으로 확대(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대상의 다양화
교육장소	본교 시설 위주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 용 극대화	교육장소의 다양화
프로그램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 중시	프로그램의 수요자 중심 개설 및 선택
교육비	수익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소외계층 집중지원, 교육의 형평성 구현	교육격차 해소
실시시간	정규교육시간 이 외의 방과후 특 기·적성시간	일과 전과 후, 토요일업일, 방학 중에 실시 될 수 있음(돌봄과 보호의 기능 수행)	실시시간의 자율화

4. 투입예산

-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방과후학교 사업비(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보조금
- 방과후학교 예산은 매년 3,300~3,400억 원 규모인데,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강료를 계산하면 약 1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김홍원 등, 2010).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국가와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1조 4,000억 원 안팎이 될 것이다<표 3-3>.
- 2011년에는 교과부 일반회계 7억 7천 5백만 원,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446억 6천만 원, 시·도교육청 편성 예산 4,218억 7천만 원이 방과후학교 사업에 지원된다.

표 3-3. 방과후학교 사업 재정지원 총괄 현황

단위: 백만 원

재원 유형		국비	지방비				총 계
		교과부 일반회계	시·도교육청 편성 예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부동산 교부세	대응투자	
예산	2008	821	238,694	14,910	28,188	46,889	329,502
	2009	821	257,108	18,764	21,018	43,383	341,094
	2010	671	312,320	19,160	11,035	미확인	-
	2011	775	421,870	44,660	미확인	미확인	-
집행절차	교과부→ 국립학교, 한국교육 개발원	교과부→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단위학교		행안부→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또는 단위학교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지원내용	국립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용역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	당해 연도 특정과제 수행	초등보육 프로그램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자료: 김홍원 등(2010); 교육과학기술부(2011)

5. 주요 사업과 방과후학교지원센터

-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5.1. 지자체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6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당시 19개 군을 지정하여 총 8,442백만 원(1군당 평균 4.6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총 88개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군과 도농복합시 69개를 추가 지정하여, 선정된 총 88개 군 및 도농복합시에 총 49,700백만 원(1시·군당 평균 5.64억 원)을 지원하였다(국고:특별교부금=3:2).
- 2008년부터는 140개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2009년 기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학생은 827,479명이다. 이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의 74.1%에 해당한다.
- 2008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세율이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⁷ 그리고 '08년도부터는 '07년 이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 공모를 통한 예산 지원 방식과 달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체 140개 시·군 모두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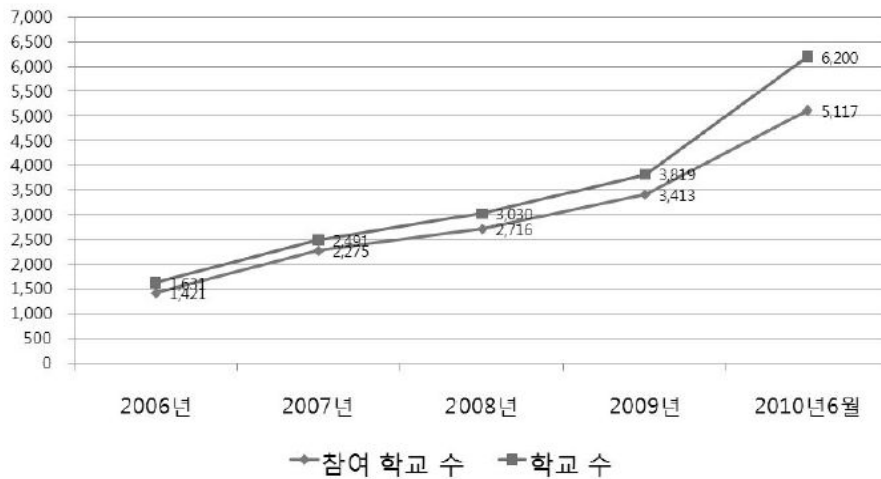
⁷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의 산출 근거 및 산출방식을 명시함에 따라 사업의 법령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08년도부터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정책의 기본 운영 방향에 충실하되, 예시된 대응투자 및 재정지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시·도별 여건에 따라 사업을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5.2. 초등 돌봄교실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맞벌이 부부, 근로빈곤층,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방과 후, 방과 중 안전하게 보호·지도하여 바림직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방과 중 보육 수요 충족으로 잠재된 여성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에 돌봄 기능, 청소년 보호·선도 기능을 추가하여 유아교육, 아동보호, 평생학습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0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06년에는 400개 초등학교, '07년에는 700개 초등학교의 보육교실 시설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 '08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시·군·구청에 교부된 지방재정보통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다.
 - 신규 운영되는 학교에는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1,384개 교실), 이미 시설지원금을 받은 학교에는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2,491개 교실)를 지원하였다.
-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10년 6월 기준 5,117개교이며,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87.4%이다. '09년 10월의 58.6%에서 28.8%가 증가한 것이다. 돌봄교실 수는 6,200개로 전년도에 비해 2,381개가 증가하였다.

그림 3-3.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학급 수 변화('07-'10)



주: 2010년은 6월 기준임.

자료: 김홍원 등(2010).

-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였으며,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학교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등의 소외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며, 초등학교 신·개축 시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교실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09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 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정규 수업+방과 후 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종일돌봄교실'을 확산시키고 있다.

5.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수

강권이다.⁸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학업성취를 개선하도록 양질의 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011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은 연간 36만 원(월 3만 원씩 12개월)의 자유수강권을 사용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국가 수준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단위학교가 주체가 되어 자유수강권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예산을 단순히 분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잠재적 학습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 2006년 10월부터 운영된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2,373개교 학교에서 90,901명의 학생이 1인당 평균 50,874원을 지원받았다.⁹
 - 총 46억 2천 5백만 원(특교 29억 3천 4백만 원, 지방대응투자 16억 9천 1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 2008년에는 초·중·고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자, '08년 1,146억 원에서 '09년에는 1,034억 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예산)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김진숙, 2009).¹⁰ '09년에는 총 390,518명의 학생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10년에도 교과부는 39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김홍원 등, 2010).

8 자유수강권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원하며, ②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자녀, 보훈대상자 자녀, 시설 수용 학생과 ③ 기타 학교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된다.

9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학생 1인당 6만 원의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였다.

10 교육과학기술부는 '11년 7월 발표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13년까지 차상위계층 100%(75만 명)까지 월 5만 원(연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5.4. 대학생 멘토링사업

- 대학생 멘토링(Mentoring)사업은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을 대학생(Mentor)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대학생 멘토링은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07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와 소외계층 학생 간 정기적 만남을 통해 진행된다. 대학생 멘토 1인이 소수의 멘티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 1회 2시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 장소로는 주로 학교가 활용된다.
 - 멘토 활동비는 멘토링 횟수와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활동비 지급 외에도 교대·사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봉사학점 등 학점 인정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2010년 기준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는 13,231명, 학생 멘티는 58,366명으로 집계되었다(교과부·한국교육개발원, 2010). '08년에는 전년도보다 멘티와 멘토 모두 약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표 3-4>.

표 3-4. 대학생 멘토링 참여 멘토 및 멘티 현황

구 분	멘토링 참여 학생수(멘티)	멘토링 참여 대학생수(멘토)
2006	10,007	3,654
2007	46,732	10,838
2008	33,665	9,050
2009	39,920	9,983
2010	58,366	13,231
2011(6월 기준)	82,221	17,747

자료: 교과부. 2011. 내부자료.

5.5. 방과후학교지원센터¹¹

-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직으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설치는 2007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의 비효율성, 방과후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동원 취약, 방과후 활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인프라 미비로 방과후 활동 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한 데에서 기인한다.
 - 방과후학교 사업이 확대되고, 2008년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였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수요자(학생, 학부모)와 공급자(강사, 대학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율과 선택권을 높이고, 여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수요자 지원의 관점에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대부분 교육부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와 타 부처의 방과후 활동은 서로 운영 시간 및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었다.
 -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가 지역사회로 확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7년 정부 시범사업으로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총 144개 운영되고 있다<부록 2>.
 - 2007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17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각 시·도별 1개 센터, 경기도의 경우 2개 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시·도별로 추천한 지역 또는 광역교육청의 사

¹¹ 변종임 등(2009)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업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광역 단위 8개, 지역 단위에 9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 2008년도에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급격히 확대되어 시·도 단위 11개, 지역청 단위(경기 25개, 충남 15개, 전북 14개 지원센터) 64개 지원센터 등 전국에 75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되었다.
 - 그러나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시범 사업은 지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시·도 광역교육청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확대되는 속도가 달랐다.
 - 2009년도에는 방과후학교 추진체제 정비를 통한 ‘지역 방과후학교의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하에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센터를 공모하여, 2009년 8월에 10개 센터를 선정하고, 3억, 2억, 1억 원씩 차등 지원하였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은 크게 나누어 방과후학교 활성화 추진, 지역 내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센터 역할, 방과후학교 콜센터 운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방과후학교 활성화 추진 활동에는 방과후학교 지원단(운영협의회) 운영, 시·도(시·군·구)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연계·협력 방안 강구(언론, 기업, 대학,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예술 공연단체, 공익법인 등),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모델 및 위탁 프로그램 개발·지원,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제 운영 지원, 홍보자료 제작·보급 및 성공 사례 발굴, 우수사례집 발간, 방과후학교 관련 교원 및 외부강사 연수와 질 관리, 우수 프로그램 발굴·개발 운영, 초·중·고 방과후학교 현장 지원 활동, 방과후학교 페스티벌 기획·추진, 시범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다.
 - 지역 내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센터 역할 관련 활동으로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단위학교 보급, 교육청·학교에는 강사 풀 정보, 강사에게는 강사채용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구성, 강사 인력 풀, 우수강사 인력풀 운영 및 자원봉사자 발굴,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운영, 타 학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 내 타 부처(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및 기타 공익단체(YMCA, 굿네이버스, SK1318 등)의 방과후 교육활동 정보 공유 및 협력 체제 구축,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등 유사한 사업과의 정보 공유 및 연계 조정,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종 안내 자료 개발 보급, 인근학교 간 우수 프로그램 및 수강 정보 안내, 대학생 멘토링, 귀향 멘토링 모집 정보 제공, 초등보육활동 운영 현황 및 참여 정보 안내 등이 포함된다.

- 방과후학교 콜센터 활동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정보 안내, 방과후학교 운영 아이디어 접수 센터 운영, 방과후학교 전화 민원센터·도움 창구 등 운영, 외부강사 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예시로서 각 지원센터 단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 4 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1. 분석개요

-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운영 실적(참여율, 월부담액, 프로그램 종류, 강사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분석(제3장)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정책 성과 목표에 대하여 관련 변인의 통계적 통제를 통해 도농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정책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는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 4가지이다.
 - ‘학교 교육기능 보완’ 목표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으로서 교과, 특기·적성, 수준별 보충학습, 자기주도학습 및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교육비 경감’ 목표는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해소와 보육 등을 통해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교육복지’ 목표는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학교의 지역사회화’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실현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객관적 통계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생 성과(학업성취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문제행동) 변화 등을 구체적인 성과 분석의 지표로 삼았다.
 - ‘학교 교육기능 보완’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학생들의 참여도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되지만,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단순한 양적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를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학교 외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가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코자 하는 정책취지에 따라,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이 되는 ‘사교육비’ 내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이 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교육중단연구에서 조사한 ‘학업성취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 ‘학교의 지역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이와 관련한 통계자료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도농 간 차이 분석의 지표에서는 제외하였다.
-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분석 지표로 선정된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변화 등과 관련한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는 사교육비실태조사(2007년, 2010년)와 한국교육중단연구(2006년, 2007년, 2008년)를 활용하였다.
 - ‘사교육비’는 통계청의 사교육비실태조사(2007년, 2010년)를 통해 파악이 되는 ‘사교육비’ 내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한국교육중단연구(2006년, 2007년, 2008년)를 활용하였다.

2.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실적

2.1. 학교 및 학생 참여율

- 2010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는 전국 초·중·고의 100%에 이르러 모든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63.3%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표 4-1>.
- 방과후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2006년 이후, 2006년 42.7%, 2007년 49.8%, 2008년 54.3%, 2009년 57.6%, 2010년 63.3%의 비율로 학생 참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 학생 보다 높은 77.2%의 참여율을 보였다.

표 4-1. 방과후학교 참여 학교 및 학생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전체학생(명)	3,127,208	3,006,519	1,086,108	7,219,835
참여학생(명)	1,954,355	1,780,804	838,226	4,573,385
참여율	62.5%	59.2%	77.2%	63.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2.2 학생 1인당 수강강좌수 및 월 부담액

- 2010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평균적으로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3.40개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 달에 평균 29,236원을 부담하고 있다 <표 4-2>.
- 전체 학생 중 25.2%(1,154,612명)가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부담 학생이 8.0%(367,542명)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1인당 참여 강좌수가 3.63개로 대도시, 중소도시 학생보다 많았고, 무료수강학생 비율 역시

48.4%로 대도시(18.0%), 중소도시(22.2%)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월 평균 수강료도 24,344원으로 대도시(33,083원), 중소도시(26,381원)보다 낮았다.

표 4-2. 방과후학교 1인당 수강 강좌수 및 수강료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1인당 수강 강좌수		3.23	3.46	3.63	3.40
수강료 부담형태	전액무료	18.0%	22.2%	48.4%	25.2%
	일부무료	4.6%	7.3%	17.3%	8.0%
	전액부담	77.3%	70.4%	34.2%	66.7%
월 평균 수강료(원)		33,083	26,381	24,344	29,26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2.3. 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10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방과후학교에서는 총 572,609개의 강좌가 운영되었다. 이 중 27.5%인 156,074개의 강좌는 특기·적성 강좌이며, 72.7%인 416,535개의 강좌는 교과 관련 강좌로, 교과 관련 강좌의 수가 특기·적성 강좌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표 4-3>.

표 4-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종류

강좌 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특기적성	61,914 (26.6%)	50,113 (26.4%)	44,047 (29.3%)	156,074 (27.3%)
교과	170,828 (73.4%)	139,421 (73.6%)	106,286 (70.7%)	416,535 (72.7%)
전체	232,742 (100.0%)	189,534 (100.0%)	150,333 (100.0%)	572,609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토요일휴업일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2,165개 학교이며, 이는 전체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의 19.3%에 해당한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중의 2.9%에 해당한다<표 4-4>.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2007년 195,448명에서 2008년 135,025명, 2009년 132,886명, 2010년 132,72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한편 방학 중에는 전체 학교의 83.4%가 운영하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 중의 82.5%가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토요일휴업일 운영, 방학기간 운영 비율은 도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4. 방과후학교 토요일휴업일 운영, 방학기간 운영 비율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토요일휴업일 운영	29.3%	14.2%	15.5%	19.3%
방학기간 운영	90.6%	82.6%	78.5%	83.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2010년 기준으로 방과후학교에는 총 494,965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66.2%는 현직 교사이며, 33.8%는 외부 강사이다. 특기·적성 강좌와 교과 강좌별 현직 교사와 외부 강사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에는 외부 강사의 참여율이, 교과 강좌에는 현직 교사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현직교원 의존율이 다소 높았다<표 4-5>.

표 4-5. 방과후학교 강사 현황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현직교원(명)	130,142 (63.4%)	108,014 (67.3%)	89,665 (69.3%)	327,821 (66.2%)
외부강사(명)	75,084 (36.6%)	52,383 (32.7%)	39,677 (30.7%)	167,144 (33.8%)
전 체(명)	205,226 (100.0%)	160,397 (100.0%)	129,342 (100.0%)	494,965 (10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3.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 방과후학교 정책의 성과 지표의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타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상황¹²에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이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3.1. 방과후학교 참여

-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표 4-6>.
 - 학교급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초등학생 48.5%, 중학생 53.3%, 일반계 고교생 88.0%, 전문계 고교생 64.0%이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읍·면지역)은 초등학생 52.7%, 중학생 80.1%, 일반계고교생 90.8%, 전문계고교생 77.9%로 각 학교급의 도시학생들 참여율보다 높았다.
 - 성별로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참여율이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농어촌보다는 도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였다.

¹² 다양한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정도를 보는 통계적 방법에는 중다회귀 분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다회귀분석은 종속변인, 독립변인이 모두 연속형 변인이어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 범주형 변인의 경우에도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일반화선형모형이 있다.

표 4-6. 학교급·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구 분		도시			농어촌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학 교 급	초등학교	51.5%	49.7%	44.4%	47.6%	52.7%	48.5%
	중학교	32.1%	61.3%	44.1%	49.0%	80.1%	53.3%
	일반계고	63.6%	91.8%	91.8%	87.7%	90.8%	88.0%
	전문고	42.5%	57.2%	63.1%	58.6%	77.9%	64.0%
성	남	48.0%	68.1%	66.0%	64.2%	75.0%	65.9%
	여	53.1%	72.3%	68.4%	67.6%	75.5%	68.7%
전 체		50.5%	70.1%	67.1%	65.8%	75.2%	67.2%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부모의 특성별로는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 농어촌에 관계없이 동일하였다<표 4-7>.
 - 부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51.8%, 모의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54.3%가 참여를 한 반면, 50대 이상인 경우 각각 75.9%, 76.0%가 참여했다.
 - 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72.4%, 모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72.2%가 참여를 한 반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는 각각 66.2%, 64.9%가 참여했다.

표 4-7. 주요 부모 특성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부모 특성		도시			농어촌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부 연 령	30대 이하	54.6%	54.5%	46.3%	50.7%	51.8%
	40대	48.9%	68.6%	65.3%	64.2%	65.7%
	50대 이상	53.4%	80.0%	78.0%	74.4%	75.9%
부 학 력	중졸 이하	41.5%	73.2%	72.6%	68.7%	72.4%
	고졸	49.7%	69.8%	67.1%	66.2%	68.0%
	대졸	51.0%	69.8%	65.7%	64.9%	65.6%
	대학원졸 이상	52.4%	70.0%	68.9%	65.3%	66.2%
모 연 령	30대 이하	50.0%	56.9%	49.2%	52.5%	54.3%
	40대	50.4%	72.6%	70.0%	68.1%	69.5%
	50대 이상	53.1%	80.6%	78.6%	74.2%	76.0%
모 학 력	중졸 이하	44.8%	72.5%	73.7%	69.5%	72.2%
	고졸	50.7%	71.1%	68.6%	67.4%	68.8%
	대졸	50.9%	68.5%	63.6%	63.2%	64.0%
	대학원졸 이상	52.5%	69.4%	67.8%	64.3%	64.9%
전 체		50.5%	70.1%	67.1%	65.8%	67.2%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가구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도농 간 차이가 없었다<표 4-8>.

- 월 1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71.1%가 참여하는 반면, 7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의 경우는 63.8%가 참여하고 있었다.

표 4-8. 가구소득별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가구소득 (월평균)	도시			농어촌	전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100만원 이하	50.7%	72.5%	68.6%	67.9%	81.5%	71.1%
100~200만원	53.7%	71.8%	69.8%	68.5%	78.6%	70.6%
200~300만원	48.0%	69.2%	67.9%	66.1%	76.0%	67.8%
300~400만원	49.4%	70.0%	66.3%	65.6%	72.5%	66.6%
400~500만원	51.2%	70.3%	66.3%	65.6%	73.6%	66.6%
500~600만원	52.4%	70.2%	65.5%	64.8%	71.1%	65.4%
600~700만원	49.2%	69.1%	64.4%	63.0%	70.7%	63.7%
700만원 이상	50.1%	68.8%	66.7%	63.3%	69.3%	63.8%
전 체	50.5%	70.1%	67.1%	65.8%	75.2%	67.2%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관련 변인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을 때, 도시가 아닌 농어촌이라는 지역변인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요인 이외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학교급, 성별, 아버지 학력과 나이, 어머니 학력과 나이,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지역과 이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여부(불참=0, 참여=1)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¹³에서의 로짓(Logit)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9>.
 - 지역 이외에도 학교급, 성별, 어머니 나이, 가구소득 등의 변인이 독립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¹⁴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즉,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수록, 어머니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가 높았다¹⁵. 아버지 나이와 학력, 어머니 학력 등과 방과후학교 참여의 관계는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Sig값이 0.05 이상).
 - 한편 이러한 관련 변인의 통제 상황에서도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학생보다 방과후학교 참여 경향이 높았다(B값 0.568, sig값 0.000). 도시 학생보다 농어촌 학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확률이 1.765배 높았다. 즉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이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후학교를 더 참여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 일반화 선형모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다양한 독립변인중 원하는 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 정도를 파악)를 자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장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법으로 범주형 자료(학교급, 성별, 학력, 연령대)와 연속형 자료(소득, 투입시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

14 통계적 유의미성은 표의 Sig값(significance probability value, P값 이라고도 함)을 보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5이하인 경우 그 통계값은 유의미하다고 해석한다.

15 기울기(B) 값이 +이면 종속변인의 값과 독립변인의 값이 양의 관계임을 나타낸다, 즉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일수록 참여율이 높음의 의미한다. 반면 -값이면 둘 간의 관계가 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예로 어머니 연령이 40대에서 -의 값인데, 이는 기준연령(30대 이하)에서 40대로 변화될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표 4-9. 방과후학교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로짓분석 결과

변인 (기준값) ¹⁶		B (기울기)	Wald ¹⁷ χ^2	Sig (유의도)	Exp(B) ¹⁸
Intercept		-0.219	11.074	0.001	0.803
학교급 (초등학교)	고등학교	1.980	6792.374	0.000	7.239
	중학교	0.254	137.021	0.000	1.290
농어촌 (도시)		0.568	535.856	0.000	1.765
여학생 (남학생)		0.172	110.024	0.000	1.188
부연령 (30대 이하)	50대 이상	-0.017	0.170	0.680	0.983
	40대	0.021	0.402	0.526	1.022
부학력 (중졸 이하)	대학원졸	0.062	1.123	0.289	1.064
	대졸	0.055	1.241	0.265	1.057
	고졸	-0.029	0.390	0.532	0.971
모연령 (30대 이하)	50대 이상	-0.170	14.054	0.000	0.844
	40대	-0.102	16.300	0.000	0.903
모학력 (중졸 이하)	대학원졸	0.147	4.321	0.038	1.158
	대졸	0.108	4.738	0.029	1.114
	고졸	0.138	8.963	0.003	1.148
가구소득 (100만원)	700만원 이상	-0.400	50.526	0.000	0.670
	600~700만원	-0.334	30.765	0.000	0.716
	500~600만원	-0.258	22.599	0.000	0.773
	400~500만원	-0.167	10.609	0.001	0.846
	300~400만원	-0.142	8.139	0.004	0.868
	200~300만원	-0.073	2.204	0.138	0.929
100~200만원		0.009	0.029	0.865	1.009

주: Likelihood Ratio Chi-Square 12840.915(df=21, sig=0.001)

16 범주형 자료(명목변인, 서열변인)의 경우 일반화선형모형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변인값(reference value)을 중심으로 타변인값들을 가변인(Dummy Variable)화해야한다. 즉 괄호안의 변인값을 기준으로 각 변인값의 상대적인 값을 가질 때의 기울기(B), 증가치(Exp(B) 등을 알 수 있다. 한예로 학교급의 경우 기준값이 초등학교이고, 비교값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중학교의 B와 Exp(B)는 학교급이 초등학교일 때 비해 중학교일 때의 B와 Exp(B)의 값이다.

17 Wald χ^2 값은 일반화선형모형에서 각독립변인의 종속변인과의 관계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통계값으로 값이 클수록 의미가 있을 확률이 높다. 즉 이 값들의 비교를 통해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P값((Sig) 값)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Sig 값이 0.05이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관계가 있음(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18 Exp(B) 값은 독립변인 한단위가 올라갈 때, 종속변인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값으

3.2. 사교육비

-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학생 대비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와 비교하여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심하게 벌어졌다 <표 4-10>.
 -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연간 평균 167만 원으로 도시(294만 원)의 56% 수준이다.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농 간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 농어촌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대비 74%인 데 비해, 중학생은 63%, 일반계 고등학생은 45% 수준으로 점차 낮아졌다.
 -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표 4-10. 학교급·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만 원

구 분		도시	농어촌	합계	농어촌/도시
학 교 급	초등학교	289.8	213.8	276.2	0.74
	중학교	316.9	198.2	300.3	0.63
	고등학교 ^a	304.9	139.5	284.5	0.45
성	남	286.5	163.7	267.1	0.57
	여	302.4	171.5	283.8	0.57
전체		294.0	167.1	274.9	0.56

주a: 일반고만 포함됨.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학부모 특성별로 부모연령이 40대인 경우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경향은 도농 간 차이가 없었지만, 연령대에 따른 경향은 차이가 있었다<표 4-11>.
 - 아버지의 연령대가 40대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연간 291.6만 원인 반면,

로 한여로 학교급이 초등학생(기준값)에 비해 중학생은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확률이 1.29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7.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30대 이하는 248.8만 원, 50대 이상은 259.2만 원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대에서도 동일하게 40대 이상이 가장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고(288.3만 원), 그 다음 30대 이하(261.8만 원), 50대 이상(256.5만 원) 순이었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부모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103.4만 원인 반면, 대학원졸 이상의 경우 460.6만 원으로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의 경우도 유사하였다.

표 4-11. 학부모특성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만 원

구 분		도시	농어촌	전체
부 연령	30대 이하	257.8	214.0	248.8
	40대	310.2	181.3	291.6
	50대 이상	282.5	125.0	259.2
부 학력	중졸 이하	120.7	61.4	103.4
	고졸	216.5	154.3	205.2
	대졸	364.4	233.1	349.6
	대학원졸 이상	480.7	213.1	460.6
모 연령	30대 이하	275.4	206.6	261.8
	40대	307.0	167.7	288.3
	50대 이상	280.0	123.5	256.5
모 학력	중졸 이하	127.0	64.2	109.8
	고졸	238.9	163.7	226.8
	대졸	400.8	240.0	383.4
	대학원졸 이상	513.3	255.2	493.5
전체		294.0	167.1	274.9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도시-농어촌에 관계없이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가 컸는데, 불참 학생이 참여 학생보다 연평균 70만 원 이상 더 지출하고 있었다 <표 4-12>.

-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는 251만 원으로, 불참 학생의 사교육비 323만 원의 77.7% 수준이었다.

- 지역별로 보면 도시 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경우 연평균 사교육비가 272만 원으로 불참 학생의 사교육비의 80.9%였고, 농어촌의 경우는 147만 원으로 불참 학생 사교육비의 62.7%였다.

표 4-12.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른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만 원

구 분	도시	농어촌	전체
불참(A)	336.2	227.1	323.8
참여(B)	272.1	147.4	251.1
B/A(%)	80.9%	62.7%	77.7%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고 이는 도농 구분없이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소득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고, 도시의 경우 그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표 4-13>.
 - 과반수의 학생이 사교육비로 연간 200만 원 이하를 소비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쓰지 않는 비율이 32.9%, 100만 원 이하가 5.0%, 100~200만 원이 10.2%였다.
 - 반면에 12.1%는 사교육비를 600만 원 이상 소비하고 있었다.
 - 농어촌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이 사교육비로 연간 100만 원 이하를 소비하고 있었는데, 사교육비를 쓰지 않는 학생이 44.7%, 100만 원 이하가 6.2%였다. 600만 원 이상은 3.6%에 지나지 않았다.
 - 도시는 30.8%의 학생이 사교육비 지출이 없는 반면, 20.1%의 학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표 4-13. 가구소득별 연평균 사교육비 현황

단위: 만 원

가구소득	도시	농어촌	합계
100만원 이하	78.0	47.0	70.7
100~200만원	125.1	85.4	117.0
200~300만원	202.8	140.9	191.8
300~400만원	284.4	201.4	272.6
400~500만원	354.6	242.2	341.0
500~600만원	432.6	253.3	414.1
600~700만원	485.2	317.8	469.7
700만원 이상	590.2	346.0	569.2
전체	294.0	167.1	274.9

자료: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관련 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분석한 결과, 농어촌이라는 지역 요인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학교급, 지역, 성별, 아버지 학력과 나이, 어머니 학력과 나이, 가구소득,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교육비 자연로그 값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하였다<표 4-14>.
 - 지역요인 외에도 학교급, 성별, 아버지 나이와 학력, 어머니 나이와 학력, 가구소득 등의 변인과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의 변인이 독립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고등학교일수록, 농어촌보다는 도시일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수록, 부모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했지만, 방과후학교에 참여할수록 사교육비가 적었다.

- 지역요인과 방과후학교 참여 요인과의 상호작용¹⁹은 사교육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관계(B값이 -0.133)였다. 즉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수록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사교육비(자연로그)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변인 (기준값)		B	Wald χ^2	Sig
Intercept		3.900	183018659.279	0.000
학교급 (초등)	고등학교	0.120	11570180.638	0.000
	중학교	0.136	16651558.163	0.000
농어촌(도시)		-0.258	11532466.496	0.000
여학생(남학생)		0.072	10610225.806	0.000
부연령 (30대)	50대 이상	0.008	14613.706	0.000
	40대	0.020	117420.717	0.000
부학력 (중졸)	대학원졸	0.460	11235312.373	0.000
	대졸	0.381	8007263.246	0.000
	고졸	0.207	2387129.389	0.000
모연령 (30대)	50대 이상	0.059	900304.678	0.000
	40대	0.009	49050.998	0.000
모학력 (중졸)	대학원졸	0.430	9687291.252	0.000
	대졸	0.433	10824606.855	0.000
	고졸	0.247	3618945.873	0.000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700만원 이상	1.686	45532041.707	0.000
	600~700만원	1.495	35421926.586	0.000
	500~600만원	1.409	31693250.301	0.000
	400~500만원	1.263	25510297.425	0.000
	300~400만원	1.107	19615705.250	0.000
	200~300만원	0.832	10973690.711	0.000
	100~200만원	0.412	2495775.823	0.000
방과후참여(방과후불참)		-0.191	56431708.219	0.000
농어촌*방과후참여 (도시*방과후불참)		-0.133	1808288.429	0.000

주: Likelihood Ratio Chi-Square 1779632764.619(df=23, sig=0.001)

19 표 4-14에서는 ‘농어촌*방과후참여’를 의미한다.

3.3. 학업성취도

-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도시 학생에 비해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았다<표 4-15>.
 - 한국교육종단연구자료 중 학업성취도가 측정된 자료는 2년차(2006년), 3년차(2007년) 자료이다. 두 차년도의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의 학업성취도 총점을 T점수²⁰로 변환한 값을 보면 2006년(중학교 2학년 학업성취도 점수)에 도시가 50.42점인 데 비해 농어촌은 45.89점, 2007년(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점수)에 도시가 50.34점인 데 비해 농어촌은 46.70점이었다.
 -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도농 간에도 동일한 경향이였다.
 -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도농 간에도 동일한 경향이 있었다. 평준화 여부에 따라서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에 따라서 지역 간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지역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 학생은 참여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학생보다 높았다.
 - 과외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 대체로 높았는데, 농어촌의 경우는 과외시간이 아주 많은(6시간 이상) 학생이 이보다 적게하는(2~5시간)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낮았다.
 -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도농 간에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²⁰ 평균점을 50점, 표준편차를 10점으로 하는 변환된 표준점수

표 4-15. 주요 관련변인별 학업성취점수(Tscore)

구 분		2006년			2007년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성	남자	48.99	44.75	48.55	49.10	46.93	48.87
	여자	51.93	47.53	51.58	51.50	48.24	51.23
설립 유형	국공립	50.28	44.84	49.84	49.97	47.04	49.72
	사립	50.98	48.51	50.66	51.47	48.65	51.11
평준화	평준화	51.42	-	51.42	50.85	-	50.85
	비평준화	48.37	45.89	47.78	49.06	47.48	48.68
방과후 학교	불참	50.81	44.95	50.42	51.61	42.86	51.46
	참여	49.87	46.58	49.45	49.18	47.89	48.98
과외 시간 (주당)	하지 않음	46.69	44.04	46.35	46.15	44.95	45.98
	1시간 이하	48.15	44.13	47.59	48.98	47.60	48.84
	2~3시간	51.97	48.96	51.78	52.82	51.04	52.68
	4~5시간	53.09	49.21	52.88	53.29	52.58	53.25
	6시간 이상	53.63	48.75	53.31	54.68	49.14	54.39
가구 소득 (월)	100만원 미만	46.74	43.19	46.24	47.56	45.39	47.30
	100~200만원	47.85	45.74	47.58	47.49	44.99	47.13
	200~300만원	50.15	46.95	49.86	49.61	49.01	49.55
	300~400만원	52.03	46.79	51.67	51.46	50.36	51.39
	400~500만원	53.69	49.92	53.50	52.62	50.04	52.47
	500~600만원	54.19	45.62	53.85	54.51	51.13	54.40
600만원 이상	54.42	52.68	54.34	53.84	49.84	53.57	
전체		50.42	45.89	50.00	50.26	47.48	5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 한국교육종단연구자료.

- 관련 변인을 통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분석한 결과, 농어촌이라는 지역 요인이 방과후학교 참여를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 관련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성별, 학교설립 유형, 평준화 지역 여부, 지역, 과외시간, 가정의 소득, 방과후학교 참여여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의 학업성취도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로 하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²¹을 분석하였다<표 4-16>.

- 지역요인과 방과후학교 참여 요인 외에도 성별, 학교설립 유형, 평준화지역 여부, 과외시간, 가구소득 등의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일수록,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일수록, 평준화지역일수록, 방과후학교에 참여할수록,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일수록, 과외를 많이 받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 지역요인과 방과후학교 참여요인의 상호작용은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B값이 2.277)였다. 즉 농어촌 지역에 살면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았다.

표 4-16. 학업성취도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분석결과

변인 (기준값)	B	Wald χ^2	Sig
Intercept	30.806	953.450	0.000
여학생(남학생)	3.364	224.860	0.000
사립(국공립)	1.288	20.919	0.000
비평준화지역 (평준화지역)	-1.922	58.162	0.000
방과후 참여(불참)	-0.658	10.490	0.001
농어촌(도시)	-2.275	13.003	0.000
과외시간	1.029	401.133	0.000
로그소득	2.735	246.562	0.000
방과후참여*농어촌 (불참*도시)	2.277	11.338	0.001

주: Quasi Likelihood under Independence Model Criterion (QIC)= 913213.847

21 일반화추정방정식은 일반화선형모형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시계열 자료, 반복 측정된 자료에 대하여 독립,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기법이다.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가 4개 연도에 의해 동일집단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측정된 패널데이터이기에 일반화추정방정식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 요약

- 방과후학교 정책의 주요 실적과 더불어 사업 성과 분석 지표로 선정된 방과후학교 참여율, 사교육비, 학업성취도 변화 등에 대하여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도농 간 성과차이를 분석하였다.
- 학교급에 관계없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았고, 지역요인 이외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결정하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참여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어촌 학생의 사교육비는 도시 학생의 과반 수준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시와의 사교육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도시보다는 농어촌 학생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어촌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도시 학생보다 낮았는데, 방과후학교의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 격차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한 학생의 주요 개인특성을 통제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농어촌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더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5 장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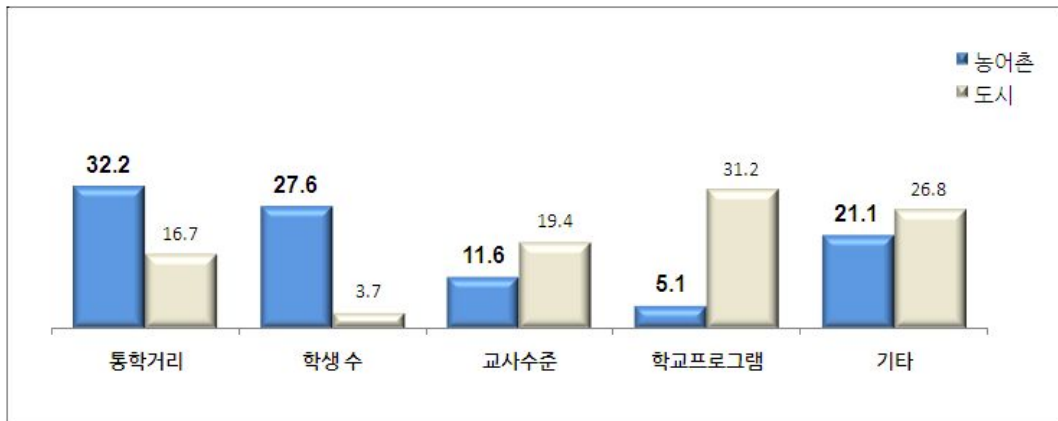
- 농어촌 영향평가는 정책이 추진될 때 도시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특성(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②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수혜자 ③ 농어촌 사업체의 영세성과 분산, ④ 농어촌 경제활동인력 특성(농업기반, 여성다수, 계절제 근무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적자원, ⑥ 사회자본과 민간 부문 인적자원 부족)을 감안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정책 효과의 도농 간 균형 또는 농어촌에 좀 더 많은 배려를 위해, 농어촌 인지적 관점(rural perspective)에서 방과후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선행 연구와 전문가면담 및 협의회를 통해 도출하였다.
- 방과후학교 정책은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수혜자, 사회자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²² 방과후학교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제외하고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1.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으로 인한 방과후학교 참여 제약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가 도시 학생보다 높다. 그런데 농어촌에서는 지리적으로 서비스 수혜자(학생)가 흩어져 있는 반면 교통여건은 열악하기 때문에,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농어촌 교육에 있어 학생의 통학문제는 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다.
 - 농림수산식품부(2011)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학부모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불만족하는 부분으로는 ‘통학거리’가 32.2%로 가장 높았고, ‘학생수’ 27.6, ‘교사수준’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1>.

그림 5-1. 초·중학교 교육의 불만족스러운 부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 도시 학생들은 다수가 걸어서 통학을 하지만, 농어촌의 학생 다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통계청(2010)의 학생 통학수단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이나 읍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가장 많은 통학수단은 도보(43.2%)인 반면, 면지역에 사는 학생은 시내·좌석·마을 버스(34.5%)였다<표 5-1>

표 5-1. 지역유형별 학생(12세 이상)들의 통학수단 현황

통학수단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전국
걸어서	43.2%	43.3%	29.1%	42.4%
승용차 소형 승합차	6.2%	12.4%	15.8%	7.2%
시내·좌석·마을버스	26.8%	25.3%	34.5%	27.2%
통근·통학버스	6.7%	8.2%	10.3%	7.0%
고속·시외버스	0.9%	1.6%	1.9%	1.0%
전철·지하철	6.2%	1.1%	0.4%	5.5%
기차	0.1%	0.4%	0.2%	0.2%
택시	0.2%	0.2%	0.2%	0.2%
자전거	1.7%	2.5%	1.6%	1.8%
기타	0.3%	0.4%	1.0%	0.3%
복합수단	7.6%	4.7%	5.0%	7.2%

자료: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 농어촌, 특히 면부의 경우 버스 운행횟수가 적지 않아, 한번 버스를 놓치면 학교에 지각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은 버스 시간에 맞추어 도시지역이나 읍부에 사는 학생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고, 방과후에도 버스 시간에 맞추어 프로그램 일정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도 학교로부터 집까지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학교의 모든 강좌가 이들의 통학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끝나도록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

멀고먼 등교길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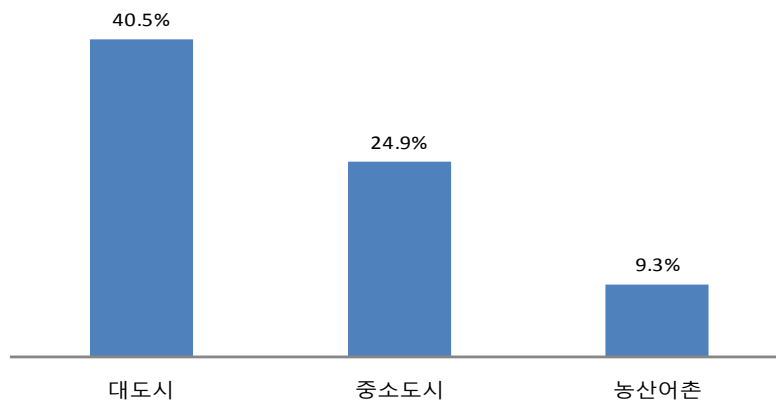
경북 안동의 A초등학교를 다니는 B어린이는 7시 남짓이면 집을 나선다. 등교시간은 8시30분이고 학교와 집까지 거리는 차로 20~30분 거리이지만 농삿일에 바쁜 엄마, 아빠가 매일 데려다주는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20여 분을 걸어 버스를 탄다. 학교까지 가는 일반버스도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면 지각을 면하기 어렵다. ……버스를 놓친 경우 1~2시간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아이들도 종종 나타난다. 농한기에는 부모들이 아이들 통학을 책임질 수 있지만 농번기에는 새벽부터 농삿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통학을 시켜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일부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학원에 등록시키고 있다. 학원에서 버스로 아이들을 통학시켜주기 때문이다. C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잘 마련해도 농삿일로 바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문제를 고민스러워한다”면서 “결국 학부모들은 매월 일정액을 내면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져주는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2. 부족한 민간부문의 인적 자원과 교사들의 업무 가중

- 도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 업체가 많고, 교사 이외에도 강사로 활동할 외부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이 있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교사 그리고 학교 밖에서 동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인적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다.
 - 대도시 학교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40.5%, 중소도시는 24.9%인 반면, 농어촌의 학교는 9.3%에 그치고 있다<그림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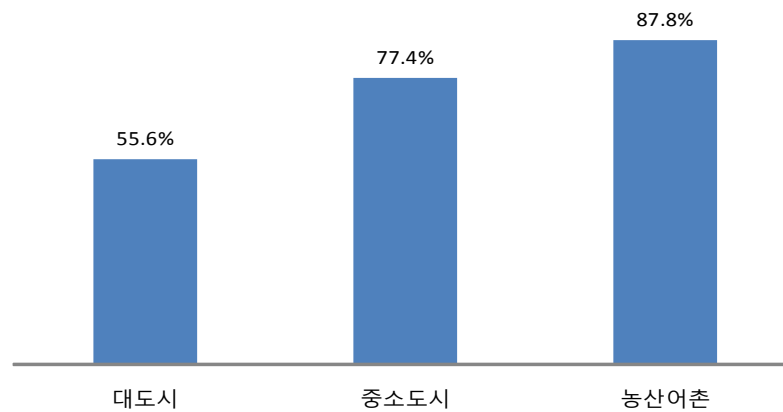
그림 5-2. 방과후학교 운영 민간위탁 비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대학생 멘토링, 엄마표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한 예로 대학생 멘토링의 경우 대학생 멘토가 없는 학교가 87.8%인 반면, 대도시는 55.6%, 중소도시는 77.4%로 상대적으로 농어촌보다 낮았다<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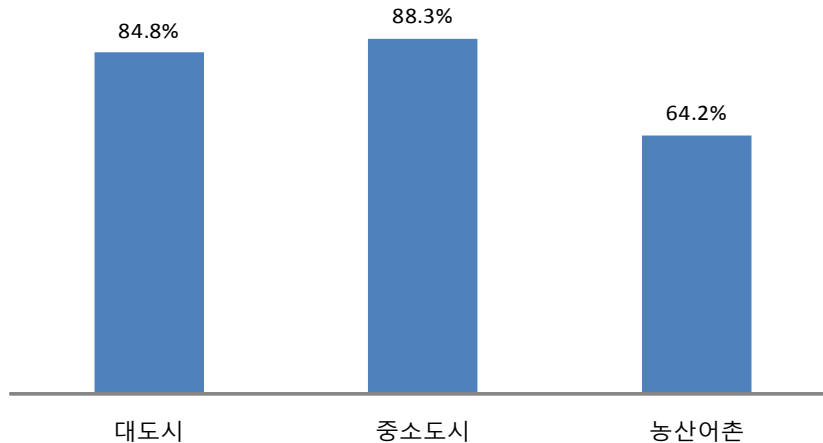
그림 5-3. 대학생 멘토 확보 학교 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이에 따라 교원들이 방과후학교 관리뿐만 아니라 강사로 활동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 학교에 근무함으로써 가중된 업무에 더해, 농어촌학교 근무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방과후학교에 활동하는 외부강사 비중이 도시 학교의 경우 80%를 넘는 반면(대도시 84%, 중소도시 88%), 농어촌 학교의 경우 64%였다<그림 5-4>.

그림 5-4.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비중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학생수가 적다보니 농어촌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장교사(겸직, 전담)를 두는 비율도 도시에 비해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자료(2010)에 의하면 방과후학교 부장교사제를 실시하는 대도시 학교는 75.0%인 반면에 농어촌은 51.9%였다.

방과후학교로 인한 교사 업무 가중²⁴

…전라북도 도내 현직교사 1,701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업무가 가중(매우 가중 16.2%)됐다고 응답했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39%). 방과후학교 수강료 관리 및 강사 관리 등 추가업무로 인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불만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가장 시급한 것으로 '강사진 인력 풀 운영'(44.9%)과 '방과후 전담 행정요원 확보'(32.6%)를 꼽았다.

24 2008년 2월11일자 새전북신문 기사

1.3. 소규모 서비스 수혜자로 인한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

- 학교에 대한 불리한 접근성과 더불어, 농어촌 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도시학교에 비해 충분한 강사료 지급이 힘들고, 이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강사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강의의 내용과 수강 인원, 지역의 학원 수강료, 강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결정된다. 보통 학생 1명에 월 3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학생수가 많은 곳일수록 강사료²⁵가 높게 책정이 된다. 2010년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27,226원인데, 대도시의 경우 30,301원, 중소도시 27,115원, 농어촌 24,987원으로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표 5-2>.
 - 이를 기준으로 보면 20시간을 일하더라도 6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상당수 강사들이 ‘거리가 멀다’,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일선 학교들의 설명이다.

표 5-2. 방과후학교 외부 강사 시간당 강사료

단위: 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대도시	35,980	25,260	27,121	15,919	22,652	37,356	30,301	27,125
중소도시	33,608	30,182	22,784	16,841	18,177	30,424	27,115	28,070
농어촌	29,640	14,144	19,065	15,621	18,251	27,535	24,987	18,057
전체	32,521	23,031	22,670	16,421	19,780	32,313	27,226	24,33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내부자료

- 일반교과와 관련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들에 의해 운영이 가능하지만,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외부 강사에 의존하게 되

²⁵ 학교별 방과후학교 강사료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는데, 농어촌의 경우 관련 강사 확보가 여의치 않아 도시 학교에 비해 개설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도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비록 도시에 비해 참여율이 높지만 특기·적성과 관련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 특히 초등학교 특기·적성 강좌를 중심으로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제약이 두드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2010) 내부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미술강좌가 없는 경우가 대도시는 4.9%, 농어촌은 25.5%였고, 체육강좌가 없는 초등학교가 대도시는 15.0%인 반면, 농어촌은 40.2%였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구인난²⁶

농어촌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수업을 맡길 우수 강사진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내 농어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25곳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농어촌) 학교는 우수 강사진 확보를 방과후학교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실제 A학교는 여름방학에 학생이 원하는 음악, 체육 등의 특기·적성활동 방과후 수업을 개설하려 했지만 우수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포기했다. 또 울주군의 한 학교는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수준별로 편성하려고 영어회화가 가능한 강사를 모집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수준별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방과후학교 수업을 할 우수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교사를 방과후학교 강사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특기·적성 과목은 우수한 실력을 갖춘 강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26 2011년 8월 2일자 울산신문 기사.

2. 정책 개선 과제

- 도농 간 정책 성과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방과후학교 정책은 도시보다 농어촌에서 그 성과(높은 참여율, 사교육비 감소, 학업성취도 제고)가 좋았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농어촌 인 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극복과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7월에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에서는 ①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자율 운영, ② 3월 이전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3월 초부터 운영 개시, ③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돌봄기능 강화, ④ 방과후학교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교원의 업무부담 완화, ⑤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일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확대 운영 등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되어 지적되었던 많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도 강사 확보 방안, 전원학교 등 기존사업과 연계, 교사연수 강화, 운영모델 다양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다루지 않은 과제를 중심으로,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의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1. 통학버스 통합운행을 통한 농어촌 학생 통학수단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안정적인 통학수단의 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농어촌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운영되던 통학버스를 통·폐합 학구 외의 다른 원거리 통학생도 이용 가능하도록 통학편의를 확대 제공하고, 권역별 통합관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 및 행사참가 등의 차량지원을

통해 학교운영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절감하고, 통학버스의 활용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서 폐교가 생기면 그 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본교에 통학버스가 배정이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학교는 통학버스가 5대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대도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통학버스가 많은 학교는 관리 문제로, 없는 학교는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경남, 전북)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상도 교육청은 2009년부터 농어촌지역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학교별로 관리하는 통학버스를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 2007, 2008년 시범시업을 거친 후 도입된 이 제도는 교육청 주관하에 군 단위는 관내 통학차량과 운전원 소속을 지역교육청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되 지역에 따라 권역별로 중심 학교를 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원거리 통학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 단위는 지역교육청 통합관리나 단위학교 관리방식 중 자율적으로 선택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통합관리를 선택한 지역교육청에 운행노선과 횟수의 증가에 따라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직영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있다.
 -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 통합관리 운영차량(직영)을 기준으로 16~30대는 1명, 31~45대는 2명, 46대 이상은 3명의 운전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범교육청 및 통합관리를 시행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 직영차량 1대당 2009년도 차량운영비를 기준으로 차형(대형, 중형, 소형)별 연간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비를 지원(대형 2,300천 원, 중형 1,304천 원, 소형 927천 원 추가 지원)한다.
- 최근(2011년)에는 전북교육청에서도 ‘농어촌 통학차량 운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북 농어촌 지역 모든 학생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 내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학생들의 등하교와 방과후학교 참여 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통학버스 통합운영은 농어촌에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간 방과 후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한다. 농어촌의 인근 학교 간 방과후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부족한 민간자원 및 우수강사 확보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특히 농어촌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고 규모화된 프로그램 이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권장할 만하다. 농어촌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지자체 단위의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학교 간 통학버스 통합운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 내 각종 공공기관의 유휴 차량의 통합운영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경남 산청군의 통학버스 통합관리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2008년부터 ① 통·폐합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 제공을 확대하고, ②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에 통학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부담 경비를 절감하고, ③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어촌 학생들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④ 지역교육청 집중관리를 통해 통학버스 및 운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⑤ 효율적 차량관리를 통하여 교육경쟁력 강화와 통학편의 확대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군내 통학버스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교육청,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개교에 대한 30여 대의 통학버스(용역 7대 포함) 전 차량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운영하여, 학교별 탑승 학생수와 승차정원을 감안하여 차량을 재배치하고 있다. 교육청 배치 차량(대형버스)을 이용해서는 교육청 행사 및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편의 지원을 위해 배치 학교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교육청 내에 다음과 같은 업무 분장을 두고 있다.

- 관리담당: 통학편의 확대를 위한 기본업무, 통학버스 배차 및 노선 조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차량 점검·정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품의
- 총무담당: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
- 경리담당: 통학차량의 관리전환·취득·매각 업무, 통학차량 보험 업무, 차량 용역 계약 업무, 차량 점검·정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운영비(유류비, 수리비, 환경개선 부담금) 지출 업무

2.2.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요원의 확보

-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더불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강사요원 보충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라 활용되고 있는 교대·사범대 졸업생 자원 그리고 퇴직 교원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00명 중 4명 합격...교원 임용시험 대란²⁷

“임용고시 합격률이 올해 4%밖에 되질 않아요. 사범고시보다 더합니다. 8년간 공부해왔지만 나이 30이 넘은 지금 제게 남은 건 3번의 ‘보따리 교사’ 경력과 5번의 임용고시 낙방뿐이네요.”

… 지난 2006년부터 매해 치른 임용고사에서 계속 낙방했다는 A씨는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라며 사범대 열풍이 불던 지난 2003년 사범대에 진학했지만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변해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의 유명 사립고 3곳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기도 했지만 ‘보따리 교사’나 다른없는 기간제 교사였을 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고시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11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기준으로 현재 A씨와 같은 임용고시생은 전국적으로 5만여 명. 하지만 이들 중 교단에 설 수 있는 사람은 5%도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임용대란’이다. 올해의 경우 전국 2,402명 모집에 5만 1,429명이 몰려 경쟁률은 21.4대1, 합격률은 약 4.6%에 불과했다. 합격률 5%대인 사범시험을 뺀치는 ‘고시(考試) 아닌 고시(苦試)’인 셈이다. 지난 2006년 임용고사 경쟁률인 12대1과 비교해보면 5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뛰었다. 갈수록 좁아지는 임용고시 문턱에 주저앉는 장수생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임용고시 4수생이던 한 수험생이 중등 임용고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낙방에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27 2011년 1월 27일자 문화일보 기사

- 최근 임용고시의 경쟁률은 초등의 경우 경쟁률이 4대 1, 중등의 경우 20대 1에 이르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재수, 삼수 심지어 오수까지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사범대생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다. 이들 인적 자원들이 농어촌의 방과후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일정기간 이상 농어촌 방과후학교 경력을 쌓을 경우 교사 임용에 있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일정 교원 양성 코스를 이미 이수하고 교원자격증을 획득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과다 경쟁상태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다. 특히 농어촌 학교에 필요로 하는 교사 인력은 남들보다 임용고시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할 열정을 가진 인력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방식으로 임용고시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 인력이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또는 경우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이들의 진로와 농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 현행 교육공무원법(제11조2의 부칙)에서는 채용시험 공개전형에 있어 지역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한 예로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이화여대 사범대(초등) 및 한국교원대 졸업자에게 지역 가산점 4점을 부여하고 있다. 1, 2점차가 당락을 좌우하는 실적에서 이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각 지역별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부칙 내용(제7223호, 2004.10.15)

제11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관련)<개정 2008.03.14>

1.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 사범대학 초등교육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다만,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자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 현재의 가산점 제도를 보완하여, 특히 강사확보가 어려운 면지역이나 도서벽지 등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이상 방과후학교 강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용시험 수험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한편 퇴직교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기간제 교사 보다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 퇴직교원의 경우 대다수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농어촌 교육에 대한 헌신의 뜻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는 교통비 정도만을 보조해주더라도 농어촌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 특히 퇴직교원의 경우 오랜 교직 경력을 토대로 농어촌의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 상담을 통해 이들 취약계층의 교육 문제 해결까지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 다문화학생 도우미²⁸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우리말 교육과 기초학습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평창교육청이 다문화가정 학생 도우미 강사를 지원, 학습효과를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평창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군내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재학중인 평창·약수·안미·장평초교 등 4개 초등학교를 선정, 퇴직 교원 등 다문화학생 도우미 강사 2명을 채용해 다문화 어린이들의 지도를 맡기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다문화가정 학생 도우미 강사는 1명이 2개 교를 맡아 1주일에 4시간씩 학교를 방문, 다문화 어린이들의 우리말 교육과 기초 학습을 지도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도우미 강사가 활동에 들어간 이후 군내 각 초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우리말 익히기와 글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 적응력이 높아져 전담강사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 농어촌 방과후학교에서 활약할 또 다른 강사자원으로 군인력이 있다. 대다수 군부대가 농어촌에 위치해 있는데, 농어촌 학교 차원에서 보면 군인들은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 사회 전반적으로 고학력화에 따라 많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군에 입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농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강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군인 중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해 관심이 있고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소정의 연수를 시킨 후 순회강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군인 선생님’이 방과후 학습지도²⁹

충북 증평군 도안면 ‘꿈망울단지’ 공부방에는 최근 ‘군인 선생님’들이 학생들 공부를 지도하고 있다……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20여 명이 모여 공부하고 있는 공부방에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도안면 정무성 예비군중대장은 인근 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 가운데 학생들을 지도할 학습교사 모집에 나섰다. 그는 지원자 가운데 2161부대 신모(23.서울대 대학원 재학) 중위와 도안면 예비군중대 연모(21.전북대 재학) 일병을 선발했고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 나와 학생들에게 영어와 과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신 중위와 연 일병은 “열심히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며 “군 복무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부대와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수업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도 “군인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아보니 재미도 있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친절한 군인 선생님들이 계속 수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 이밖에도 대학생이 농산어촌지역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나 멘토로 활동한 경우 인센티브 방안(해당 학교의 교생실습에 우선순위 제공, 교생실습시간 인정, 학점 인정, 교원임용 시 우대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교육봉사제를 필수학점화하였으므로 사범대학 교육실습의 일부를 멘토링 학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김홍원, 2010).

2.3.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²⁹ 2010년 9월 29일자 연합뉴스 기사

있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 기관 또는 민간 위탁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지역 사회 공헌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를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주시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공주시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유관기관의 교육기부를 유치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은 민간 위탁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표 5-3>.

표 5-3. 공주시의 방과후학교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 분	유관 기관	내용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주시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공동 운영
대학생 교육도우미	공주교육대학교	◦ 대학생 교육도우미 지원(초등)
	공주대학교	◦ 대학생 교육도우미 지원(초, 중등)
역사, 문화 예술교육	충남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자연을 담은 우리 문화 교실(충남교육연구소) - 신나는 미술놀이(임립미술관)
		◦ 예술단체 주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쉽고 재미있는 무용이야기(떼아뜨르현대무용단) - Oh감! 전통놀이(우리문화전문연희단체 '꾼') - 창의적인 음악교육 - <꼭꼭 숨어라...찾 ~왔다!> -전통놀이 속에서 숨은 춤 찾기 - 연극과 만나기! <나는야 연극배우>
		◦ 약기기부은행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강사 연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어린이 인문·역사 영재반 운영
	공주대박물관	◦ 2011 문화예술기관 문화학교 운영
	금강아트센터	◦ 도자기 공예 및 미술교육
	백제문화예술네트워크	◦ 새로운 시선으로 표현하는 만남전(한지공예) ◦ 꿈꾸는 행복 이야기(말랑 말랑 점토놀이)

구 분	유관 기관	내용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 드라마 연극 체험프로그램
	충남교육연구소	◦ 책 속의 길 찾기 ◦ 자연미술교실
저소득층 돌봄	지역아동센터 (9개소)-2개소 추가	◦ 저소득층 돌봄, 특기적성, 교과학습, 체험학습 ◦ 학교 돌봄교실 종료후 지역아동센터에서 2시까지 연계 운영
	공주지역 자활센터	◦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제공
생태환경	충남산림환경연구소	◦ 숲해설사 지원, 산림환경 교육
	농업기술센터	◦ 원예체험 및 교육농장 프로그램
외국어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중국어회화 강사 및 프로그램
외부강사 질관리	충남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문화예술) 연수
독서교육	(사)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	◦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자료: 공주시·충남공주교육지원청, 2010. 내부자료.

- 효과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약(MOU) 체결은 물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관련 운영협의회와 실무자들의 모임을 가져, 서로 간의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DB 구축과 더불어 관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연말에 관계자들이 모여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원한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세금 경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4. 농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지원시스템 강화

- 농어촌 방과후학교의 활성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농어촌과 관련한 운영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이 보강되고, 농어촌 학교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가 적어도 한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 144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는데, 경북을 제외한 지역에 대부분 지역교육청 단위로 하나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있는 셈이다.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방과후학교 기획·연구, 우수강사 확보,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컨설팅 및 지원, 방과후학교 관련 정보 공유, 단위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 이러한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적절한 역할수행이 도시보다 더 절실하다.
 - 앞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통학버스의 통합운영, 강사확보 등도 결국은 지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림 5-5.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

<p>【기획·연구】 지역사회의 여건 및 방과후학교 수요분석, 지역단위 방과후학교 발전 전략 수립 등</p> <p>【우수강사 확보】 단위 학교에 우수 강사 연계, 강사 연수, 강사 관리 및 평가, 우수 강사풀 구축, 수요자에게 강사 정보 제공 등</p> <p>【단위학교 지원】 강좌 개설 전 수요 조사, 강좌별 수강자 만족도 조사, 학습 관리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컨설팅, 개설 강좌 홍보, 온라인 관리시스템 활용 지원, 방과후학교 관련 규정 안내 등</p> <p>【방과후학교 관련정보 공유】 방과후학교 우수 운영 사례 확산, 우수 콘텐츠 보급, 학교 간 방과후학교 운영 정보 공유 등</p> <p>【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단위학교연계</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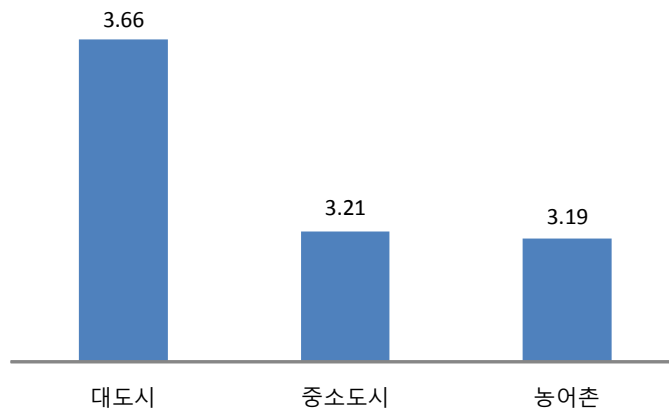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b.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공모계획.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성패는 구성원에 의해 좌우되는데, 특히 전담인력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나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자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관여하지만, 이들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기획과 행·재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업무 순환으로 인해 일선 학교의 방과후학교 지원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한 요구 수렴과 상담을 해주고, 민원행정·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전담자들이 하게 된다.

- 변종임 등(2009)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한 결과 ‘불안한 인적구성(담당 장학사의 인사이동, 비정규직 전담인력 배치)과 담당 장학사의 업무 과다’가 1순위였고, 그 다음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특히 농어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전담인력의 전문성은 도시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었다<그림 5-6>.
- 한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개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전담인력 확보 배치’였다.

그림 5-6. 교사들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5점 만점)



자료: 변종임 등(2009).

-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수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농어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는 추가로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 연수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 도시와 다르게 농어촌 지역은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수혜자가 흩어져 있으며,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자원이 희소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일선 농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이 필수적이다.
 - 추가적으로 전담인력이 보장되어야 하고, 방과후학교의 역사, 현황, 방향 등과 더불어 농어촌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중요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종 우수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만의 별도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농어촌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잠재인력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현장에서는 낮은 보수, 안정되지 못한 고용으로 인해 전담인력이 자주 교체되어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보다 의욕 있고, 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전담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취업난에 허덕이는 교대, 사범대 졸업생들이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학기간 동안에 관련 교육과 교류를 통해 좀 더 홍보하여 인적자원 풀(pool)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과 더불어 농어촌 학교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가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했듯이, 농어촌 학교에는 부장교사가 배치된 비율이 도시에 비해 낮다. 또한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배치여부에 따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0)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만족 비율이 전담자가 없는 경우 25.04%인데 비해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37.88%로 높아졌다.

-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업무부담 해소와 보다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농어촌 학교에 방과후학교 부장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에 방과후학교를 전담하는 보직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면 방과후학교 업무가 책임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교사에게도 특수업무수당 및 인사상 가산점의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다.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명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명 이내
- 3.~7. (생략)

⑥ 초등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5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른 부설초등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제2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제 6 장

농어촌 여성의 특성과 경제활동 관련 선행연구

1. 농어촌 여성의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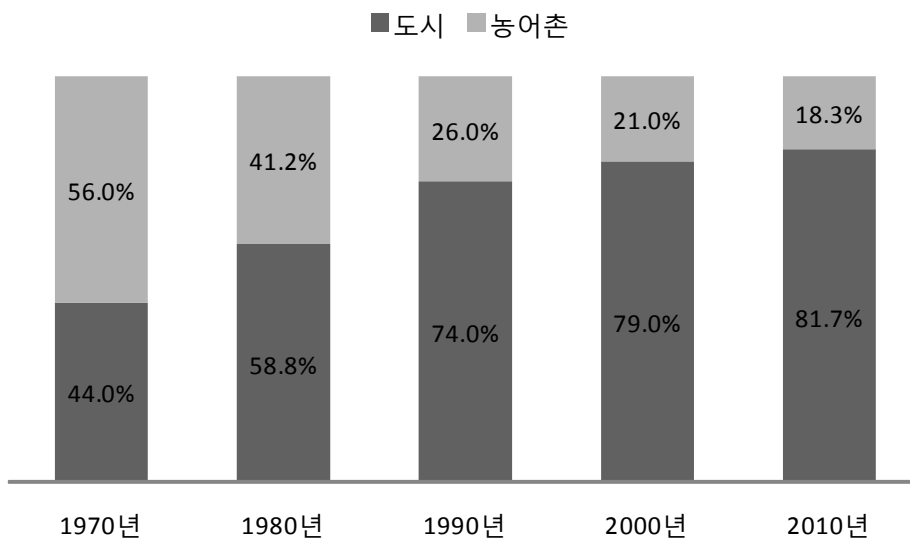
-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농어촌 여성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 과거 40년간 농어촌 여성 및 여성 성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 농어촌 여성의 수는 2010년 현재 4,345,361명(읍지역 1,694,510명, 면지역 2,031,803명)이다. 이 중 성인인구를 보면 85.7%로 3,726,313명(읍지역 1,694,510명, 면지역 2,031,803명)이다<표 6-1>.
 - 지난 40년간 전체 여성 성인인구 중에 농어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70년에는 전체 여성 중 56.0%였던 것이 2010년에는 18.3%로 줄어들었다<그림 6-1>.

표 6-1. 지역유형별 여성 인구 변화

구 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여성 인구 (명)	도시	6,443,101	10,711,607	16,100,915	18,224,626	19,804,504	
	농어촌	읍	1,419,653	2,260,493	1,798,435	1,865,178	2,063,152
		면	7,792,822	5,685,409	3,720,105	2,827,304	2,282,209
	전체	9,212,475	7,945,902	5,518,540	4,692,482	4,345,361	
여성 성인 인구 (명)	도시	4,076,244	7,380,051	12,030,971	14,500,986	16,677,057	
농어촌	읍	823,134	1,484,449	1,344,287	1,468,255	1,694,510	
	면	4,366,892	3,677,394	2,890,285	2,396,020	2,031,803	
전체	5,190,026	5,161,843	4,234,572	3,864,275	3,726,313		
전체	9,266,327	12,541,894	16,265,543	18,365,261	20,403,370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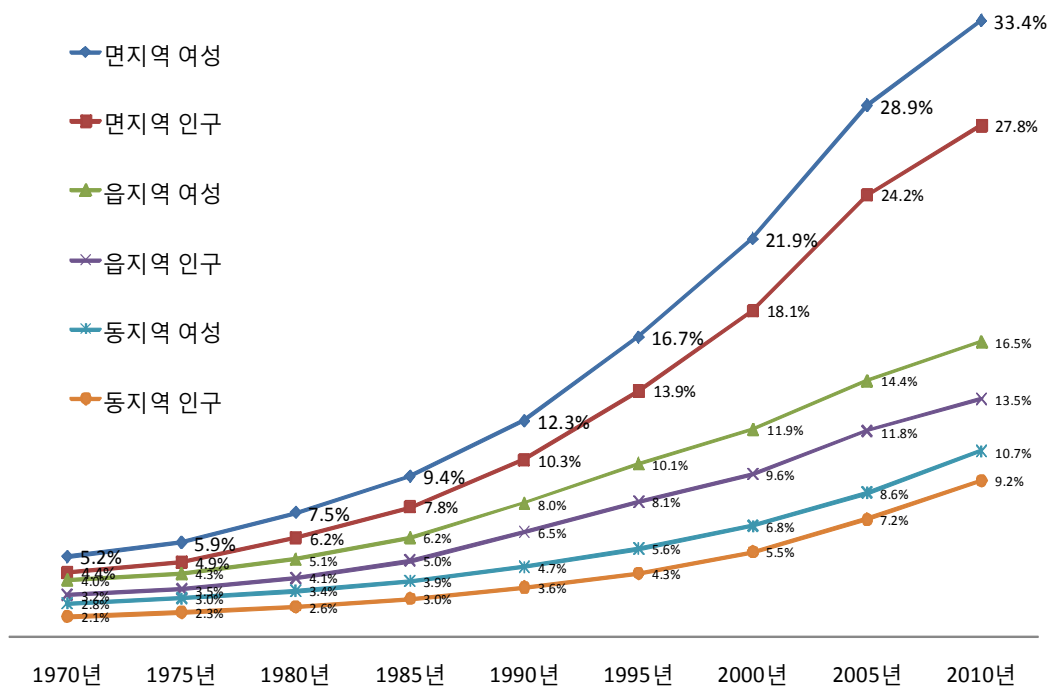
그림 6-1. 여성 성인인구(15세 이상)의 도농 간 비중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 지난 40여 년간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 더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졌고, 성별로 보면 여성의 고령화가 더 심하였다.
- 1970년 이후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을 보면, 도시(동지역)는 2.1%, 농어촌지역 중 읍지역은 3.2%, 면지역은 4.4%였다. 이후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고 2000년 이후 고령화 추세는 급격히 진행되어, 2010년 통계를 보면 도시는 10.7%, 농어촌의 읍지역은 16.5%, 면지역은 33.4%였다<그림 6-2>.
 -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읍지역보다는 면지역의 고령화, 그중에서도 여성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6-2. 전체인구·여성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변화



자료: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 농어촌 여성의 학력은 농어촌의 남성이나, 도시지역의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낮다.

- 도시(동부) 여성의 학력을 보면 중졸 이하가 33.0%, 고졸이 32.2%, 전문대졸 이상이 34.2%인데 반해, 농어촌은 면지역의 경우 중졸 이하가 64.2%, 고졸이 21.4%, 전문대졸 이상이 14.3%였다.

표 6-2. 지역유형별 성별 학력 현황

학력	남성				여성			
	동부	읍부	면부		동부	읍부	면부	
초졸 이하	13.8%	19.9%	29.9%	15.8%	20.7%	32.0%	51.2%	24.6%
중졸	10.8%	12.6%	15.2%	11.4%	12.3%	13.1%	13.0%	12.5%
고졸	31.2%	34.0%	29.7%	31.3%	32.2%	31.4%	21.4%	31.1%
전문대졸	12.8%	12.8%	9.8%	12.6%	12.1%	10.7%	6.5%	11.4%
대졸	26.4%	18.2%	13.3%	24.5%	19.7%	11.5%	7.1%	17.8%
대학원졸	3.7%	2.1%	1.7%	3.4%	2.5%	1.1%	0.7%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2.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 농어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분야는 농림어업이고, 그 다음은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순이었다.

- 전체 농어촌 여성 중 농림어업 종사비율은 32.5%였으며, 제조업은 12.9%, 도소매업은 11.3%, 숙박·음식업은 10.4%였다. 이 밖에 사회복지서비스(7.4%), 교육서비스(6.3%) 등의 분야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표 6-3>.

표 6-3.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분야

구 분	남성			여성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농업, 임업 및 어업	1.8%	26.0%	6.3%	2.0%	32.5%	7.8%
제조업	20.0%	18.0%	19.6%	12.3%	12.9%	12.4%
건설업	12.3%	10.3%	12.0%	1.7%	1.0%	1.6%
도매 및 소매업	15.0%	9.5%	14.0%	17.5%	11.3%	16.3%
운수업	8.3%	6.7%	8.0%	1.1%	.9%	1.1%
숙박 및 음식점업	5.4%	3.7%	5.1%	13.7%	10.4%	1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1%	1.2%	3.5%	2.1%	.5%	1.8%
금융 및 보험업	3.0%	2.3%	2.9%	3.7%	1.9%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	1.3%	2.3%	2.0%	.4%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1%	1.3%	4.4%	3.0%	.9%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6%	2.5%	4.3%	4.8%	2.3%	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1%	5.8%	4.4%	4.0%	4.6%	4.2%
교육 서비스업	4.4%	2.5%	4.1%	12.4%	6.3%	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1.4%	1.7%	9.8%	7.4%	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	1.6%	2.0%	1.6%	1.4%	1.6%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5%	4.3%	4.5%	6.2%	4.3%	5.8%
기타	1.0%	1.6%	1.1%	2.0%	1.0%	1.8%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어촌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도시 여성과 달리 상당수가 무급가족노동자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 도시 여성의 경우 상용 근로자(32.7%), 임시근로자(33.5%)의 형태로 일을 하고 있지만, 농어촌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은 경제활동상의 지위가 무급가족노동자(24.6%)였다<표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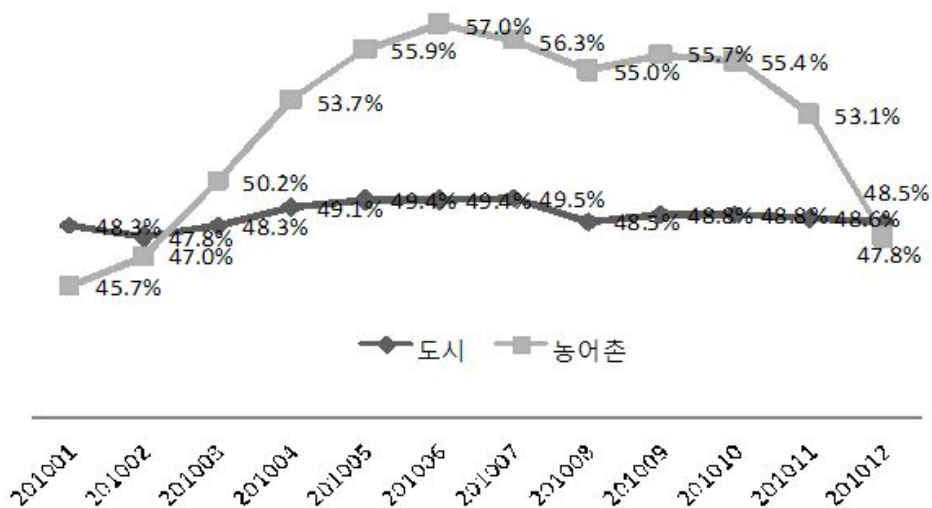
표 6-4.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

구 분	도시	농어촌	전체
상용근로자	32.7%	21.3%	30.5%
임시근로자	33.5%	22.2%	31.3%
일용근로자	11.9%	11.6%	11.9%
고용주	3.0%	2.3%	2.9%
자영자	10.9%	18.1%	12.3%
무급가족노동자	7.9%	24.6%	11.1%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심하다. 이는 농어업과의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 여성의 경우 연중 경제활동참여율 변화가 1% 미만인 데 비해 농어촌 여성의 경우 최저 45.7%에서 최고 57.0%까지 차이가 났다<그림 6-3>.

그림 6-2. 여성의 연중 경제활동참여율 변화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3.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관련 실태와 활성화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와 관련해서는 주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정기환, 1997; 김영옥·김이선, 1999; 김영옥·김이선, 2003; 강혜정·마상진, 2007; 강혜정, 2008; 정미미, 2008)가 진행되어 왔다.
- 특히 2002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8조에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03년부터는 5년 주기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가장 최근 조사인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2세이고,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배우자가 있었다.
 - 여성농업인 중 본인을 전문적인 농업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38.6%, 보조적인 농업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61.4%였다.
 - 여성농업인의 87.7%는 ‘영농 및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여성농업인 중에서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13.1%이며, 40대와 50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이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였다.
 -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중 대학 졸업은 44.4%, 고등학교 졸업은 18.6%로 나타나 여성농업인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았다.
 - 현재 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의 16.6%는 향후 농외소득활동을 희망하였는데,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에서 상대적으로 농외소득활동 의향이 높았다.
 - 농외소득활동의 종류로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에 관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가공업이 16.0%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농촌여성 일자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가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이었다.
 - 고정숙 외(2001)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을 중심으로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 실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 담당자와 우수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수사업체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 선정, 담당 지도사의 헌신적인 지도와 사업대표자의 열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정금주 외(2004)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일감맞기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① 농산물 관련 기술은 빠른 시간 안에 숙달되지만, 회계·경영·판매 등의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② 자립가능단계 3년 이내에 2회 연속적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③ 가공기술, 판매방법, 사업경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승형 외(2004)는 농촌일감맞기사업의 하나인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을 전라북도 6개 시·군 사업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각 마을에서 해당 사업품목을 선정한 이유는 특산물이거나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업장의 고용 및 참여인원은 보통 3~5명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신청인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 부재, 사업장 대표자의 경영마인드에 대한 교육·훈련 미흡 등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전달체계의 개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제공 등을 제안했다.
 - 김복규(2005)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을 분석해 농촌여성 중심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은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생산·운영·판매 등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소규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일원화와 지속적인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김원석 외(2007)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의 특성과 사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39개의 창업가 특성 항목은 9개의 요인(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도, 혁신성과 자신감, 네트워킹과 유연성, 관심, 자아성취 동기, 도전정신, 자발적인 관여,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업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위 9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76%를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성공 변수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상태와 상품의 판매상태로 측정하였는데, 두 변수를 합산함으로써 측정된 전반적인 사업성공 정도는 사업의 성장과 사업 자체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복규 외(2007)는 ‘농촌여성중심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전략 연구’에서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정책효과가 크며, 사업자 및 사업지도기관인 농업기술센터(원)의 관련 당사자 모두가 해당 사업이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히면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관련법과 정책을 분석하고, 일감맞기사업의 발전을 위해 ① 농촌여성의 소규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② 농촌여성 소규모 사업소재 발굴 및 창업과 마케팅 지원프로그램 개발, ③ 농촌여성의 소규모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추진체계와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었다.
 - 최윤지 외 (2003)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효과를 분석해 국가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 정영태 외(2009)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6개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활성화방안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매뉴얼 마련, 공통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양성코스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사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여성농민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김진화 외(2009)는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여성 평생학습

센터³⁰의 실태분석과 운영모델을 분석하면서, 다수의 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문제, 특정 여성모임(생활개선회)에 의해 주도되는 문제, 전문 강사의 부족 문제 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 센터의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촌여성 기회 및 처우의 평등실현, 농촌여성 역량개발 및 인적자원 활용, 농촌여성 자격증 및 고등학력 인증, 농촌여성 사회적 자본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윤준상(2007)은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농업교육훈련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과정은 재배기술이, 교육수준은 중급과정이 많고, 교육내용은 중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은 영농기술교육의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는데 농업생산기술, 유통판매기술, 컴퓨터 응용기술, 농산물가공기술 등의 요구가 많았다고 보고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교양과정과 전문기술과정으로 나누고, 과정별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4. 농어촌 여성의 특성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 전체 여성 중 농어촌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0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도시 여성이나 같은 농어촌의 남성들에 비해 농어촌 여성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학력도 낮은 상황이었다.
- 농어촌 여성 중 농림어업이 가장 주된 경제활동분야였다. 그에 따라 도시에 비해 무급가족노동자 비중이 높았고, 경제활동참여의 계절적 변동이 심하

30 이 사업은 농촌여성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해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 역량과 문화 교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8개 지역(안성, 강릉, 예산, 영동, 경산, 창원, 부안, 화순)에서 추진되고 있다.

였다. 농업 이외에 농어촌 여성이 주로 많이 종사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있었다.

- 그동안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여성농업인실태조사라든지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등 다수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었다. 비농업분야의 농어촌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연구는 일부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제 7 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

1. 여성일반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 추진 배경

- '04년 7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계획」 대통령 보고대회 시 여성부문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받아, '06년 7월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제4차 여성정책조정회의).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기간('06~'10) 동안에는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 그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차원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였다.
-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에 한정된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등 능력개발에 치우친 정책수단으로 인한 고용효과 미흡, 고학력 및 고령여성 지원 부재 등 정책대상 확대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은 지난 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와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 관계부처 협의('10.11~12) 및 여성정책책임관 회의('10.12.23) 등을 거쳐 2010년 12월 제2차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1.2. 비전 및 목표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비전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성장 도모’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취약계층을 포함한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② 여성의 역량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여성인력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를 확립하며, ③ 여성인력 양성과 활용이 국가발전전략 추진 속에서 주류화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7-1. 여성인력개발정책 추진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 ②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70.3% 달성
 - ③ 성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를 65.4% 수준으로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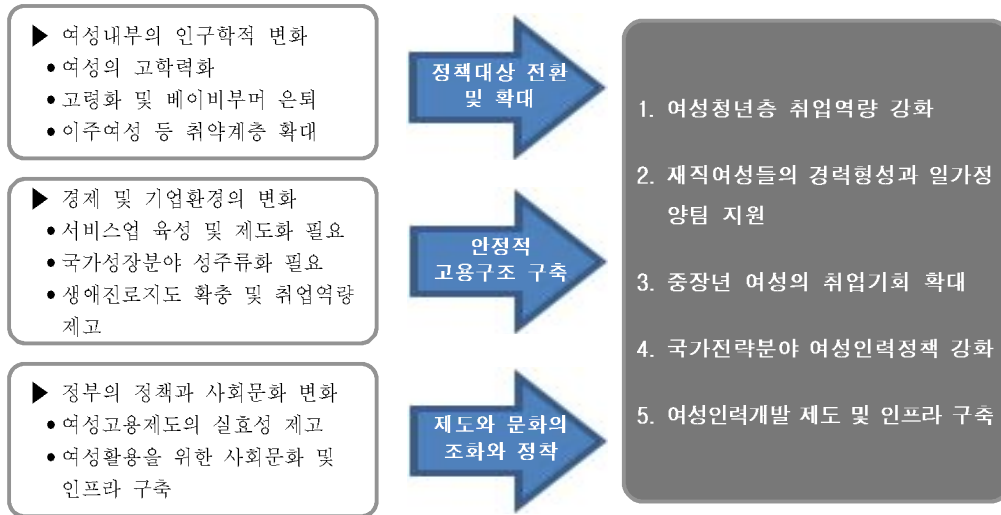
1.3.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8개 부처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일부 추진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1.4. 핵심전략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5가지 핵심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①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 ②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③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 ④ 국가전략산업분야 여성인력정책 강화
 - ⑤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그림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5대 핵심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5대 핵심전략 아래 17개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과제에 따라 주관 또는 협조의 형태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핵심전략별 중점과제와 중점과제별 세부과제를 표 7-1에 제시하였다.

표 7-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전략별 추진 과제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주관	협조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 개발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가부	
		○ 미취업 고학력 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계획 운영*		
		○ 성인지적 공학교육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여성 청소년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지원	○ 여성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	여가부	노동부, 교과부
		○ 여학생 과학기술분야 체험활동 및 진로선택 지원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강화	○ 교대 및 사범대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실시*	교과부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주관	협조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채용목표제도 등 개선	○ 여성교원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목표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노동부	
		○ 여교수 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촉진*	교과부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 성인지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 여성리더십 역량교육 및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 여성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재무 및 생활교육 실시*	국민연금 공단	여가부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개선 등 자녀양육 환경 조성	여가부	
일·가정 양립 지원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기회 확대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여가부	
		○ 근로자의 가족친화 수용성 제고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개선	노동부	행안부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여가부	
		○ 결혼 이주여성 취업지원*		
		○ 저소득층 여성 취업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가부	노동부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인턴십 및 취업지원		
	여성창업 지원 활성화	○ 여성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과정 운영		
		○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취 창업 지원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 농촌여성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농식품부	여가부
		○ 농어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가부	농식품부
		○ 여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복지부	노동부, 여가부
여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 고령자 대상 정부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가부	복지부, 노동부	
	○ 여성 노인 활용을 위한 은퇴준비 지원*	여가부	복지부, 노동부, 농식품부	
국가전략 산업분야 여성인력 정책 강화	국가전략분야 인재 양성사업의 성평등성 제고	○ 녹색성장 및 성장동력사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여가부	전 부처
		○ 주요 인력양성사업의 여성참여율 제고	여가부, 교과부	
	미래유망산업 분야 여성 진출 촉진	○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교과부	여가부
		○ 예비 전문직 여성을 위한 멘토링 및 커리어 도전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관계 부처	
			주관	협조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	교과부	
		○ 문화 예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	문광부	
	범국가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여성인력정책 활성화	○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여가부	지경부, 교과부, 지방자치단체
		○ 지역 고학력 여성인력개발 강화*		
여성인력 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	○ 정책전달 및 조정체계 정비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 인력개발 사업의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여가부	전 부처
	여성인력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 광역 여성인력 거버넌스 구축*	여가부	지경부, 교과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가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 운영*	여가부	
		○ 지방자치단체 여성인재개발사업 실시*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주: 세부과제 중 * 표시는 신규사업임.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5.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 2011년 시행계획에서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에 따른 17개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며, 예산은 총 7,618억 원 규모이다. 시행계획의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이다.
-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전략의 중점과제인 ‘국가전략분야 인재 양성사업의 성평등성 제고’ 부문에 전체의 약 40%(3,019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 다음으로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전략의 ‘여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18.5%)과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전략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16.9%)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전략 중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중 점과제에는 전체의 약 12%에 해당하는 90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표 7-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단위: 백만 원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 개발 지원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미취업 고학력 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계획 운영* ○ 성인지적 공학교육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7,052 (0.9%)
	여성 청소년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지원	○ 여성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 ○ 여학생 과학기술분야 체험활동 및 진로선택 지원	2,054 (0.3%)
	초·중등학교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강화	○ 교대 및 사범대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실시*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4,119 (0.5%)
재직 여성 경력형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채용목표제도 등 개선	○ 여성교원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목표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 여교수 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촉진*	1,120 (0.1%)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 성인지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여성리더십 역량교육 및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 여성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한 재무 및 생활교육 실시*	150 (0.02%)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개선 등 자녀양육 환경 조성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기회 확대	129,114 (16.9%)
	일·가정 양립 지원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 근로자의 가족친화 수용성 제고 ○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개선	17,079 (2.2%)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 결혼 이주여성 취업지원* ○ 저소득층 여성 취업지원	4,198 (0.6%)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내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 경력단절 여성에 특화된 인턴십 및 취업지원	22,542 (3.0%)
	여성창업 지원 활성화	○ 여성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 예비 여성 창업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과정 운영	-

핵심전략	중점과제	세부과제	'11년 예산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취·창업 지원 ○ 농촌여성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농어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90,703 (11.9%)
	여성 고령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령자 취업지원 강화 ○ 고령자 대상 정부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여성 노인 활용을 위한 은퇴준비 지원* 	141,212 (18.5%)
	국가전략분야 인재 양성사업의 성평등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성장 및 성장동력사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성별영향평가* ○ 주요 인력양성사업의 여성참여율 제고 	301,960 (39.6%)
국가전략 산업분야 여성인력 정책 강화	미래유망산업 분야 여성 진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지원* ○ 예비 전문직 여성을 위한 멘토링 및 커리어 도전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 ○ 문화 예술 분야 여성 진출 지원 	39,904 (5.2%)
	범국가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여성인력정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 지역 고학력 여성인력개발 강화* 	600 (0.1%)
여성인력 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개발정 책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전달 및 조정체계 정비 ○ 인력개발 사업의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
	여성인력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여성인력 거버넌스 구축* ○ (가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 운영* ○ 지방자치단체 여성인재개발사업 실시* 	-
총 계			761,807

주: 1) 세부과제 중 * 표시는 신규사업임.

2) 시도계획 제외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1a.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2011년 시행계획.

2. 여성일반을 위한 세부사업: 새로일하기센터사업

2.1. 추진 배경 및 현황

- MB정부는 국정과제 중점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2년까지 100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 '08년 6월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가 운영('08.12.6 시행)되기 시작했다. '08년 11월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09년 2월 50개소를 최초 지정·운영하기 시작했고, '11년 1월 기준 총 90개 새일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새일센터는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여 지정하였다. 2009년에는 72개소였던 것이 2010년 77개소로 늘어났고, 2011년에는 90개소로 확대되었다.

2.2. 목적

- 사업 목적
 - 새일센터사업은 출산·육아 부담,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경제적 곤란, 실직 등으로 인한 구직 희망 여성의 일자리 지원 및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비전하에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 ①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② 기업의 구인난 해소
 - ③ 일-가족 양립 지원

2.3. 추진주체

- 새일센터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³¹

지역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관리 등 일반운영 예산을 부담하고, 직업 상담,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각 사업주체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 새일센터 추진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
-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새일센터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 새일센터 운영 및 사업전반 총괄
-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과정 개발
- 여성 구인·구직 DB 구축·관리
-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 등 새일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지방자치단체]

- 자체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신청기관 현장실사 및 추천
- 사업추진 계획서 승인
- 종사자 현황 관리
-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총괄·관리: 자체 사업계획 수립·시행
- 새일센터 조직·인사·급여·회계 기타 운영관리 규정 승인
- 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 보고

[고용센터]

- 집단상담 프로그램 비용 지원 및 지도 점검
- 민간위탁기관(여성회관 제외)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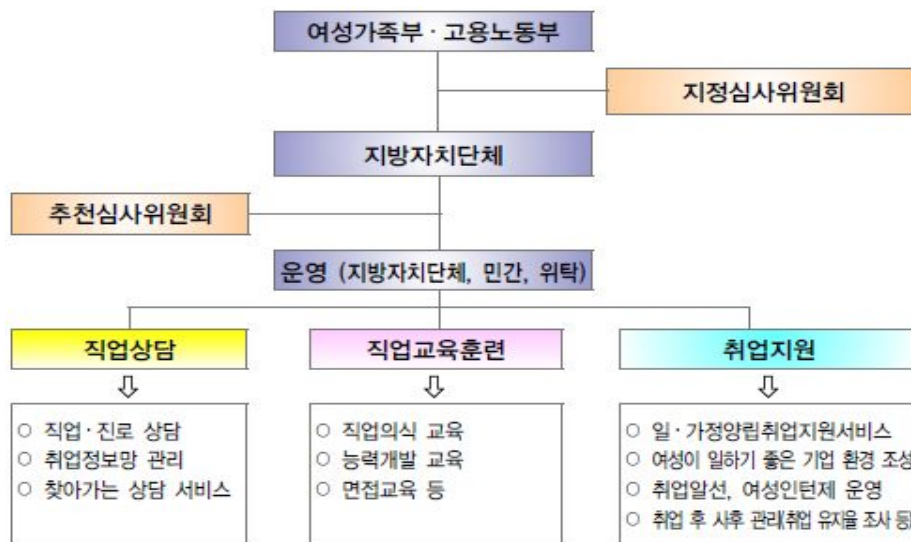
31 여성가족부는 일반회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 재원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08년 4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간 역할분담에 합의하였다.

- 워크넷 등 구인·구직 인프라 지원

[새일센터]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사업 추진상황, 추진 실적 등 분기별 보고

그림 7-3. 새일센터 사업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1).

2.4. 투입 예산

- 새일센터 지원 예산은 약 330억 원(여성가족부 239억 원, 고용노동부 67억 원, 지방자치단체 99억 원) 규모이다.
 -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여성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는 집단상담, 취업 후 사후관리비를 지원한다.

표 7-3. 새일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지원

사업 구분	지원 부처	센터당 지원	보조율(%)	
			국비	지방비
새일여성인턴	여성가족부	월 50만 원/인 (3개월~6개월)	80	20
결혼이민여성인턴		월 50만 원/인 (~6개월)	100	-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기관별 상이	100	-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총액의 15% 이내	50	50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설계사 배치·운용)		센터당 최소 5명 (월 120만 원 인)	50	50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인건비 69백만 원 상담프로그램 운영비 150만 원	100	-
취업 후 사후관리		4백만 원	100	-

2.5.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새일센터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그림 7-4. 새일센터 주요 프로그램



- 주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정보 관리,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직업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표 7-4>.

표 7-4.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요 사업 내용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직업상담 서비스 제공	○ 구직희망 여성 대상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진로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 부족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메이킹 등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정보 제공 및 구인·구직 정보 관리	취업정보 제공	○ 구직 희망여성에게 취업정보(여성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일자리 등), 직업교육 훈련정보(직업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소개), 고용 관련 법률정보 제공
	구인-구직 정보 관리	○ 구인 기업체와 구직 희망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구인-구직DB 관리(e새일시스템, Work-Net)
직장체험 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을 6개월 이내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 지원금을 3~6개월 간 지급
	결혼이민여성 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및 취업 후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여성을 6개월 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 지원금을 6개월 간 지급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설계사를 통해 구직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경력사항 관리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 알선 ○ 지역실정에 따라 센터별로 자유롭게 운영 * 대형마트 등 여성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제공 등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가사·양육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반찬 서비스: 밑반찬 제공으로 여성의 가사부담 완화 - 요리교실: 남편 요리교실을 통해 가사 공동 참여 ○ 자녀양육 부담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내 보육교실 운영: 직업교육훈련생 등 자녀의 일시 보육 - 돌봄서비스 지원: 학습지원, 방과후 돌봄 지원 - 가족체험: 가족화합 프로그램 ※ 새일센터 구직관련자(구직등록자, 직업교육훈련생, 취업자) 우선 대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기업 협약: 협약 추진 및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추진 ○ 양성평등교육 등: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등을 위한 전문강사 및 교육 지원 ○ 환경개선 지원: 여성휴게실·화장실, 수유실 등 환경개선 지원 * 여성친화협약기업 대상 기업당 사업비 50% 까지 지원(2백만 원 한도)
	직업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문교육: 직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교육 ○ 직무소양교육: 직무태도 교육, 취업의지 및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 ○ 취업대비교육: 이력서 작성, 면접대비 등 교육훈련생이 취업 시 필요한 구직스킬 향상 교육

3. 농어촌여성을 위한 종합계획: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3.1. 추진 배경

-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하고 여성농어업인을 전문 농어업인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의 핵심 정책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제2차('06~'10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농어업·농어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1~'15년)을 수립하였다.

3.2. 비전 및 전략

-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5대 전략분야에 따른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표 7-5>.
 - 5대 전략분야: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3.3. 투입 예산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 5개 전략분야 39개 과제에 총 7,0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1%)이 건강·의료, 보육, 문화활동 등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편성되어 있고, 30%는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 여성농어업인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과 창업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분야에는 약 1,245억 원(18%)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사업이나 후계 여성농어업인력 육성 사업 등에 배정되는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1%)이다.

표 7-5.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11-'15)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5대 전략분야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예산(백만 원)	
		'11~'15	'11년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경영인으로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 인정 ○ 여성농업인의 국민연금가입 추진 ○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209,559 (30%)	25,778 (27%)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 여성농어업인 공동 창업지원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대 	124,463 (18%)	19,246 (20%)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의 지역개발 참여 확대 ○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문 도우미 인력 육성 ○ 후계 여성농어업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 및 이민여성 정착지원 멘토 육성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8,050 (1%)	1,466 (2%)

5대 전략분야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예산(백만 원)	
		'11~'15	'11년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어업인 모성보호 및 건강·의료지원 확대 ○ 농어촌 보육시설 확대 및 보육여건 개선 ○ 농어촌 지역 공동취사 지원 ○ 여성농어업인 문화활동 지원 	359,618 (51%)	47,479 (51%)
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강화 ○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정책추진 거버넌스 구축 	-	-
총 계		701,690	93,96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2011.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3.4. 추진체계

- 중점사업별로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 포함), 그리고 다양한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수협, 농업인재개발원, 농업연수원,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마사회 농어촌희망재단, 국민연금공단, 여성농업인단체 등이다.
 - 여성농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 농촌진흥청, 농협, 농업인재개발원, 농업연수원, 여성농업인단체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도 관여한다.

표 7-6. 여성농어업인 경제활동 관련 과제의 담당 주체

전략분야	세부과제	사업 담당 주체
전문 농어업 경영인력 육성	[중점과제1] 여성농어업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창의력 및 리더십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식품부(경영조직과), 농업인재개발원, 농업 연수원,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전문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농식품부(경영조직과), 농업인재개발원, 농업 연수원, 농진청 지도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여 성농업인단체
	[중점과제2]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여성농어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농진청 농촌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 공동 창 업지원	농식품부(농촌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 발과)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중점과제2]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력 육성	
	농어촌 복지서비스 제 공인력 육성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농식품부(농촌사회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전문 도우미 인력 육성	농식품부(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중점과제3] 후계 여성농어업인력 육성	
귀농 및 이민여성 정착 지원 멘토 육성	농식품부(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농협	

여성농어업인센터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05년부터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군비와 자부담으로 추진).
- 여성농어업인센터는 공통적으로 상담, 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밖에 부정기 사업으로 농외소득 증진 사업(가공산업 등), 직거래를 통한 도농교류사업(소비자축제 등), 지도력 발굴을 위한 사업(지도자 자원발굴·개발교육 등), 각종 문화활동(취미·여가교실 등)도 수행한다.
- 이러한 활동들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방과후 학습지도, 상담사업, 가공 및 도농교류 등의 소득(보조)사업, 교육사업 등 여성농어업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로 볼 수 있다.
- 2010년 현재 전국에 37개소의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경기 3개소, 강원 3개소, 충북 3개소, 충남 3개소, 전북 7개소, 전남 4개소, 경북 2개소, 경남 6개소, 제주 6개소

여성농어업인센터 현황('02-'10)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소 수	18	18	27	34	38	39	37	38	37
지원액 (백만 원)	1,447	1,463	2,431	3,175	3,623	3,792	4,248	4,355	3,521

주: 센터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보조 85%, 자부담 15%임.

자료: 농림수산물부. 2010. 내부자료.

4. 농어촌여성을 위한 세부사업: 농촌여성일자리사업

4.1. 사업 개요 및 현황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취업기반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농업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취업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이 사업은 과거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농촌여성 중심의 소규모 사업 창업과 경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03년에 ‘농촌일감맞기사업’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이 ‘여성농업인’에서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되었다가 2004년에는 사업목적 달성을 이유로 중단되었다.
 - 이후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은 농촌여성 소규모창업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사업 공모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 가운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2년간(2011~2012년) 지원한다.
 - 개인, 부부공동, 영농조합법인,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 유형은 식품가공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문화·복지형,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 지원내용으로는 직업훈련 및 경영마인드 교육, 품질인증 상표등록 등 법률 지원과 포장 디자인, 마케팅 지원 등 상품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 전수받도록 한다. 사업계획이 타당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인건비 또는 시설·기자재 구입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1년 공모사업 결과 5개 권역에 대해 9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표 7-7>.

표 7-7.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시범사업 선정현황

권역별		사업명	사업체명	조직유형
도	시·군			
충북	괴산	임걱정 만두 제조 및 판매	괴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영리단체
전북	익산	두리두레사업단 (홈패션, 영농사업)	(사)농촌이민여성센터	비영리단체
	진안	시골맘들의 희망프로젝트 (약초 활용 효소식품가공, 천연염색 등)	진안군 여성단체 협의회	비영리단체
전남	순천	순천만 야생화 꽃차 사업	순천만야생화꽃차 연구회	비영리단체
	나주	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	천수봉전통한정식	개인
경북	영주	시레기를 이용한 그 조성물과 소백산 선돌이 밥상	영농조합법인 영주프러그육묘공장	법인
	경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탈모방지제 가공사업	(주)젠셀	기업
	상주	농촌문화교육 및 체험가공사업	송곡리 체험마을회	공동체
경남	거창	금원산 부각마을	영농조합법인 금원산마을	법인

자료: 여성가족부. 2011. 내부자료.

4.2. 투입 예산

- 사업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649백만 원 규모이다(2011년 예산 기준).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50%)으로, 각 사업당 160백만 원('11년)을 지원하기로 계획되었다.

- 위탁사업비(사업총괄기관 위탁): 89백만 원
- 연구용역비(사업모니터링): 60백만 원
- 기타 운영비: 20백만 원

○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등의 재원별 지원금액은 표 7-8과 같다.

표 7-8. 농촌여성일자리 시범사업별 지원금액

사 업 명	보조금(백만 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임격정 만두 제조 및 판매	160	80	24	56
두리두레사업단(홈페션, 영농사업)	120	40	-	80
시골мам들의 희망프로젝트(약초 활용 효소식품가공, 천연염색 등)	120	40	-	80
순천만 야생화 꽃차 사업	120	40	40	40
천년의 향기 목사고을 전통밥상	120	40	40	40
시래기를 이용한 그 조성물과 소백산 신들이 밥상	120	60	18	42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탈모방지제 가공사업	100	50	15	35
농촌문화교육 및 체험가공사업	100	50	15	35
금원산 부각마을	160	80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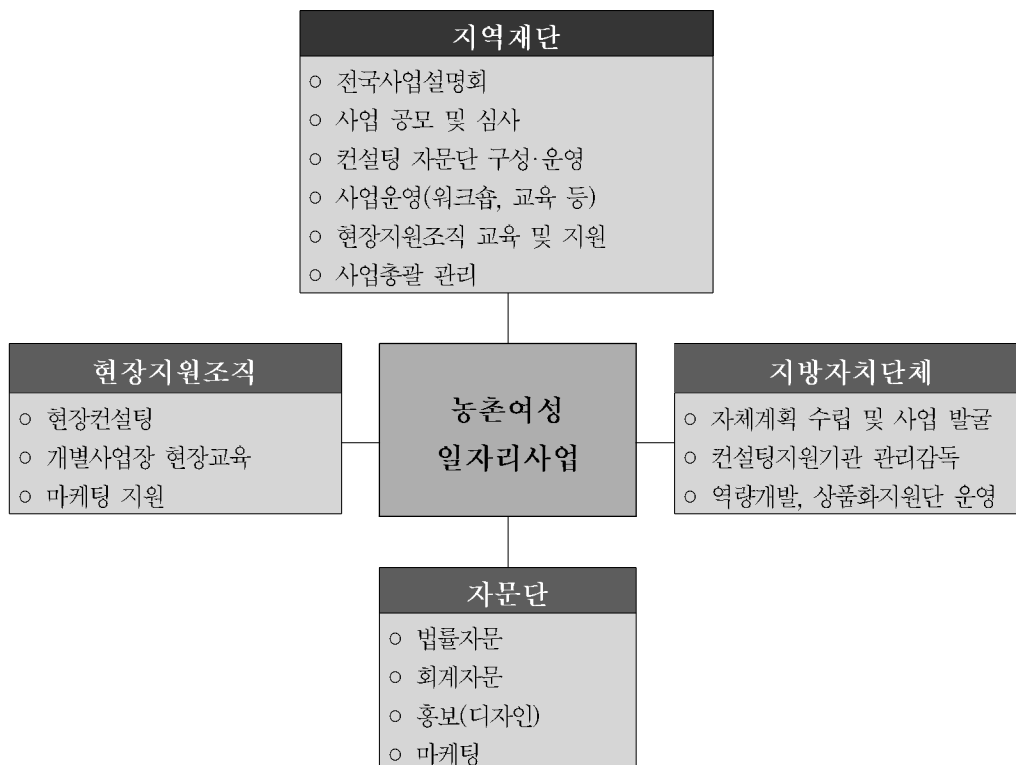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1. 내부자료.

4.3. 추진체계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지역재단을 사업총괄관리 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재단은 기본계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공모 시 지원대상 단체(기관 또는 개인)를 선정한다. 선정기관에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

- 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과 성과 평가도 실시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공모 신청 단체에 대한 1차 심사를 거쳐 시·도에 추천하며, 선정 단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정 단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총괄위탁기관(지역재단), 현장지원조직, 행정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 홍보와 관리·감독을 맡고, 현장지원기관도 선정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점검·보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림 7-5.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지역재단(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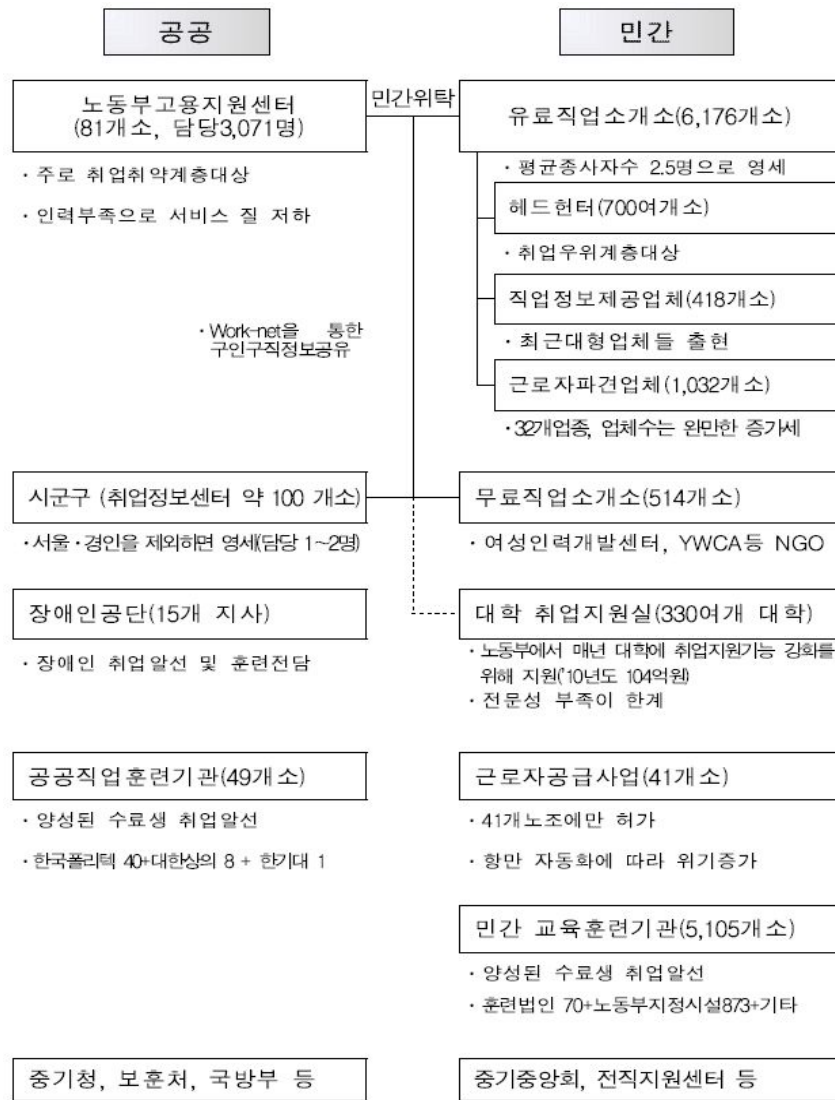
5.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기관과 서비스

5.1. 고용관련 공공기관

- 우리나라의 공공고용서비스(PES) 전달체계에서의 핵심 역할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으며, 그 외에 지자체 고용서비스 기구가 PES를 제공한다(오성욱 등, 2011).³²
 - 고용지원센터: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 6개 광역시의 지방노동청(지청) 내 하부조직
 - 취업정보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적 고용서비스기관
- 공공고용서비스의 핵심인 고용지원센터는 취업지원 및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제도를 근간으로, 구직자와 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 지자체는 지역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체적 고용서비스기관을 운영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용지원센터와의 협력보다는 독자적 취업지원사업의 성격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³² 공공부문의 직업안정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센터·일일취업센터, 국방부,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센터·일일취업안내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있다. 특정 성격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용직 등을 알선하는 일일취업센터 등은 제외하고 살펴본다.

그림 7-6. 민·관 일자리 중개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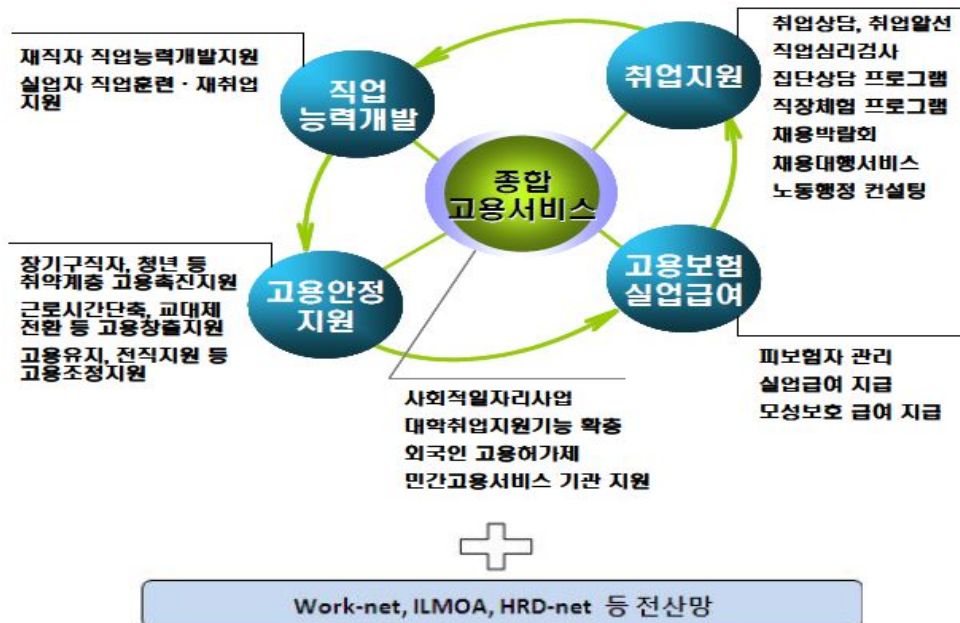


자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2010).

□ 고용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는 국가고용정책의 핵심적 전달체계로서 포괄적 고용서비스를 수행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취업지원, 고용보험관리,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업급여, 모성보호, 외국인채용 지원 등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고용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워크넷(WORK-NET), HRD-net 등의 전산망을 운영·관리한다.

그림 7-7.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자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2010).

- 특히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취업지원-실업급여가 원스톱(one-stop)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강화하였다.
 - 워크넷의 인재풀을 활용하여 인력 알선, 인력 모집·전형·선발 등 채용 대

행, 맞춤형훈련을 통한 인력 확보 및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등을 통해 구인업체에 인력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7-9. 고용지원센터 주요 업무

구 분	업무 내용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능력·적성을 진단, 개인별 취업계획 (IAP) 수립 후 취업의욕 제고·구직기술 향상·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체계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IAP(Individual Action Plan):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능력을 진단,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입각하여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인기업의 인재채용 지원	· 인재알선, 고용장려금,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채용대행 등의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센터 내 기업지원팀) · 내국인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 실업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및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 취약계층의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에 대해 훈련지원 우대 - 중소기업: 훈련비 우대,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 등 -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바우처),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생애단계별 직업진로 서비스	· 중고생·청년·취약계층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 중고생: Job School, 직업심리검사, 직업탐색교실 - 청년: CAP, 취업캠프, 직장체험 프로그램 - 구직자: 성취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직업훈련기회 제공 - 취약계층: 취업희망·성실·NEET(올라)·경력단절여성 세대군인 새터민 프로그램 등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3~8개월)하여 실직기간 동안 생계지원 -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직업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현장중심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 일자리 문제를 지역주체들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지자체·NGO·민간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 - 지자체·NGO: 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 민간취업알선기관: 취업지원 위탁 - 사회복지기관: 사회적 일자리 지원 - 노사단체: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노사공동 직업훈련 등

- '10년 3월 기준 전국에 81개 고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종합센터 47개소, 일반센터 24개소, 출장센터 10개소
 - 종합센터: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기초서비스 업무 외에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수행
 - 일반센터: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기초서비스 업무 수행
 - 출장센터: 종합센터 하부조직으로 민원인 접근성을 위해 실업급여, 취업 지원 등 기초서비스 업무 수행(1~3명 근무)
- '10년 3월 기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는 총 3,539명(공무원 3,342명, 민간직업상담원 197명)이 근무한다.
 - 공무원에는 일반직 1,866명, 상담직 1,408명, 통계직 68명이 있다.
 - 그 밖에 고용서비스인턴 802명, 기간제 구인상담원 395명, 취업지원 명예상담원 100명,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상담원 269명이 근무한다.
- 고용지원센터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³³ 68개 시·군의 경우 행정구역 안에 고용지원센터(출장센터 포함)가 위치하고, 100개 시·군의 경우는 타 시·군에 위치한 고용지원센터가 관할한다.
 -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경기도와 전북도의 경우 절반 정도의 시·군이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머지 도에서는 30~40% 정도의 시·군이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는다.
 - 전남도의 경우 행정구역 내에 고용지원센터가 위치하는 비율이 13.6%로 상당히 낮다. 86.4%에 속하는 19개 시·군은 다른 시·군에 위치한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33 '06년 이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고용지원센터의 통폐합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2010).

표 7-10. 행정구역 내 센터 소재 여부에 따른 지자체별 고용지원센터 현황

구 분	행정구역 내 센터 소재 시·군	행정구역 내 센터 미소재 시·군
특별시·광역시	1개 특별시(7개 센터) 및 5개 광역시(10개 센터)	5(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웅진군, 울주군 해당)
경기	16 (51.6%)	15 (48.4%)
강원	7 (38.9%)	11 (61.1%)
충북	4 (33.3%)	8 (66.7%)
충남	6 (37.5%)	10 (62.5%)
전북	7 (50.0%)	7 (50.0%)
전남	3 (13.6%)	19 (86.4%)
경북	8 (34.8%)	15 (65.2%)
경남	8 (44.4%)	10 (55.6%)
제주특별자치도	2 (100%)	-

주1: 출장센터를 포함함.

주2: 2011년 12월 21일 위크넷에 게시된 고용지원센터 현황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체적 고용서비스기관으로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취업정보센터는 지역에 따라 취업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 정보·지원센터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 전국의 지자체 중 약 82%에 해당하는 지자체(138곳)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약 18%에 해당하는 30개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³⁴
- 도시(100%)에서 일반시(91.7%), 도농복합시(84.3%), 군(76.6%)의 순서로

³⁴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시·군의 취업정보센터 운영 여부를 파악하였다.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등의 담당자가 다른 담당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 중 하나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15개 시·군은 별도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하였다.

갈수록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비율은 낮아진다. 군 지역의 경우 약 1/4에 해당하는 지자체(23.3%)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

표 7-11. 지역유형별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센터 운영	센터 미운영
군	66 (76.7%)	20 (23.3%)
도농복합시	43 (84.3%)	8 (15.7%)
일반시	22 (91.7%)	2 (8.3%)
대도시	7 (100%)	-
계	138 (82.1%)	30(17.9%)

주1: 시·도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축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2: 일반시나 대도시의 경우 여러 개 구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1개로 집계함.

표 7-12.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시·도	취업정보센터 설치 시·군	운영 실태
서울시 (24)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중구·서초구 미설치)	·설치지역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 ·워크넷과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시스템 동시 사용
부산시 (16)	부산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대부분 다른 업무 겸직 공무원 1명과 임시직 1명이 워크넷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
대구시 (3)	서구, 달서구, 북구	·동구·수성구·남구·달성군은 민간인 1명이 전담 ·별도 공간 없음
인천시 (11)	인천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강화군, 계양구, 부평구, 서구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1~2명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형식적 운영
광주시 (1)	광주시	·취업정보센터라고 설치되어 있으나,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
대전시		·독립된 취업정보센터가 없고,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
울산시		·독립된 취업정보센터가 없고,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

시·도	취업정보센터 설치 시·군	운영 실태
경기도 (30)	부천, 김포, 수원, 화성, 용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안산, 시흥,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구리, 남양주, 평택, 안성, 오산	·대부분 공무원 1명, 상담사 1명으로 구성 ·부천, 고양: 자치구별로 설치 ·시흥(9명), 용인(4명): 일자리센터 운영
강원도 (3)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고, 공공근로참여자 구직등록 수준
충남 (3)	논산시, 아산시, 당진군 ※ 아산시는 3월부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개편 예정, 7명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고,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구인·구직 등록하는 수준
충북 (1)	청주시(민간기관 위탁)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고, 구인·구직 등록하는 수준
전남 (1)	나주시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거의 없고, 구인·구직 등록하는 수준
전북 (2)	전북도, 전주시	·독립된 취업정보센터가 없고,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이 대부분
경남 (4)	경남도, 창원시, 의령군, 하동군	·독립된 취업정보센터가 없고, 공무원 1~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이 대부분
경북 (1)	경주시(민간기관 위탁)	·독립된 취업정보센터가 없고, 공무원 1~2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이 대부분

주: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2010).

5.2. 여성특화 고용지원기관

□ 여성고용지원센터

- 여성고용지원센터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 중 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을 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07년 시작된 사업으로, 주부 등 여성들의 접근성이 높은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설치된다.
 - 노동부는 지역 내 대형마트 등에 여성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탁사업자(기존 교육훈련기관 등)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 '09년 기준 위탁운영을 위해 센터당 5천 4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 '08년 기준 구직자 8,308명 중 2,507명(30.2%)이 취업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성부, 2009).
- '09년 기준 여성고용지원센터는 전국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7-13. 여성고용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수탁기관	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서울북부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서울남부여성발전센터	롯데마트 금천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여성인력개발센터	이마트 문현점
인천광역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마트 동춘동점
경기(수원시)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이마트 서수원점
광주광역시	광주YMCA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YMCA여성인력개발센터

- 주요 사업내용으로 구직등록 및 일자리 알선, 취업상담, 자격증 상담, 취업의 욕 고취, 직업적성 진단,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특강, 취업프로그램 연계, 취업지원행사(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개최 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심층서비스(심층상담·개인별 맞춤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로 연결하는 일도 담당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직업훈련(기초 직업훈련 및 전문 직업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93년 「남녀고용평등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부가 비영리법인 민간여성단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3곳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립·운영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01년 당시 신설된 여성부로 사무가 이관되고 명칭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변경되었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05년에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 등 일부 기능이 16개 시·도로 위임되었다. 2008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지정시설이 되었다.
- 2008년 5월 기준, 전국에 5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역별로 1~3개소 정도이다. 전국 센터의 취업률은 약 54%이다.

표 7-14.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단위: 개소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	14	3	2	3	2	1	1	7	2	1	3	2	3	3	3	1

주: 2008년 5월 기준 현황

자료: 여성부 인력개발지원과, 2008. 내부자료.

- 비영리법인 민간여성단체를 운영주체로 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8천만 원~2억 3천만 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 여성회관³⁵

-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립을 조성하고 여성의 자질 향상 및 능력 개발 등을 통해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직영 또는 위탁)된다.

³⁵ 2000년 이후 설립된 회관들은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 ‘문화’가 들어간 곳이 많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기존의 여성회관과 거의 유사하다.

- 여성회관은 지역사회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사회복지기관, 여성평생교육기관, 여성문화기관 등으로 각각 분리된 성격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복합기능의 기관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채창균·고혜원, 2001).
 -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여성회관을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 관련 시설로 규정한다. 여성복지 사업지침에서는 복지기능과 교육기능을 명시하고 있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02)에는 여성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하여 복지와 교육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였다.
- 여성회관은 2008년 5월 기준 총 139개소가 운영되는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경기도는 29개소로 가장 많고, 그 외 다른 지역의 여성회관 수는 15개소 미만이며 여성회관이 없는 지역도 있다.
-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크게 복지기능과 교육기능을 가지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복지사업: 상담, 자원활동센터, 취업안내, 보육사업 등
 - 교육사업: 기술기능교육, 취미교양교육, 사회의식교육 등
 - 기타 사업: 일시보호쉼터, 지역여성단체를 위한 시설 대여, 저소득층 예식장 사업 등

5.3. 고용관련 전산망

□ 워크넷(Work-Net, 국가고용정보망)³⁶

- 구직자와 기업 간 취업 연계를 위해 취업정보, 직업정보, 직업적성검사 등을 제공하는 국가고용정보망이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 관련 정보와 직업심리검사, 사이버 직업상담, 집단상담 프

³⁶ www.work.go.kr

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구인기업과 구직자에게 제공한다.

- 2010년 3월 기준 워크넷 취업알선망은 전국 고용지원센터(81개소), 지방자치단체(225개소), 대학(128개소) 등 전국적으로 738개소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11년까지 1천 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표 7-15.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구 분		제공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개인 대상	·직종별, 지역별, 잡로봇 채용정보 등 채용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맞춤정보서비스, 이메일 입사지원서비스, 맞춤 메일링 등의 취업 관련 서비스 제공 ·직업심리검사, 나에게 적합한 직업찾기, 자료탐색, 취업가이드, 직업지도프로그램, 사이버직업상담, 직업정보 서비스와 Job Map, 취업나침반,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 등 제공
	기업 대상	·직종별, 지역별 인재 등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관리, 채용관리, 맞춤 메일링 등의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
인트라넷 서비스		·고용센터 상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에게 구인신청 또는 구직신청을 통해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 등 취업알선 업무 ·구인구직통계, SMS/FAX,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해주는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청소년직장체험, 사회적일자리, 구인업체개척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성취프로그램,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 다양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여성 워크넷³⁷

-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는 원활한 국가 인력수급을 위해 수요자(청소년·고령자·여성·아르바이트 등) 특성별로 적합한 정보를 고객 요구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7 www.work.go.kr/women

-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1차사업(2004.10~2005.7) 및 2차사업(2005.12~2006.9)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 워크넷 사이트로 통합 개편되었다.
- * 청소년, 고령자, 여성, 기업 등 도메인을 워크넷으로 통합
- 고용·취업 종합정보 서비스 중 여성 워크넷은 여성 관련 일자리를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직업훈련·자격정보·창업정보 등 고용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취약 계층인 여성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표 7-16. 여성 워크넷의 주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여성 관련 일자리 제공(지역별, 단기, 여성유망직종별 일자리)
·여성 관련 직업훈련 정보 제공(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직업훈련기관 훈련 정보)
·여성 관련 창업 및 정책 뉴스 제공
·여성 취업가이드 및 창업가이드 정보 제공
·여성 관련 지원정책 정보 제공(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성 취업지원실 담당자를 위한 서비스(온라인 수강신청 및 수강생 관리)

□ 위민넷³⁸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로, 여성 관련 정책과 정보, 여성의 자기계발과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위기여성을 위한 채팅상담과 직업·커리어, 여성노동, 보육정보, 육아·자녀교육 등 분야별 전문상담 서비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7-17. 위민넷의 주요 서비스

구 분	제공 서비스
직업·커리어	·국영문자기소개서 코칭, 이미지메이킹 코칭, 취업·창업가이드, 채용정보 등 취업준비 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성공, 경력개발, 창업 등의 커리어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키위 (Key of Women)	·여성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Ke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정책, 정보 등 다양한 여성 스토리 제공
강의실	·어학, 자격증, IT 등의 다양한 온라인 무료강좌를 제공하여 여성의 자기개발 및 사회 진출 지원
정보광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위민기자들이 전하는 위민리포트, 특집기사, 파워칼럼, 여성리더의 리얼스토리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감성공간	·오디오북, 북리뷰, 카툰, 포토갤러리 등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사이버 공간 제공
사이버 멘토링	·여성들이 서로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 제공
상담실	·위기여성을 위한 실시간 채팅상담과 게시판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상담 ·사용자들 간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고민나눔터), 상담내용을 사례화하여 제공하는 상담 자료실, 지역별 상담소 찾기 등 제공

□ 일모아시스템³⁹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소개 및 모집정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을 기관에 제공하여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

³⁹ www.ilmoa.go.kr

표 7-18. 일모아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구 분	제공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검색 및 참여 신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사업 정보와 모집공고를 부처별, 분야별(청년인턴, 사회서비스, 단기일자리, 훈련 등), 유형별(청년층, 고령자, 취약계층, 전문인력, 일반국민)로 확인 가능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은 일자리 정보 검색(지역별, 수요자유형별, 일자리분야별, 부처별, 상세 검색)을 통해, 기관은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
행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평가관리 및 중복수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참여자, 참여기관, 지원금, 모집공고 등에 대한 등록·조회 기능 제공 - 사업 계획인원 대비 신청·선발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사업성과와 계획·신청·선발·중도탈락 인원, 지원금 지급액 등 사업실적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 성·연령·학력별 참여인원, 지원금액 등 통계 조회 가능 - 같은 기간 중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중복수혜자 조회 및 중복수혜자에 대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직업훈련정보방⁴⁰

○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과정, 훈련생 등록관리, 훈련비용지원 등과 같은 직업능력개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며,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훈련정보 제공, 온라인 수강신청 및 상담 등 평생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훈련정보 제공 등 대민 서비스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홈페이지’와 직업능력개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40 www.hrd.go.kr

표 7-19. 기타 고용 관련 전산망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구축 연도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업무 전반을 지원	2004
노동시장정보통합 분석시스템(LaMAS)	·고용전산망 관련 통계·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합리적 정책결정과 집행 지원	2002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	·학과와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적성과 흥미, 능력에 맞게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2003
공공근로시스템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업무처리 지원	1998
자활지원시스템	·고용지원센터, 지자체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전반을 지원	2000

제 8 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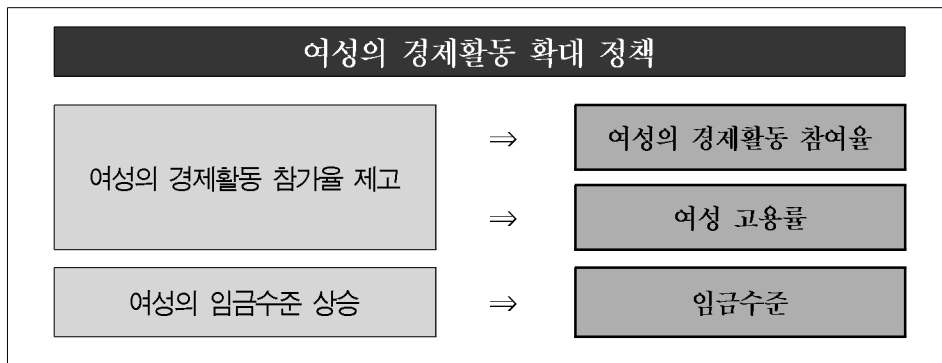
1. 분석개요

- 여성의 경제활동확대 관련 정책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과 농촌여성 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운영실적을 분석하였고, 앞선 7장의 관련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여성 경제활동확대와 관련한 성과 목표 관련 지표에 대하여 주요 관련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정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임금수준 향상 등이었다.
 -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임금수준 상승(성별 임금격차 완화)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세부사업으로 새로일하기센터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에서는 직업적 지위와 권리 확보, 생산자 조직 및 지역개발 참여 확대 등을, 농촌여성일자리사업에서는 (일자리)창업

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목표로 삼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그 성과의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관련 통계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 등을 성과 분석을 위한 지표로 삼았다.

그림 8-1.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 분석지표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성과 분석 지표로 선정된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과 관련한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 경제활동 참여율, 고용률과 관련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0)를 활용하였다.
 -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09)를 활용하였다.

2.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주요 정책의 운영 실적

-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 중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농촌여성일자리사업 등 두 사업의 세부적인 주요 운영 실적을 분석하였다.

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 새일센터 2년간의 취업인원을 중심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에 67,519명, 2010년에는 101,980명을 취업시켰다.
 - 구직등록자 대비 취업자(취업률) 비중은 2009년 51.8%에서, 2010년에는 62.1%로 향상되었다. 이는 새일센터 수의 증가(2009년 72개소에서 2010년 77개소로 증가)하고, 광역새일지원본부가 새로이 운영(2010년 8개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은 대도시, 중소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어촌(군)지역에서 더 활발하였다<표 8-1>.
 - 새일센터별 평균 취업인구를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군지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다. 대도시의 경우 평균 529.5명, 중소도시는 449.6명인데 비해, 군지역은 비록 표준편차가 다소 크기는 했지만, 568.5명으로 가장 많았다.
 - 전체 여성취업자(30~54세) 중에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비중도 대도시(0.8%)나 중소도시(1.6%)보다 군지역(4.3%)이 훨씬 높았다.

표 8-1. 지역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인구 평균

새일센터	센터당 취업인구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비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529.5	178.0	0.8%	0.2
중소도시	449.6	434.8	1.6%	1.3
군지역	568.5	829.5	4.3%	5.0
평균	473.7	441.6	1.5%	1.9

자료: 오은진(201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새일센터사업의 지역별 효과

- 새일센터가 지역별로 취업자 증가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유형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을 지역유형, 새일센터수, 그리고 지역유형과 새일센터의 상호작용 등으로 하고, 종속변인을 지역의 여성 취업자(30~54세) 중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비중으로 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역별 주요 통계자료는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 지역유형과 새일센터수의 상호작용(지역유형×새일센터수)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Sig 값이 0.05 이하). 전수 자료를 사용했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통계분석을 통해 새일센터의 설립이 지역유형별로 어디에서 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도시를 기준(대도시에 새일센터가 없는 경우가 기준값)으로 하여 중소도시에 새일센터가 하나 생길 경우 취업률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중소도시×새일센터수, Sig=0.866). 반면 농어촌(군)에 생길 경우 해당 지역의 전체 여성 취업자 중에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 취업자 비율이 증가(B값이 0.099)하였다. 이는 새일센터가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설립될 때보다 농어촌(군)에 설립될 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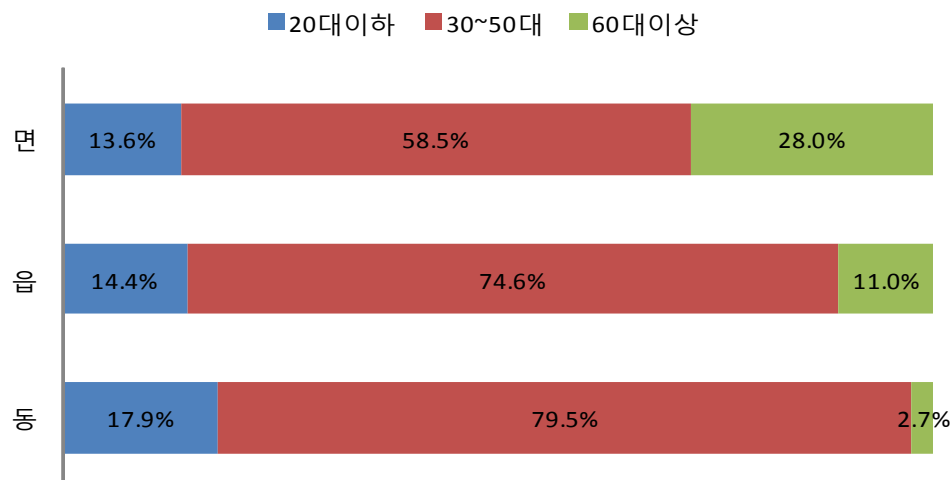
새일센터취업자비중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변인 (기준값)		B	Wald χ^2	Sig
Intercept		0.080	1.736	0.188
새일센터수		-4.03E-5	0.003	0.957
지역유형 (대도시)	농어촌	-0.089	22.740	0.000
	중소도시	0.097	1.396	0.237
지역×새일센터수 (대도시×센터수)	농어촌×새일센터수	0.099	55.382	0.000
	중소도시×새일센터수	0.000	0.028	0.866

Likelihood Ratio Chi-Square = 45.260 (df=5, sig=0.000)

-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4.7%로 가장 많고, 30대가 31.2%, 50대가 25.5%를 차지한다. 즉 주 이용고객은 30~50대 여성이다. 하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도시지역(동지역)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 충북새일본부(2011)의 자료(주로 새일센터보다는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취업설계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취업지도의 성과 자료임)를 보면 도시(동)지역의 경우 3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9.5%였지만, 면지역의 경우는 58.5%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신 60대 이상의 비중이 28.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8-2>.

그림 8-2. 새일센터 이용자 연령 분포



자료: 충북새일본부. 2011. 내부자료.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사람들의 학력별로는 고졸자, 고용상태별로는 상용직, 직종별로는 현장인력보다는 사무관련직이 많았다<표 8-2>.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인력의 학력을 보면 고졸자가 4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22.0%), 중졸 이하(17.8%), 전문대졸(15.3%) 순이었는데

데, 이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 취업자의 고용상태를 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고(63.0%), 그 다음이 계약직(16.7%), 일용직(15.3%)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군지역에서 계약직, 일용직 비중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용직 비중이 높았다.
- 직종은 사무관련직(27.2%), 보건의료직(13.5%), 사회복지직(13.3%), 관리직(11.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이 사무관련직, 보건의료직 등의 비중이 다소 낮고, 사회복지직 비중이 높았다.

표 8-2. 새일센터 취업자의 학력·고용상태·직종 현황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전체
학력	중졸 이하	16.9%	18.0%	19.3%	17.8%
	고졸	39.9%	48.9%	50.5%	45.0%
	전문대졸	14.5%	15.9%	13.6%	15.3%
	대졸	28.7%	17.2%	16.6%	22.0%
고용 상태	계약직	16.5%	15.1%	9.9%	16.7%
	상용직	62.2%	62.8%	78.9%	63.0%
	시간제	2.7%	4.3%	7.9%	3.8%
	일용	16.9%	16.5%	3.4%	15.3%
	창업	0.8%	0.6%	0.0%	0.6%
	관계 없음	0.9%	0.8%	0.1%	0.7%
직종	사무관련직	25.6%	28.3%	19.9%	27.2%
	사회복지	12.6%	13.6%	16.2%	13.3%
	보건의료	16.3%	12.2%	4.2%	13.5%
	관리직	13.1%	11.9%	5.2%	11.9%
	경비청소	9.2%	6.5%	11.1%	8.0%
	교육연구	9.2%	9.1%	10.3%	9.1%
	기타	14.1%	18.5%	33.2%	17.1%

자료: 오은진(2011)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함.

2.2. 농촌여성일자리사업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사업이 본격화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지자체의 예산배정이 늦춰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업총괄기관(지역재단)의 관리하에 사업계획 수립지원, 현장점검,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 그리고 각 지역 또는 업종별 전문지원기관과 연계한 현장밀착형 1:1 컨설팅 제공을 통해 짧은 사업기간이지만 다양한 사업 성과가 도출되었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95명의 고용 창출이 일어났다. 참가한 농촌 여성의 연령대는 다양하였는데, 40대가 21.1%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48.4%로 가장 많았고, 고용상태를 보면 비정규직(66.3%)이 정규직보다 많았다<표 8-3>.

표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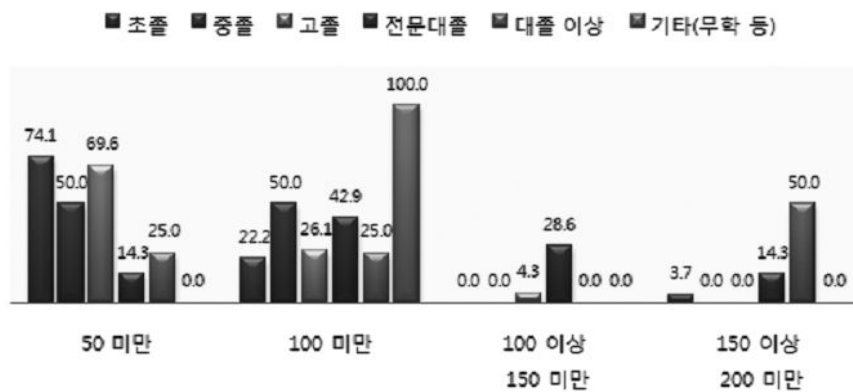
지역	계	연령대			학력			취업유형		
		30세 미만	30~60세	60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산재 가입	산재 비가입
괴산	4	1	3			1	3	4		
익산	30	3	27		1	25	4	5		25
진안	1		1			1		1		
순천	8		7	1	2	4	2	1	7	
나주	0									
영주	17	3	6	8	11	5	1	5		12
경주	10	8	1	1	2	4	4	6		4
상주	0									
거창	25		5	20	17	6	2	10		15
계 (%)	95 (100.0)	15 (15.8)	50 (52.6)	29 (30.5)	33 (34.7)	46 (48.4)	15 (15.7)	32 (33.7)	7 (7.4)	56 (58.9)

자료: 여성가족부, 2011. 내부자료.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을 통해 받는 임금은 50만 원 미만이 61.1%, 50~100만 원 사이가 28.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8-3>.

그림 8-3.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참여자 학력별 임금수준

단위: 만원(%)



3.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성과 지표의 도농 간 비교

-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 결과로서 얼마나 관련 성과 지표들이 개선되었는지, 도농 간의 차이는 없었는지를 분석하였다.

3.1. 경제활동 참여율⁴¹

-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소 높지만, 최근 그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 최근 5년간의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남녀 모두 점차 하락하는 추세

4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로, 남자는 73~74%, 여자는 49~50% 선이었다.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차이는 24%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도시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60~61%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농어촌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3~6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 도농 간의 경제활동참여율 차이는 최대 6% 수준에서 농어촌이 높은 시기 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다.

- 농어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도시여성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 농어촌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표 8-4>.
 - 지역과 여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경제활동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농어촌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
 - 도농 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모두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도시여성의 경우 48.3~49.9%로 다소 안정적인 데 비해, 농어촌여성은 52.7~57.5%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최근 3년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 농어촌 여성 중에서도 농가 여성에 비해 비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최근 그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8-4. 성별·지역별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차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성 별	남성	74.1%	74.0%	73.1%	73.1%	73.0%	
	여성	50.3%	50.2%	49.8%	49.2%	49.4%	
지 역	도시	61.7%	61.2%	61.7%	60.1%	60.4%	
	농어촌	67.4%	64.8%	67.4%	64.3%	63.9%	
지 역 × 성 별	남 성	도시	74.1%	73.4%	74.1%	72.5%	72.5%
		농어촌	78.2%	76.8%	78.2%	75.9%	75.3%
	여 성	도시	49.9%	49.5%	49.9%	48.3%	48.7%
		농어촌	57.5%	53.7%	57.5%	53.1%	52.7%
		농	69.3%	69.1%	68.9%	67.4%	65.7%
		비농	46.8%	46.9%	47.2%	47.2%	47.6%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농가보다는 농가 그리고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일수록, 연령대별로는 30~50대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표 8-5>.
- 중졸 이하 여성의 경우 2006년에는 40.5%, 2010년에는 40.8%로 대학원졸 (2006년 79.2%, 2010년 71.0%)보다 매우 낮았다.
 -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의 경우가 2006년 73.7%, 2010년 72.5%로 유배우자, 사별, 미혼의 경우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
 - 농가의 경우 2006년 68.3%, 2010년 63.4%로 비농가보다 월등이 높았고, 도시에서보다는 농어촌에서 더 격차가 심하였다.
 - 직업에 따라서는 여성농업인과 비여성농업인 간에 2006년에는 3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완화되어 2010년에는 26% 정도 차이가 났다.
 - 연령별로는 30~50대의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20대 이하 여성보다 15% 수준, 60대 이상 여성보다는 30% 이상 차이가 나게 높았다.

표 8-5.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비교(2006년 2010년)

구분		2006년			2010년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학력	중졸 이하	35.3%	50.6%	40.5%	37.3%	49.0%	40.8%
	고졸	52.0%	59.1%	53.1%	48.0%	54.2%	48.9%
	대졸	63.2%	67.3%	63.6%	56.5%	60.8%	56.9%
	대학원졸	79.0%	82.1%	79.2%	71.0%	71.6%	71.0%
결혼 상태	미혼	50.8%	45.2%	50.1%	50.9%	47.3%	50.5%
	유배우자	50.1%	61.2%	52.7%	50.2%	59.4%	51.8%
	사별	32.0%	40.6%	35.1%	28.8%	35.0%	30.6%
	이혼	73.5%	75.2%	73.7%	72.2%	74.1%	72.5%
농가 여부	농가	63.6%	69.3%	68.3%	55.9%	65.7%	63.4%
	비농가	48.3%	46.8%	48.1%	48.6%	47.6%	48.5%

구 분		2006년			2010년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농업 여부	농업	74.8%	79.2%	78.5%	66.2%	75.8%	74.1%
	비농업	48.3%	46.5%	48.0%	48.6%	47.7%	48.5%
연령	20대 이하	45.8%	41.8%	45.3%	45.5%	41.7%	45.0%
	30~50대	57.7%	67.2%	59.5%	58.6%	66.9%	59.9%
	60대 이상	21.5%	42.8%	30.1%	21.6%	39.4%	26.9%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게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이 경제활동 참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지역요인 이외에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특성(지역,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농업인 여부, 연령)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하고자, 지역과 이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로짓(logit)모형을 분석하였다<표 8-6>.
 - 지역요인 외에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농업인 여부, 연령 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제활동 참여 여부의 차이가 있었다(B값의 통계적 유의도가 모두 0.001 이하). 도시보다는 농어촌일수록(기준값 도시에 비해 농어촌 B값이 2006년, 2010년 모두 +값),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B값이 +값),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여성일수록(B값이 +값, 하지만 사별의 경우는 -값), 비농가보다는 농가 그리고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일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연령의 B값이 -값)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았다.
 - 2006년, 2010년 통계 비교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의 차이가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2006년에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의 경제활동참여율이 1.123배였는데, 2010년에는 1.107배였다.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농어촌일수록 도시에 비해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도시에 비해 높은 정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추진이 농어촌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6.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변인 (기준값)	2006년		2010년		
	B	Exp(B)	B	Exp(B)	
Intercept	-0.147***	0.863	-0.093***	0.911	
학력 (중졸 이하)	대학원 이상	1.816***	6.150	1.195***	3.305
	대졸	1.113***	3.045	0.626***	1.870
	고졸	0.641***	1.898	0.276***	1.318
결혼 상태 (미혼)	이혼	1.321***	3.747	1.195***	3.305
	사별	-0.199***	0.819	-0.507***	0.602
	유 배우자	0.103***	1.109	0.075***	1.078
농가(비농가)	0.338***	0.713	0.214***	0.807	
농업(비농업)	1.643***	5.169	1.229***	3.418	
연령	-0.005***	0.995	-0.003***	0.997	
농어촌(도시)	0.116***	1.123	0.101***	1.107	

***: $p < 0.001$

주: 2006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20986079636 (df=10, sig=0.000)

2010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9.08475E+12 (df=10, sig=0.000)

3.2. 고용률⁴²

-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은 20%이상 낮고,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고용률이 다소 높지만, 최근 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42 취업자가 15세 이상 성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업자란 수입을 목적으로 주 1시간이상 일한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최근 5년간의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고용률이 남녀 모두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남자는 70~71%, 여자는 47~48% 선이었다. 남녀 간 고용률 차이는 23%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도시의 고용률은 57~59% 수준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농어촌은 62~6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다소 불안정하였다.
 - 도농 간의 고용률 차이는 최대 7%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농어촌 여성의 고용률은 도시여성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 농어촌 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표 8-7>.
- 지역과 여성을 고려하여 최근 5년간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지역에 관계없이 농어촌이 높았다.
 - 도농 간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두 지역 모두 점차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도시여성의 경우 46.7~48.3%로 다소 안정적인 데 비해, 농어촌 여성의 경우 51.7~56.9%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고, 최근 3년간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 농어촌 여성 중에서도 농가 여성에 비해 비농가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최근 그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표 8-7. 성별·지역별 고용률 변화 차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성별	남성	71.3%	71.3%	70.8%	70.1%	70.1%	
	여성	48.8%	48.9%	48.7%	47.7%	47.8%	
지역	도시	59.4%	59.0%	59.4%	57.7%	57.9%	
	농어촌	66.3%	63.8%	66.3%	62.9%	62.4%	
지역 × 성별	남성	도시	71.0%	70.5%	71.0%	69.2%	69.4%
		농어촌	76.7%	75.3%	76.7%	74.0%	73.5%
	여성	도시	48.3%	48.0%	48.3%	46.7%	47.0%
		농어촌	56.9%	53.1%	56.9%	52.2%	51.7%
		농	68.6%	68.8%	68.6%	67.1%	65.1%
		비농	46.3%	46.0%	46.3%	46.2%	46.3%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고용율을 비교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비농가보다는 농가가 그리고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50대 여성이 높았다<표 8-8>.
- 중졸 이하 여성의 경우 2006년에는 40.0%, 2010년에는 39.9%로 대학원졸 (2006년 78.0%, 2010년 69.8%)보다 매우 낮았다.
 -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이혼의 경우가 2006년 70.9%, 2010년 69.9%로 유배우자, 사별, 미혼의 경우보다 고용률이 높았다.
 - 농가의 경우 2006년 67.9%, 2010년 62.7%로 비농가보다 월등이 높았고, 도시에서보다는 농어촌에서 더 격차가 심하였다.
 - 직업에 따라서는 여성농업인과 비여성농업인 사이에 2006년에는 20% 정도 차이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격차가 완화되어 2010년에는 17% 정도 차이가 났다.
 - 연령별로는 30~50대 여성들의 고용율이 20대 이하 여성보다 16% 수준, 60대 이상 여성보다는 30% 정도 차이가 나게 높았다.

표 8-8.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고용률 비교(2006년, 2010년)

구 분	2006년			2010년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학력	중졸 이하	34.6%	50.4%	40.0%	36.3%	48.4%	39.9%
	고졸	50.2%	58.0%	51.4%	46.5%	53.0%	47.5%
	대졸	60.9%	65.8%	61.4%	53.8%	58.5%	54.3%
	대학원졸	77.7%	81.1%	78.0%	69.8%	69.8%	69.8%
결혼 상태	미혼	47.3%	43.2%	46.8%	47.4%	45.0%	47.1%
	유 배우자	49.3%	60.8%	51.9%	49.0%	58.5%	50.7%
	사별	31.3%	40.4%	34.6%	27.7%	34.5%	29.7%
	이혼	70.5%	73.2%	70.9%	69.5%	72.3%	69.9%
농가 여부	농가	62.8%	69.0%	67.9%	54.8%	65.1%	62.7%
	비농가	46.8%	46.1%	46.7%	46.8%	46.3%	46.7%
농업 여부	농업	74.6%	79.2%	78.5%	65.8%	75.7%	73.9%
	비농업	46.8%	45.7%	46.6%	46.8%	46.4%	46.8%
연령	20대 이하	42.7%	40.1%	42.3%	42.3%	39.4%	42.0%
	30~50대	56.5%	66.5%	58.5%	57.1%	65.8%	58.4%
	60대 이상	21.3%	42.7%	29.9%	20.9%	39.0%	2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게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이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지역요인 이외에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특성(지역,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연령)의 영향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하고자, 지역과 이들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고용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의 로짓(logit)모형을 분석하였다<표 8-9>.
 - 지역요인 외에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연령 등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고용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B값의 통계적 유의도가 모두 0.001 이하). 도시보다는 농어촌일수록(기준값 도시에 비해 농어촌 B값이 +값), 학력이 높을수록(중졸 이하보다는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B값이 +값),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여성일수록(사별의 경우는 오히려 낮음), 비농가보다는 농가일수록 그리고 비농업인보다는 농업인일수록 (B값이 +값),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률이 높았다.
 - 2006년과 2010년의 비교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 따른 고용률 차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차단한 상황에서 2006년에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고용률은 1.139배였는데, 2010년에는 1.119배로 감소하였다. 5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농어촌일수록 도시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것은 유지되었지만, 높은 정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추진이 농어촌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의 고용률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9. 고용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의 로짓분석 결과

변인 (기준값)		2006년		2010년	
		B	Exp(B)	B	Exp(B)
Intercept		-0.265***	0.768	-0.216***	0.806
학력 (중졸 이하)	대학원 이상	1.774***	5.897	1.215***	3.369
	대졸	1.055***	2.872	0.590***	1.804
	고졸	0.597***	1.816	0.273***	1.314
결혼 상태 (미혼)	이혼	1.292***	3.639	1.203***	3.329
	사별	-0.102***	0.903	-0.434***	0.648
	유 배우자	0.219***	1.244	0.167***	1.181
농가(비농가)		0.328***	0.720	0.217***	0.805
농업(비농업)		1.649***	5.202	1.252***	3.498
연령		-0.005***	0.995	-0.003***	0.997
농어촌(도시)		0.130***	1.139	0.112***	1.119

***: $p < 0.001$

주: 2006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19766847394(df=10, sig=0.000)

2010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8.54011E+12(df=10, sig=0.000)

3.3. 임금수준

-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임금은 70% 내외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은 60% 수준이었는데, 과거에 비해 도농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었다.
 - 도시의 임금수준이 월 222만 원(2009년)인 데 비해 농어촌은 145만 원으로, 농어촌 임금이 도시 임금의 67%에 머물렀다. 이는 2006년의 73%보다 낮은 수준이다.
 - 한편 여성의 임금은 140만 원 수준으로 남성(239만 원)의 58% 수준이었다.
-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경우(도시 남성과 비교한 농어촌 남성)보다 더 낮았다. 도농 간 여성의 임금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표 8-10>.

- 농어촌 여성의 월 임금수준은 95만 원으로, 도시 여성의 월 임금수준(151만 원)의 2/3 미만 수준이었다. 이는 도시 남성 대비 농어촌 남성의 임금수준(67%)보다도 낮은 것이다.
- 2006년 도시 여성 대비 농어촌 여성의 임금은 72%였는데, 2009년에는 63%로 두 지역 간 여성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표 8-10. 성별·지역별 월평균 임금수준 차이

단위: 만 원

구 분		2006년			2009년			
		평균	중간값	평균값 B/A	평균	중간값	평균값 B/A	
지역	도시(A)	198.21	150.00	0.73	222.84	200.00	0.67	
	농어촌(B)	145.46	100.00		148.78	120.00		
성별	남자(A)	227.75	200.00	0.58	239.28	200.00	0.58	
	여자(B)	133.68	100.00		140.55	120.00		
지역 × 성별	남성	도시(A)	236.18	200.00	0.73	256.42	208.33	0.67
		농어촌(B)	173.01	150.00		171.64	150.00	
	여성	도시(A)	138.62	110.00	0.72	151.03	120.00	0.63
		농어촌(B)	99.81	80.00		95.14	80.00	
전 체		191.29	150.00		208.21	175.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각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학력, 고용형태, 직업, 회사규모, 근속연수나 해당분야 경력,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표 8-11>.
 - 중졸 이하의 월평균 임금에 비해 대학원졸 이상은 3배 이상 많았다.
 - 고용형태에 따라 고용주, 정규직, 자영자, 비정규직 순으로 임금수준이 높았다.
 - 비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임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2배 정도 임금이 많았다.
 - 이밖에 근무하는 회사규모가 클수록, 연령대별로는 30~50대 여성일수록,

근무경력이나 해당분야 경력의 경우 무조건 많기보다는 11~20년 일수록, 근무시간도 무조건 많기보다는 31~40시간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표 8-11. 주요 관련 변인별 도농 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2006년, 2009년)

단위: 만 원

구 분		2006년			2009년		
		도시	농어촌	전체	도시	농어촌	전체
학력	중졸 이하	113.8	92.6	107.6	120.8	93.1	109.2
	고졸	175.5	167.8	174.6	196.8	181.8	194.3
	대졸	236.0	204.8	233.7	275.6	233.4	271.4
	대학원졸 이상	358.7	271.5	354.9	384.2	295.6	377.8
고용 형태	정규직근로자	229.8	196.5	226.9	252.8	217.2	248.9
	비정규직근로자	112.1	103.9	111.3	119.1	106.5	117.2
	고용주	332.3	288.8	328.7	361.4	309.2	356.1
	자영자	172.6	112.3	155.7	182.4	114.9	154.0
농업 여부	비농업	199.7	171.3	197.1	225.9	189.9	221.5
	농업	112.1	93.3	98.1	100.7	98.3	98.7
회사 규모	소	174.7	131.4	168.0	195.2	132.7	180.3
	중	218.9	185.1	215.8	243.5	197.7	237.9
	대	282.4	220.3	277.8	338.6	291.9	334.4
연령	20대 이하	143.4	138.7	143.0	162.0	155.4	161.3
	30~50대	220.4	179.3	216.0	244.9	196.4	237.6
	60대 이상	128.0	80.0	110.3	124.3	79.6	102.8
근무 경력	5년 이하	153.2	134.1	151.4	162.0	125.1	156.8
	6~10년	215.5	178.4	211.4	202.9	152.7	195.5
	11~20년	271.3	205.2	263.8	259.2	193.4	249.1
	21년 이상	257.0	107.9	205.5	234.1	131.9	203.9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하	144.1	125.4	142.3	166.8	143.3	163.6
	6~10년	189.1	161.2	186.3	228.0	176.5	220.4
	11~20년	244.4	187.3	238.1	293.3	216.9	281.3
	21년 이상	220.5	123.5	198.6	290.5	112.2	209.7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하	98.9	67.8	93.1	97.2	64.3	86.6
	31~40시간	228.0	153.4	219.3	244.9	153.1	229.0
	41~50시간	207.8	150.5	200.6	236.4	164.4	223.2
	51시간 이상	192.6	160.4	188.4	216.0	167.7	206.3
전 체		138.6	99.8	133.7	151.0	95.1	140.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각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지역요인(도시, 농어촌)은 여성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역요인으로 인해 임금수준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 지역요인 이외에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특성(학력, 종사상지위, 농업 여부, 회사규모, 연령, 근무경력, 해당분야 경력, 근로시간)의 독립적 영향력을 통계학적으로 통제하고자, 지역과 이들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임금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하였다<표 8-12>.
 - 지역, 학력, 종사상지위, 농업 여부, 회사규모, 연령, 근무경력, 해당분야 경력, 근로시간 등 분석에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이 임금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농어촌보다는 도시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고용형태/지위에 따라서는 정규직보다는 자영자·비정규근로자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았고(B값이 -), 고용주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B값이 +). 비농업인보다 농업인일수록 임금수준이 낮았고, 회사규모가 클수록 높았고, 근속연수와 해당분야 경력이 많고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았다.
 - 2006년과 2009년의 비교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 간 임금수준 차이가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차단한 상황에서 2006년에는 회귀곡선의 기울기(B)가 -0.078이었는데, 2009년에는 -0.124로 음의 방향으로 더 기울어졌다. 기간이 경과하면서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이 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낮은 정도가 더 심화되는 경향이였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추진이 농어촌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의 임금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에 따라 도농 간 임금수준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8-12. 임금수준에 대한 일반화선형모형 분석결과

변인 (기준값)		B	
		2006년	2009년
Intercept		3.988***	4.744***
학력 (중졸이하)	대학원 이상	0.899***	0.707***
	대졸	0.548***	0.446***
	고졸	0.305***	0.270***
지위 (정규직근로자)	자영자	-0.390***	-0.127***
	고용주	0.303***	0.576***
	비정규근로자	-0.356***	-0.297***
농업(비농업)		-0.830***	-0.812***
회사규모 (30인 미만)	300인 이상	0.295***	0.277***
	30~300인	0.222***	0.156***
연령		-0.005***	-0.008***
근속연수		0.010***	-0.001***
해당분야경력		0.008***	0.001***
근로시간		0.010***	0.002***
농어촌(도시)		-0.078***	-0.124***

***: $p < 0.001$

주: 2006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3643994 (df=14, sig=0.000)

2009년 Likelihood Ratio Chi-Square = 15751.029 (df=14, sig=0.000)

4. 분석 요약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시행한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경력 단절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아직까지 농어촌 지자체에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군지역 4개),

도시지역보다 센터 개설로 인한 여성의 고용 증진 효과가 높았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역시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기간이지만, 중앙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여성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었다.
- 성별, 지역유형별 경제활동 참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다소 높았다.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도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요인 외에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인특성(지역, 성별,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연령)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다는 설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요인에 따른 여성 경제활동 참여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성별, 지역유형별 고용률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고용률은 20% 이상 차이가 나게 낮고,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고용률이 다소 높았다. 농어촌 여성의 고용률은 도시 여성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요인 외에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인특성(지역, 성별, 학력, 결혼상태, 농가 여부, 연령)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농어촌이라는 지역요인으로 인해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역요인에 따른 고용률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성별, 지역유형별 임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임금은 70% 내외 수준이고,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임금은 60% 수준이었다.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임금수준은 도시 남성과 농어촌 남성을 비교한 경

우보다 더욱 낮았다. 지역요인 외에 임금수준과 관련된 주요 개인특성(성별, 학력, 종사상지위, 농업 여부, 회사규모, 연령, 근무경력, 해당분야 경력, 근로시간)의 영향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요인(도시, 농어촌)은 여성의 임금수준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지역요인으로 인해 임금수준 차이가 더 심화되고 있었다.

제 9 장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문제점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제외하고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동일한 조건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도시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특성(①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② 낮은 인구밀도와 소수의 정책수혜자 ③ 농어촌 사업체의 영세성과 분산, ④ 농어촌 경제활동인력 특성(여성다수, 계절제 근무 등), 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적 자원, ⑥ 사회자본과 민간 부문 인적자원 부족)의 관점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은 농어촌 특성 중에서도 소수의 정책 수혜자와 불리한 서비스 접근성,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1.1.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 농어촌의 인구밀도가 낮고 정책 수혜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새일센터는 아직까지 도시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다.
 - 90개 새일센터 중 군지역에 소재한 새일센터는 4개(당진군, 청원군, 칠곡군, 영동군)밖에 되지 않는다. 새일센터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한 교육·정보 기관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 광역시와 농어촌은 비교가 힘들지만, 중소도시와 비교할 경우 농어촌의 직업훈련기관 수는 1/5 수준, 고용 관련 센터는 거의 1/3 수준이었다<표 9-1>.

표 9-1. 지역유형별 일자리 관련 기관 수

지역구분 ^a	새일센터	훈련기관 수	고용센터+일자리센터
대도시 (n=7)	6.29	1700.57	13.86
중소도시 (n=32)	1.50	234.22	2.81
농어촌 (n=4)	1.25	43.50	1.00
전 체	2.26	455.19	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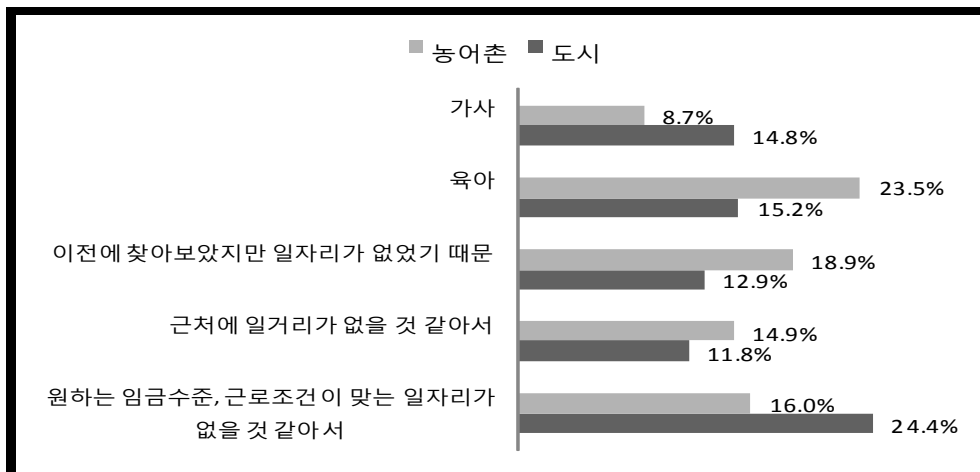
주a: 새일센터가 있는 대도시(특·광역시), 중소도시(시), 농어촌(군)

자료: 오은진 등(2011) 자료 재분석

- 도시 여성에 비해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은 높지만 농가를 제외한 농어촌 여성의 경우는 도시 여성보다 오히려 낮다.
 - 농어촌의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65.7%(2010년 기준)인데 반해, 비농가의 경우 47.6%로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
 - 많은 농어촌 여성 관련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농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농어촌의 비농가 여성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 농어촌 여성들은 도시 여성에 비해 일자리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접하기까지 더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 일자리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더 부족하고, 육아 등의 문제 해결이 원활하지 않아 경제활동 참여를 더 하지 못하고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0) 결과에서 나타나는 30~5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주요한 이유는 비슷하지만 우선 순위가 다소 달랐다<그림 9-1>. 도시 여성은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2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육아, 가사의 순이었다. 농어촌 여성의 경우 가장 많은 이유가 육아(23.5%)였으며, 그 다음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18.9%), ‘원하는 임금수준,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의 순이었다.

그림 9-1. 30·40·50대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유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한 사각지대 문제를 염두에 두고 광역새일지원본부를 여러 곳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군 지역의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 불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새일센터로의 접근성이 불리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시범사업 단계에 불과하다. 2011년 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규모도 작다.
 - 이 사업은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은 배제되어 있고, 여성이 참여하는 사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잠재하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1.2.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에 대한 고려 미흡

- 농어촌 여성은 도시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되고 저학력이다. 그리고 농업종사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높고, 사업체에 피고용된 노동자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가 많으며, 계절에 따른 경제활동 종사비율의 변화가 심하다.
 -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통계청 2010), 도시는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한 일 때문이 가장 많지만(46.1%), 농어촌의 경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가 가장 많다(30.6%)<표 9-2>.

표 9-2.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

이유	도시	농어촌	전체
개인, 가족 관련	46.1%	30.6%	42.8%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7.2%	36.0%	21.2%
작업여건(시간, 보수) 불만족	10.3%	4.6%	9.1%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경영 악화	8.8%	9.5%	9.0%
육아	5.2%	3.9%	4.9%
가사	4.9%	4.5%	4.8%
명예/조기 퇴직, 정리해고	2.6%	1.7%	2.4%
직장의 휴업, 폐업	2.0%	1.5%	1.9%
심신장애	0.5%	1.3%	0.7%
정년퇴직, 연로	0.7%	3.2%	1.2%
기타	1.7%	3.2%	2.0%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간제 및 계절제 근무 등 농어촌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성과가 농어촌에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의 경우 대부분 농업과 일자리사업 병행에 따라 전담 인력으로 활동하기 어렵고, 다수가 단기간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마을 여성들의 경우 작업시간이 길지 않고, 작업이 단순하며, 대부분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다소 무리이다”(○○지역 농촌여성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총평)

- 여성 노인의 경우 계약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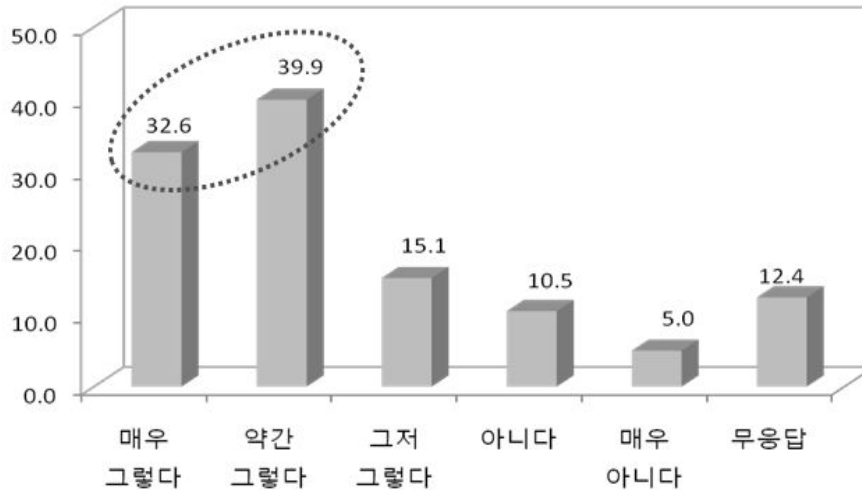
“지역의 어머니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을 꺼려하여 계약서만 작성하여 비치한 상황이다”(○○지역 농촌여성일자리사업 현장점검 총평)

○ 농업이 주 산업인 농어촌의 노동시장에서는 도시에 비해 시간제 또는 일용직 구직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의 새일센터사업은 일부 단시간 유연근무를 고려하고 있지만, 주로 1일 8시간 노동, 4대보험 적용 대상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은 학력별로는 고졸자, 고용상태별로는 상용직, 직종별로는 현장인력보다는 사무관련직이 많았다. 취업자의 고용상태를 보면 상용직이 가장 많고(63.0%), 그 다음이 계약직(16.7%), 일용직(15.3%)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군지역에서 계약직, 일용직 비중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상용직 비중이 높았다.
- 김병률 등(2011)의 조사에 의하면 농가 중에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72.5%로, 이 중에서 상시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11.0%, 일용을 원하는 농가는 60.9%였다<그림 9-2>.

그림 9-2. 농가의 고용 노동력 필요 정도

단위: %



자료: 김병률 등(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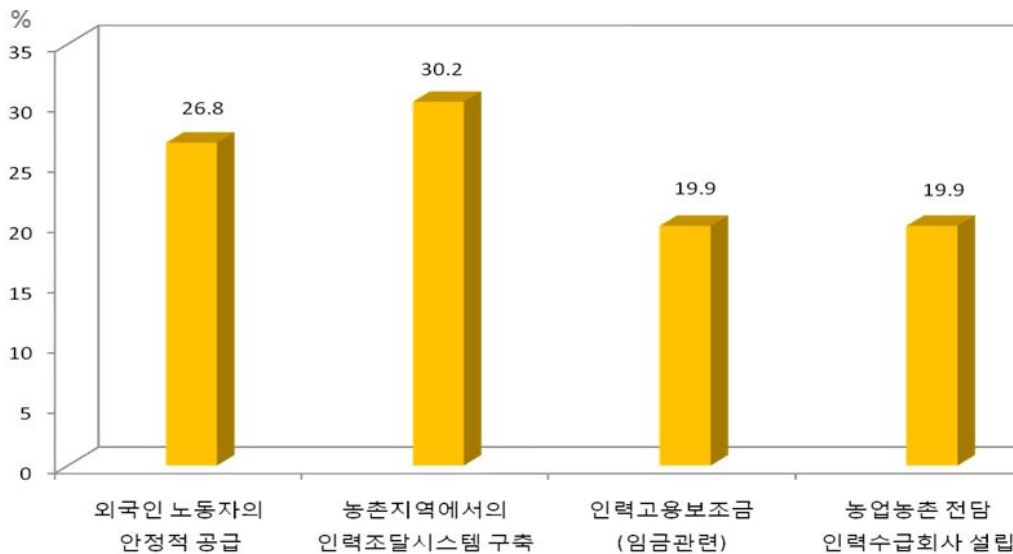
2. 정책 개선과제

-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임금수준은 남성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또한 농어촌 여성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주로 소수 농가 여성에 해당되는 소규모 사업이었기에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지표를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어촌 여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가 이외의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취업률 제고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

2.1. 농어촌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조사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제공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에 대한 조사와 일자리 발굴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들의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제활동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 최근 농어촌의 리더들에 대한 조사(김병률 등, 2010)에서는 농어촌 일자리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우선과제로 농촌지역의 인력조달시스템 구축을 들고 있다<그림 9-3>.

그림 9-3.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한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의 의견



자료: 김병률 등(2011).

- 아직까지 농어촌 여성 일반과 관련한 일자리 관련 연구나 조사가 미비한 데, 농어촌 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직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일자리와 관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의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농어촌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최근에 경상북도가 ‘일손’(www.ilson.kr)이라는 농촌인력지원시스템을 개설한 데 이어,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영양군, 담양군 등지에서 ‘농촌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9-4>. 아직까지는 농업의 계절적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타 산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지역의 다른 산업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구인·구직 정보망과 연동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림 9-4. 경상북도 농산어촌 인력제공시스템 일손

자료: 일손 웹사이트(<http://www.ilson.kr>)

-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이 보육 문제의 해결이다. 앞서 문제점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할 30~50대 농어촌 여성이 직장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장애요인)는 바로 육아였다. 농어촌 여성의 고용문제는 보육과 연계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의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기존의 여성농업인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지역아

동센터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계 또는 가장 역량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육·교육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 필요한 경우 광역지자체의 예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임과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의 농촌보육·정보 센터

- 경상북도에서는 복권기금 등 총 39억 원을 투입(도비 20억 원, 시·군·구비 19억 원)하여 영유아 보육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촌노동의 공동경영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문화·복지공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2005년 3월에 개소한 상주농촌보육·정보센터를 시작으로 대부분 2005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경상북도 11개 시·군에 걸쳐 현재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 이 센터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원형으로 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보육시설과 정보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40인 미만 국공립보육시설 형태로 설치하여 보육기능을 담당하며, 이 외에도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상북도청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며 매년 도비 27.3%, 시·군비 63.7% 정도로 1개소당 연 91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정기 사업으로 문화교육이나 전문성 교육, 도농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은 초기에 평균 1명씩의 상담원, 지도교사, 보육교사, 운전원, 취사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평균 2-3명으로 증가하였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평균 18.5명의 아동이, 공부방은 평균 32.3명이 이용하고 있다.
- 센터 운영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보육의 탄력적인 운영, 국제결혼가정 아동에 대한 고려, 주변 유치원과의 협

력체계 등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보육시설의 적정한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상북도의 농촌보육·정보센터 현황

시군	직원수(명)			이용아동수(명)		주요 사업내용
	계	정보 센터	보육 시설	공부방	보육 시설	
안동시 (임하)	5	3	2	37	13	한방건강교실, 민요교실 여성농업인행복찾기
안동시 (예안)	5	3	2	35	10	노래교실, 기공체조 및 요가, 무료 한방진료
영천시	6	3	3	30	17	한글교실, 한자교실, 사물놀이교실 리더쉽교육, 문화체험교실, 청소년성장캠프, 한여름밤의 문화재
상주시	8	3	5	41	24	가요교실, 한글
경산시	8	4	4	25	20	건강교실, 농업연구모임, 여성농민상담학교, 동호회지원
의성군	7	3	4	40	30	취미교실, 리더쉽교육, 책사랑방운영 문화유적답사, 농산물가공법배우기
청송군	6	3	3	45	20	어르신건강교실, 여성농업인건강교실
영양군	6	3	3	17	8	청소년 경제교실, 노인 행복학교, 한자급수자격증반
고령군	8	3	5	21	26	여성농민 교육, 문화활동, 지도력발굴유성, 복지활동, 농외소득증진사업
성주군	6	3	3	36	22	여성농업인사물놀이, 초등학생방학특강
칠곡군	5	3	2	30	7	노래교실, 한글문예교실
울진군	5	1	4	30	25	

자료: 경상북도. 2009. 내부자료

2.2. 새일센터 미지정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유형별로 보면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자체에 위치할

경우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사업의 혜택이 농어촌 여성에게도 고르게 돌아가도록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새일센터는 대부분 대도시나 중소도시 위주로 설립이 되어 있다. 새일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광역새일지원본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설계사를 1명씩 지역에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한 개 기초지자체의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많다.
- 미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새일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취업설계사를 적어도 2명 정도씩은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업설계사가 각종 출장이나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울 때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충북지역의 경우, 새일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성 취업전문인력을 2명씩 배치하고 있다. 1명은 새일센터 예산으로, 다른 1명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경우 취업설계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한 지역의 취업 성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적절한 취업설계사의 지속적인 발굴과 더불어 이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교육·훈련 이수를 위한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미지정 기초지자체 단위로 적어도 2명 이상의 취업설계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새일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농어촌 특성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이 서비스가 이루어져 대형마트 등 여성의 왕래가 많은 장소 위주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농어촌 지역사회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하여 읍·면단위 공공시설(예: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농협 등)을 활용하여 방문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3.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주체 간 협력 강화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기존의 농촌여성일감갓기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사업이 주로 지역 농어촌 여성들의 동호회적 성격이 강하고, 주로 계절적이고 한시적인 농외 부업소득 활동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기업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보다 규모화된 상시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화(이 중 3개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하였고, 사업아이템도 과거 장류, 한과류에 한정되었던 것이 홈패션, 농가주택 개선지원,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의 연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은 기존 사업과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의 성공은 결국 지원조직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체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 농어촌 자원을 바탕으로 여성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기획’이 필요한데, 농어촌지역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일에 익숙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농어촌 여성의 창업 및 경영과 관련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재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이러한 문제와 요구를 해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 및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하여 역량이 축적된 사업총괄조직(지역재단)의 조정하에 지역별·업종별 현장지원조직이 제공하는 마케팅을 포함한 현장밀착형 컨설팅이 이러한 사업 성과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중앙의 지원조직과 현장의 지원조직 간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 지원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이러한 지원체계의 지속과 더불어 중앙(정부)단위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촌진흥청과 여성가족부와의 긴밀한 협의·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시·군)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해당 사업부서)와 농업기술센터(생활개선계) 간의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실무조직을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 배제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가 주도를 하면서, 그동안 관련 사업을 해오던 농촌진흥기관의 전문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기존에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 라인을 통해 시행되어 온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 ‘농업인창업지원사업’과 그 내용과 추진체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의 추진경험이 있는 행정부처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중앙단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여성가족부가, 지역단위에서는 여성청소년부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상호 원활한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 10 장

결론: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평가대상 사업 선정의 타당성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 방과후학교는 1996년에 시작하여 2010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49만 4,965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고, 관련 예산만 해도 3,069억 원(2010년)에 달한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은 2011년에 시작된 신규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예산도 3.2억 원(지방비 3.2억 원 미포함)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사업이 농어촌정책 영향평가(전문평가)의 대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의 경우 농어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는 이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집행하고 있는 정책은 제외된다. 이는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위배된다.
- 평가 대상 사업별 지역(농어촌·도시) 통계 구축 및 사업 담당자의 협조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통계 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일센터 사업의 경우 농어촌, 도시를 고려한 사업 성과 관련 자료가 생성될 수 없는 구조였다.

- 아직까지는 전문평가 대상사업 부처 담당자의 농어촌 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자료 협조도 미흡한데, 지속적으로 연찬회와 정보교류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부 록

- 부록 1.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개요
- 부록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현황
- 부록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 부록 4. 새일센터별 취업 현황

부록 1: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개요

1. 개념

- 정책집행으로 인해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할 때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는 제도

* 영향 : 지역경제, 경관, 전통문화 및 공동체, 인구이동, 농어촌서비스기준

** 특성 :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 영세성, 경제활동인력 특성 (여성다수, 계절제 근무 등),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2. 도입배경

-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우려

- 지역아동센터(‘10년 2,94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도시-농어촌에 같은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농어촌 아동에 대한 혜택이 도시 아동에 비해 불리할 우려
 - 농어촌은 아동 귀가차량 원거리 운행,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도시 이동, 자원봉사자 부족 등으로 도시보다 많은 비용 소요
-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방안 연구(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책구상 단계에서의 협의·조정 시스템은 미흡

⇒ 농어촌이 정책 서비스를 불리하게 받지 않도록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운용 필요

* 영국·뉴질랜드(rural proofing), 캐나다(rural lens)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도 운용 중

< 추진경과 >

-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에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도입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농어촌영향평가 운용방안(평가 지침, 전문평가 대상 과제 등) 심의·의결('11.6.2)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농어촌영향평가 법적근거 마련 ('11.6.29 본회의 통과)

3. 운용방향

- 정책의 수립·시행 시 지침을 활용하여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대안 모색
- 평가유형
 - 자체평가 : 부처 및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침에 따라 직접 평가
 - 전문평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대상과제 선정하여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평가
- 평가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

<'11년도 추진 현황>

- 자체평가 평가기관 : '11년도는 초기단계임을 감안, 삶의 질 향상 계획 추진 9개 부처와 9개 도에서 자체평가 실시
 - * 교육부, 행안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 전문평가 대상과제 : ①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새일센터 여성 구직활동 지원, 농촌여성일자리사업), ②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4. 농어촌영향평가 기관별 역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위원회 사무국 (농식품부)
<input type="checkbox"/>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확정 및 전문평가대상 정책 선정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	<input type="checkbox"/> 실무 총괄 <input type="checkbox"/> 지침 운용 등 실무 총괄 * 농어촌영향평가 지침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안내서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 실적 분석 및 위원회 보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평가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영향평가 총괄부서 및 담당자 지정·운용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실시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input type="checkbox"/> 자체 평가 후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 보완 등 향후 조치	<input type="checkbox"/> 자체평가 지원 <input type="checkbox"/> 자체 평가 실시기관이 농어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자료제공, 컨설팅·자문·교육 등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문평가 실시 <input type="checkbox"/>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 전문평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 고: 농어촌영향평가 관련 법령

□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용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원)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2. 제44조제5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의 점검·분석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 지침의 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전문지원기관이 수행하도록 결정하는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전문지원기관에게 시정을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록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현황

시·도	시·도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현황	수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3
	부산서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부산남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2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2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방과후지원센터(공동)	
대전	대전광역시방과후학교지원센터	2
	대전동구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경기	경기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26
	25개 지역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강원	강원도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8
	17개 지역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충북	충북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12
	10개 지역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청원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충남	충남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16
	13개 지역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공주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금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전북	전북교육청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	15
	13개 지역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정읍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전남	전남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23
	22개 지역교육청별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경북	경주방과후학교지원센터	2
	문경방과후학교지원센터(공동)	
경남	경남교육청방과후학교종합지원센터	19
	18개지역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	
제주	제주방과후학교지원센터	1
합 계		144

부록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순번	지역	기초	유형구분	센터명	기관명(원소속)	대표번호
1	서울	관악구	인력센터	관악새일센터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02-886-9523
2	서울	구로구	기타	간호새일센터	서울특별시간호사회	02-859-6346
3	서울	구로구	인력센터	구로새일센터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867-8833
4	서울	영등포구	인력센터	영등포새일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02-858-4514
5	서울	금천구	여성회관	남부새일센터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02-802-0185
6	서울	노원구	여성회관	북부새일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02-972-5506
7	서울	노원구	인력센터	노원새일센터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02-951-0187
8	서울	동대문구	인력센터	동대문새일센터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921-2070
9	서울	서대문구	인력센터	서대문새일센터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02-332-8661
10	서울	서초구	인력센터	서초새일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02-581-4433
11	서울	양천구	여성회관	서부새일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8795
12	서울	은평구	인력센터	은평새일센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850
13	서울	종로구	인력센터	종로새일센터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2-741-1326
14	서울	중랑구	인력센터	중랑새일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02-3409-1948
15	서울	강서구	인력센터	강서새일센터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02-2692-4549
16	서울	강북구	인력센터	강북새일센터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02-980-2377
17	서울	동작구	인력센터	동작새일센터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02-525-1121
18	서울	마포구	여성회관	중부새일센터	서울특별시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7
19	서울	용산구	인력센터	용산새일센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02-714-9762
20	부산	남구	여성회관	부산새일센터	부산광역시여성회관	051-610-2011
21	부산	동래구	인력센터	동래새일센터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051-501-8945
22	부산	해운대구	인력센터	해운대새일센터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051-702-9196
23	부산	사상구	인력센터	사상새일센터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051-326-7600
24	부산	부산진구	인력센터	부산진새일센터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051-807-7944
25	부산	서구	여성회관	부산서구새일센터	서구 여성센터	051-240-4358
26	대구	남구	인력센터	대구남부새일센터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053-472-2280
27	대구	북구	여성회관	대구새일센터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053-310-0140
28	대구	서구	인력센터	대구달서새일센터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053-285-1331

순번	지역	기초	유형구분	센터명	기관명(원소속)	대표번호
29	인천	남구	여성회관	인천새일센터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032-440-6528
30	인천	남구	인력센터	인천남구새일센터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032-881-6060
31	인천	남동구	인력센터	인천남동구새일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469-1251
32	인천	서구	인력센터	인천서구새일센터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032-577-6091
33	인천	부평구	여성회관	부평새일센터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032-511-3141
34	광주	동구	인력센터	광주새일센터	광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062-511-0001
35	광주	북구	인력센터	광주북구새일센터	광주북구YWCA여성인력개발센터	062-266-8500
36	광주	남구	대학	송원대새일센터	송원대학 부설평생교육원	062-360-5903
37	광주	광산구	새일본부	광주광산구 새일센터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577-2919
38	광주	서구	여성회관	광주서구새일센터	광주광역시여성발전센터	062-613-7996
39	대전	서구	인력센터	대전새일센터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042-524-4181
40	대전	유성구	대학	충남대새일센터	충남대학교	042-821-8004
41	울산	남구	인력센터	울산남부새일센터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2-227-1130
42	울산	중구	여성회관	울산중부새일센터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052-281-1616
43	경기	고양시	인력센터	고양새일센터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44	경기	부천시	인력센터	부천새일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2-326-3004
45	경기	성남시	인력센터	성남새일센터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031-718-6696
46	경기	안산시	인력센터	안산새일센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31-439-2060
47	경기	안양시	인력센터	안양새일센터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453-4365
48	경기	용인시	여성회관	경기새일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031-8008-8101
49	경기	의정부시	여성회관	경기북부새일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031-8008-8080
50	경기	시흥시	인력센터	시흥새일센터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
51	경기	화성시	여성회관	화성새일센터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031-267-8755
52	경기	시흥시	새일본부	시흥새일센터(본부)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31-310-6020
53	경기	광명시	여성회관	광명새일센터	광명시 여성회관	02-2680-2884
54	강원	동해시	기타	동해새일센터	동해YWCA	033-533-6077
55	강원	원주시	여성회관	원주새일센터	원주시민문화센터	033-737-4592
56	강원	춘천시	인력센터	춘천새일센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033-243-6474
57	강원	강릉시	인력센터	강릉새일센터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033-643-1145
58	충북	청주시	인력센터	청주새일센터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043-253-3400
59	충북	영동군	여성회관	영동새일센터	영동군 여성회관	043-740-3756

순번	지역	기초	유형구분	센터명	기관명(원소속)	대표번호
60	충북	청원군	새일본부	충북새일센터(본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43-217-9195
61	충북	충주시	여성회관	충주새일센터	충주시 여성문화회관	043-845-1929
62	충북	제천시	여성회관	제천새일센터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043-645-3904
63	충남	보령시	인력센터	보령새일센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041-935-9663
64	충남	천안시	인력센터	천안새일센터	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	041-576-3060
65	충남	논산시	인력센터	논산새일센터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041-736-6244
66	충남	당진군	여성회관	당진새일센터	당진군 여성의전당	041-350-3379
67	전북	군산시	인력센터	군산새일센터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063-468-0055
68	전북	전주시	인력센터	전주새일센터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3-232-2346
69	전북	전주시	여성회관	전북새일센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063-254-3610
70	전북	정읍시	여성회관	정읍새일센터	정읍시 여성문화회관	063-539-5049
71	전북	남원시	여성회관	남원새일센터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063-620-6842
72	전북	익산시	새일본부	익산새일센터(본부)	전북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063-853-5625
73	전남	목포시	인력센터	목포새일센터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061-283-7535
74	전남	여수시	인력센터	여수새일센터	여수인력개발센터	061-641-0050
75	전남	순천시	인력센터	순천새일센터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061-744-9704
76	전남	광양시	여성회관	광양새일센터	광양시청 여성문화센터	061-797-2347
77	경북	구미시	인력센터	구미새일센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054-456-9494
78	경북	김천시	여성회관	김천새일센터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	054-430-1179
79	경북	포항시	인력센터	포항새일센터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	054-278-4410
80	경북	칠곡군	인력센터	칠곡새일센터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054-973-7016
81	경북	경산시	여성회관	경산새일센터	경산시 여성회관	053-811-4384
82	경남	김해시	인력센터	김해새일센터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055-331-4335
83	경남	진주시	대학	진주새일센터	경남도립대학 현장인력양성센터	055-757-6061
84	경남	마산시	인력센터	마산새일센터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055-232-5285
85	경남	창원시	인력센터	창원새일센터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055-283-3221
86	경남	창원시	새일본부	경남새일센터(본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1588-3475
87	경남	거제시	여성회관	거제새일센터	거제시 여성회관	055-636-2019
88	경남	양산시	기타	양산새일센터	양산YWCA	055-367-1144
89	제주	제주시	인력센터	제주새일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064-753-8090
90	제주	서귀포시	기타	서귀포새일센터	서귀포YWCA	064-762-1400

부록 4: 새일센터별 취업 현황

지역	지역	규모	새일센터수	여성취업자수 (30~54세)	새일센터이용 취업자수
서울	서울	대도시	20	1,280,506	9,419
부산	부산	대도시	7	424,177	2,992
대구	대구	대도시	3	322,581	2,159
인천	인천	대도시	5	327,457	3,195
광주	광주	대도시	5	179,943	1,827
대전	대전	대도시	2	182,054	635
울산	울산	대도시	2	123,949	1,534
경기	경기남	중소도시	10	743,180	4,196
경기	경기북	중소도시	2	171,280	4,671
강원	강릉	중소도시	1	27,955	101
강원	동해	중소도시	1	9,992	259
강원	원주	중소도시	1	34,199	284
강원	춘천	중소도시	1	26,674	131
충남	논산	중소도시	1	12,122	168
충남	당진	농어촌	1	12,085	65
충남	보령	중소도시	1	10,151	461
충남	천안	중소도시	1	66,508	417
충북	영동	농어촌	1	6,037	183
충북	제천	중소도시	1	15,649	524
충북	청원	농어촌	2	15,494	1,809
충북	청주	중소도시	1	87,848	276
충북	충주	중소도시	1	27,091	199
경남	거제	중소도시	1	19,041	247
경남	김해	중소도시	1	67,888	443

지역	지역	규모	새일센터수	여성취업자수 (30~54세)	새일센터이용 취업자수
경남	마산+창원+진해	중소도시	4	121,721	3,085
경남	양산	중소도시	1	27,241	120
경남	진주	중소도시	1	47,518	508
경북	경산	중소도시	2	30,433	1,404
경북	구미	중소도시	1	54,575	431
경북	김천	중소도시	1	14,781	287
경북	칠곡	농어촌	1	11,556	217
경북	포항	중소도시	1	54,033	390
전남	광양	중소도시	1	12,864	146
전남	목포	중소도시	1	23,592	502
전남	순천	중소도시	1	30,564	268
전남	여수	중소도시	1	25,924	396
전북	군산	중소도시	1	23,593	134
전북	남원	중소도시	1	10,610	308
전북	익산	중소도시	1	31,894	539
전북	전주	중소도시	3	76,301	1,265
전북	정읍	중소도시	1	11,215	564
제주	서귀포	중소도시	1	16,137	162
제주	제주	중소도시	1	56,754	304

참고 문헌

- 강만철 외. 2002. 「농어촌 교육 진흥 방안 연구」. 전남교육연구소.
- 강태중. 2007. “학업성취도의 지역차이 분석: 인구이동의 영향을 고려한 시도”. 「한국청소년연구」, 18(2): 315-344.
- 강혜정. 2008.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강혜정. 2009. 「농촌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강혜정·마상진. 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0. “중앙정부-지자체간 고용서비스 연계·협력방안 합의 도출”. 보도자료(2010.03.25일자).
-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연구원. 2010. 「사회적기업 개요집 501」.
-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2010. “공공고용서비스 확충 방안(노동부)”. 회의자료.
- 고정숙 외. 2001.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실태 및 개선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 30차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 관계부처 합동. 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
- 관계부처 합동. 201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11~’15): 2011년도 시행계획」.
- 교육과학기술부. 2008. 「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 2009a.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종합적인 육성방안 추진” 보도자료(2009.8.26.).
- 교육과학기술부. 2009b.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공모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2. 「농어촌 교육발전 방안 수립·추진안」.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회의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8. '07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7.15.).
- 김경근. 2007. 사회양극화와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의 이론적 철학적 기반 정립을 위한 세미나 발표논문집. 35-63.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근. 2008. 방과후 참여 결정요인. 제2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pp. 505-5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성. 200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양적 질적 평가지표개발 연구(수탁연구 CR 2008-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홍 외. 2006. 지역네트워킹과 방과후학교 활성화.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병률 등. 2011. “농어촌 고용실태와 인력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복규 외. 2006. 「농촌여성의 소규모사업 지원체계와 활성화전략연구」. 농촌진흥청.
- 김복규. 2005.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분석”. 「사회과학논총」 제24권 1호. p.29-54.
- 김석우·한홍련. 2008. 중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 교육평가연구, 21(1),
- 김성식 외. 2008.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성과 평가 연구(CR 2008-2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수동. 2004. 국내외 방과후 교육활동 사례 수집 및 분석 유형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수동. 2007. 방과후학교의 장애요인 및 극복 과정, 전략과 정책 연구 과제 탐색. 열린교육연구 15(3), 127-150.
- 김승권·조애저·민현주. 2010.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택·신현구. 2004.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옥 외. 2001.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농림부.
-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김이선. 2003.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김원석 외. 2005.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워크숍 강사 매뉴얼」. 농촌진흥청.
- 김원석 외. 2007. “농촌여성 창업자 특성과 사업성과: 농촌여성일감갓기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4권 1호. p.93-116.
- 김이선 외. 2008.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종숙·김미경. 2007. 「'07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현황 점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신선미·오은진·강민정·주부현·성상현·최현수. 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화 외. 2009.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실태분석과 운영모델개발”. 「농업교육과 인

- 적자원개발」 제41권 4호. p.63-91.
- 김태홍·오은진·강민정. 2005.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가지표개발 및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철 외. 2007. 방과후학교 및 EBS 수능방송의 정책 효과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혜원. 2010.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홍원 외. 2007. 2006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CR 2007-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 2008. 2007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CR 2008-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 2008. 2008 방과후학교 성과 분석 연구(CR 2008-6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2011.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의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2011 교육정책 네트워크.
- 나민주. 2008. 「교장 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지방교육연구센터.
- 농림부 여성농업인육성 2차 5개년 계획 용역팀. 2005.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시안”, 여성농민 정책토론회 자료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농림부. 2004.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림부. 200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및 2005년 시행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2011. 「제3차(‘11~’15)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2010.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모델 사례집: 미래를 담은 농어촌 희망 프로젝트」.
- 농촌진흥청. 2003~2007. 「농촌생활지표조사」.
- 농촌진흥청. 2009. 「2009 농촌진흥사업연보」.
- 마상진. 2010. 「농촌 발전과 농촌 학교의 역할」. 농업전망 2010.
- 민무숙·오은진·이시균. 2010.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서비스 발전방안」.
- 박대식 외. 2004. 「농산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박주영.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 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2008. 「해외 여성농업인의 지위현황과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방안: 공동경영주의 개념 및 기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 박애린. 2009. 방과후학교 사업평가-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박재규. 2009. “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 「여성연구」 제2호 통권 제77호. pp.109-141.
- 박찬임·박성재·김화순·김종일. 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변종임 등. 2009.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및 활성화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송미령·김광석·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원규. 2010. “지역먹거리운동과 ‘지역’의 중요성”,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 양병우 외. 2005.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방안연구」. 전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1. 「2011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여성가족부·지역재단. 2011.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설명회 자료.
- 오미란. 2010. “여성친화적 농어촌사회적기업의 가능성과 도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 오성욱·최석현. 2011. “MBO 성과관리에 기반을 둔 고용센터 평가모델 도입에 대한 소고”. 고용이슈 2011년 11월호 제4권 제6호.
- 오은진 외. 20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오은진·박성정·민현주·김난주·송창용·김지현.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이택면·장미혜. 2006.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현황점검 및 발전전략 수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윤준상. 2007. “여성농업인의 요구분석을 통한 전문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9권 2호 p.79-114.
- 이동필 외. 2008.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체계 개편 방안」. 농림수산식품부.
- 이동필. 2008.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방안”. 농어촌 정주여건개선과 산업활성화 방안 워크숍 자료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한국농

- 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2009.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실태와 활성화 전략”. 농업인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승형. 2004.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지원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영석. 2003. “농촌일감맞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농촌일감맞기사업 평가회 자료집. 농촌진흥청.
- 이영세 외. 2004.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부
- 임연기·이태상·권동택. 2007. 「도·농간 교육격차 분석연구」. 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 임연기. 2006. 한국 농촌교육정책의 변천과 그 특성 및 과제. 「교육행정학연구」244: 27-50.
- 임연기. 2007a. “Issues and Tasks of Rural Education in Korea.” 「교육행정학연구」 25(4): 565-584.
- 임연기. 2007b. 한국 농촌교육의 문제와 정책적 함의. NURI-TEIC.
- 임연기. 2009. “한국 농산어촌 교육 육성 방향과 과제.” 「제3회 우리 농어업 희망찾기 연속토론회 자료집」. 농어업희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 임연기. 2009. 「농산어촌 학교운영 우수사례」. 교육과학기술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2011. “2011년 여성농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 정기환. 1997.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최경환.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방안」. 농림부.
- 정미미. 2008.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 정영태. 2009.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모색」. 제주발전연구원.
- 정지웅 외. 2002.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 연구」.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2-14.
- 조덕주 외. 2008.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시범 운영 실태분석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CR2008-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주은. 201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최경환·마상진. 2009. 농촌학교 활성화 실태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윤지 외. 2003.6.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도우미 제도와 여성농업인센터에 관한 평가와 전망”. 2003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06~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2008.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 통계청. 2010. 「사교육비 실태조사」.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2000~2008. 「교육통계연보」.
- 한국교육개발원. 2006~2007. 한국교육종단연구자료.
- 한만길 외. 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 Arnold, M. 2004. *Guiding rural schools and districts: A research agenda*. McREL
- Arnold, M. L. 2000. *Rural schools: Diverse needs call for flexible policies* [policy brief]. Mid-continent Research for Education and Learning(McREL).
- Arnold, M. L., Gaddy, B. B., & Dean, C. B. 2004. *A look at the condition of rural education research: Setting a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McREL.
- Barely, Z. A. & Beesely A. D. 2007. "Rural School Success: What Can We Learn?"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22(1): 1-16.
- Beesely, A. D. & Barley, Z. A. 2005. *Rural schools that beat the odds: Four case studies*. McREL.
- Carter, G. Lee, L, & Sweatt O. 2009. *Lesson Learned From Rural Schools*.
- Masumoto, M, & Brown-Welty, S. 2009. "Case Study of Leadership Practices and School-Community Interrelationship in High-Performing, High-Poverty, Rural California High Schools"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24(1): 1-18.